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통일연구원)

박종철(")

이우영(")

전성훈(")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2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7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 서 론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근거하여 3단계 통일과정에 따른 남북한 각 분야의 통일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1차년도에 「화해·협력단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2차년도에는 「남북연합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그리고 3차년도에는 ‘실질적 통합단계’를 가정하여 이 과정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다른 분야와는 달리 3차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종교가 남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일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남북간의 종교협력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남북한 사이의 종교교류는 사회문화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활발한 편이지만 아직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종교집회와 세미나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공동행사를 추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남한의 종교인이 북한을 방문하여 연합활동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북한의 종교인이 남한에 방문한 경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실질적 통합단계를 상징하여 남북한 종교교류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연합 이후 남북한관계가 실질적인 통합단계에 들어선 상황을 가정하여 종교분야의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되,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 수반되는 남북협력 내용도 포함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현재의 남북한의 종교실태와 지금까지의 남북간 종교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전개될 종교상황을 예측한 후, 이에 근거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종교 교류·협력의 제도화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종교정책과 남북한 종교실태

1.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

북한의 종교정책은 ① 종교의 배척(해방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② 종교의 억압과 반종교선전(한국전쟁부터 1972년까지), ③ 제도종교의 허용(1972년부터 1988년까지), ④ 공식종교의 인정(1988년 이후) 등의 네 시기로 변화해왔다.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 존재했던 150만 명의 천도교, 37만 5천 명의 불교, 20만 명의 개신교, 5만 7천 명의 천주교 등 종교인구는 북한전체인구의 22.2%였다. 1945년 분단이후 북한지역에 들어선 사회주의 정권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고 종교억압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토지개혁과 같은 반제반봉건 개혁조치의 장애물로 간주된 종교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기독교와 불교를 배척하는 대신, 천도교는 상대적으로 용인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까지는 북한의 종교활동은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종교정책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진다. 전쟁이후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상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반종교에 대한 집중적인 사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종교지형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남한 기독교인들과의 통일전선 구축 차원에서 북한은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 시기의 북한의 종교활동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소위 공식종교 내지 체제협력적 종교가 태동된다.

북한의 종교정책은 1988년을 고비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1988년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에 기독교회가 있음을 과시한다. 불교계도 1988년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등의 중요 절기의 기념 행사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시작된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방북활동 및 체제의 내부구조적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탈냉전 이후 북한종교정책의 변화는 92년 4월 개정된 헌법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교관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에 대해 북한은 “종교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종교에 대한 김정일의 주체적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대남전략과 대미관계 개선에 있어서 종교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다.

2. 남북한의 종교실태

남한불교는 대표 종단인 조계종만 보더라도 25개 교구에 820개 이상의 사찰이 소속되어 있다. 승려의 수도 조계종의 승적 보유자만 1만 8천명에 달하고 태고종을 비롯해서 50여 개의 군소 종단에 소속된 스님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불교계는 신도의 숫자가 남한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북한의 불교는 현재 사찰수 60여 개, 승려수는 300여 명, 신도수 1만여 명에 불과하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불교신도를 1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석탄일과 같은 큰 기념일에는 절을 찾는 이들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1989년에는 양강도 증흥사에 북한 최초의 승려교육기관인 불교학원(91년 광법사로 이전)이 건립되었다. 북한의 사찰은 현재 종교적 의미와 기능은 상실한 채 다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고, 법회도 형식적인 것이어서 신자들의 신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남한 개신교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유래 없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4만여 교회에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개신교는 봉수교회, 칠골교회와 같이 예배당을 갖춘 교회와 예배당이 없이 신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소로 구분된다. 특히 가정예배소는 북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북한측에서는 북한에 약 520여 곳의 예배처소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 1만 명이 있는데 이들 중 약 6천명이 10-15명으로 구성된 가정예배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교회 이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신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의 천주교는 주교 22명, 신부 2,800명, 수도자 8,139명, 그리고 총 신자는 384만 5천여명으로 전체 인구 4천 700만의 약 8.2%에 이른다. 반면, 북한은 1988년에 건축된 장충성당과 3천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교황청은 북한지역에 교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카톨릭교협회를 천주교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천주교회는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국가교회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과거 천주교 신자 가정을 대상으로 잠재적 신자를 파악하여 전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족종교로 간주되고 있는 천도교는 북한 주민에게 종교본연의 활동보다는 정당단체로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편이다. 해방당시 천도교는 신도 2백80여만 명을 가진 북한에서 가장 큰 종교세력이었으며 초기 북한 집권세력과는 상당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천도교는 북한의 사회 체제 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종교이다. 현재 1만 3천 5백여 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으며, 100석 규모의 중앙교당이 있으며, 전국에 800개소의 전교실이 가정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3. 남북한 종교의 이질화 실상

남북한 종교의 이질화 현상은 심각하다. 북한당국의 종교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이면서 종교 자체에 대해 무조건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모순도 갖고 있다. 그들은 종교가 무조건 사람을 홀리고 마비시키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종교인들이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북한의 종교는 개인 혹은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처소예배를 기본적인 예배 형태로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종교에 대한 주민들의 보편적 적대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종

교는 교류를 통해 접하게 되는 외부의 종교 양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 안에서 종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전도의 수단이 제한되어있다는 상황과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데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남북한 종교교류의 현황과 특징

1. 남북한 종교교류의 전개

1989년 6월 이후 2001년 12월까지 남북한 종교교류는 신청 390건(1,889명), 승인 334건(1,738명), 성사 144건(1,079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종교교류는 전반적인 남북교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1998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1년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종교분야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1995년에는 북한의 수재와 관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교교류가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반적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종교교류도 위축되었다.

종교분야의 직접적인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까지 총 47건, 232명이다. 89-94년 3건(3명), 95년 2건(2명), 97년 3건(4명), 98년 10건(51명), 99년 9건(39명), 2000년 9건(47명), 2001년 11건(86명)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97년까지 매년 한 두건에 불과하던 북한방문이 98년 10건으로 늘어났으며 종교계의 북한방문은 한층 빈번해졌다. 남북종교의 교류는 제3국 공동회의 중심의 접촉위주에서 북한내에서의 연합종교행사, 북한종교실태 조사 등 순수 종교적 목적의 방북이 증대하였다. 물론 종교교류 목적의 방북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지만, 남북종교는 점차 순수 종교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

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1996년 6월 북한동포 돕기운동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개 종단과 시민단체, 학계를 망라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서로돕기운동본부」는 북한식량문제 국제회의를 개최(97.3)하고 감자 2천톤과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북지원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도 추진중이다. 또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96년 8월 ‘북녘형제의 국수나누기 운동’을 시작하여 3만여 회원에 5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적십자에 전달하였다. 불교계는 24개 종단 연합기구인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와 조계종이 적십자를 통해 1억6천만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2. 종교교류 · 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북한은 폐쇄적이며 종교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체제의 속성상 대폭적인 종교교류를 추진하는데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교류 협력을 통해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짐으로써 개방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종교교류의 국내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그동안 손상된 국가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는데 신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직면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남한의 종교단체들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종교계가 대북쌀지원 문제로 마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동시에 기독교, 카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로 구성된 ‘범종단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범종추)에 쌀을 포함한 수재지원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국정부와 종교계간의 마찰을 가능한 증대시키고 있다.

3. 남북한 종교교류의 특징 및 문제점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이후 남북한 종교

교류는 특별히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남북한은 그동안 종교교류를 통해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대북선교의 가능성과 방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었다. 남북한 종교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일과정에서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타영역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이다. 통일을 국토가 하나되고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것뿐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면 과거부터 남북한간에 문화적 동화를 이룰 수 있는 종교교류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종교교류는 교류가 활발한 만큼 여러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문제점으로는 첫째, 남북간의 종교교류가 지나치게 통일논의 위주의 교류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과 종교교류가 다양한 종교단체들에 의해 여러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들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원주의 민주사회에서 종교현실도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북선교의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교과주의적 분열상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남북종교교류는 상호 교류가 아니라 남한측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지원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넷째, 남북종교교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IV.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한 종교상황의 전망

1. 실질적 통합단계와 북한 종교지형의 확대

남북관계가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남북한의 종교상황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특히 북한사회 내의 종교지형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사회의 전반적 변화의 속도와 범위, 수준에 따라 북한의 종교지형도 변화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고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면 북

한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주민들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종교활동의 공간도 넓어질 것이다.

남북관계가 실질적 통합단계로 발전하려면 북한이 '종교탄압국'이라는 누명을 벗고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종교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개방은 북한사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개선과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종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의 종교지형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세계종교사를 통해 볼 때 종교는 국교 체제 → 준국교형 공인종교 → 통제형 공인종교 → 다종교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행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의 종교지형도 이러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전통종교가 국가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상당한 규모의 신자를 기반으로 활발한 종교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의 종교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종교지형은 지금보다는 훨씬 확대될 것이다.

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종교교류 발전

화해협력단계에서 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남북한 직접교류방식보다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방식으로 진행되며,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간 직접교류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이다. 실질적인 통일단계에 이르면 남북한의 종교는 각 종단별로 단일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종단은 남북종교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단계로 1종단 1체제 1행정기구의 통합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발족할 단일종단조직은 각 종단별로 남북한 종교의 행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통합기구의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행정적으로 실천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통합기구는 인사, 포교, 사회복지, 사찰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

다. 또한 통합기구를 법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법령제정이 필요하다. 통합기구의 법령에는 교단이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교단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복지사업 활성화 등을 중요한 임무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종교교류는 단순한 인적교류나 종교상징물의 교환과 같은 외형적 교류를 넘어서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영성의 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간의 사회적 이질성은 정치통합이나 경제통합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사회간의 동질성 증대와 통합과정은 장기적·단계적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정적 통제와 긍정적 참여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3. 종교별 상황전개의 특징

남북한 불교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반세기간의 격리로 야기된 남북한 승려와 신도들의 이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남쪽의 불자들이 북한의 유명 사찰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고, 북한의 사찰은 남한의 불교 의식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남북한 불교의식도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등 불교계의 주요 행사일에는 공동 법요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의 법회를 동시 생중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의 경우 남북한 교회의 협력이 진전되고 확대되면 가장 먼저 외형적으로 교회건축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개신교 각 교파가 준비하고 있는 ‘북한교회재건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각 교단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북한의 각 지역별로 교단을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만은 교파를 초월하여 단일한 교단을 형성하도록 배려할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각 지역에 과거의 교회를 복원하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신의주 지역은 개방된 행정특구라는 잇점 때문에 교회건립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선교활동도 다른 지역보다 왕성하게 전개될 것이다.

천주교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은 남한측의 종교적 관할권 인정으로 인한 종속을 우려하여 남한 교구장의 북한지역 관할권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이 교황청과의 직접적인 관계 수립을 통해서 천주교의 교계(hierarchy)를 확립할 수도 있다. 또 평양 교구가 수립되기 이전에 수도회들이 평양에 수도회 지부로서 「면속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수도회는 교육, 의료사업, 출판사업 등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으며, 종교적 의식도 행할 수 있다. 천주교의 사제 및 신자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다원화되며, 정례화될 것이다.

V.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의 제도화 방안

1. 통일지향적 종교문화 창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이 종교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에 통일지향적 종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남북한이 통일지향적 종교문화를 효율적으로 형성해 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에 통일지향적 종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종교인들이 통일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통일운동과 종교교류에 참여하도록 종교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 통일교육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냉전시대의 논리를 갖고 적대적 개념을 주입시켰던 것은 통일시대의 화합적, 상대 인정적 관점을 회향시켜야 한다. 특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종교 평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남북종교 교류·협력은 민족화해의 물꼬를 트는 작업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계층구조에서 중산층 이상은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상류층은 한국전쟁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남북간에 가로

놓인 적대감정, 복수심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종교의 화해와 교류는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동포의 경제적 삶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북경제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미움과 적개심으로 쌓인 분단의 벽을 허물고 화해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은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류협력과 제도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해소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남한사회에서 제기되는 ‘북한퍼주기’, 즉 왜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퍼주기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과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가 등의 의문점들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 하는데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지향적인 종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각 종교의 교리와 신앙내용에 대해 남북한의 각 종단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종교활동에서 물질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삶의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이야말로 종교 본연의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교계는 종교 본연의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 교류협력에 임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종교교류 진행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제3국을 떠돌거나 한국으로 들어 온 탈북자들을 돕는 문제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북한체제를 탈출해 온 탈북자들이야말로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의 선봉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희망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반세기간 국제사회와 격리되어 암흑 속에서 헤매던 이들에게 종교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 역시 통일 지향적 종교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2. 종교교류·협력 제도화의 원칙과 방향

종교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남북한 종교교류 협력은 분단된 사회체제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민족통합을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종교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화해와 포용을 목표로 하는 종교기관이 먼저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근거하여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종교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넷째, 종교교류 제도화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관련조항의 이행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제도화의 원칙으로는 첫째, 남한 종교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둘째, 인적교류를 통한 인간적 이해에 중점을 두며, 셋째, 가급적 북한의 종교기관을 파트너로 한 비정치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3. 종교교류·협력 제도화 추진 전략

제도화 추진의 수단은 (1) 물질적 인센티브와 (2) 민족전통 및 문화자원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이 외화벌이 및 대북지원성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 이를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종교교류 과정에서 ‘민족대단결’을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므로 남한의 종교기관과 단체는 북한의 이러한 접근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와 민족문화, 역사, 주체사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남한 각 기관과 단체의 입장을 사전에 정리하여 민족주의 담론을 충분히 활용하는 제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종교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화해협력단계를 거치면서 북한종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종교계 상호간의 화해와 협력이 실현되

고, 남북연합단계를 거치면서 종교지도자 수준의 접촉과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 다른 분야와 남북교류협력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남북한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제도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단계에서 남북 종교교류는 사회 여러 분야와의 균형과 보조를 맞추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쌓은 후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선 (1) 인적 왕래, 종교행사 등 시범적인 남북화합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정례화하고, (2) 시범적 교류와 협력사업이 점차 확대되면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교류가 법적인 틀에서 진행되면 이러한 교류사업이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교문화협정’을 체결하여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원칙 하에 종교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1) 범종교간 협의체 구성, (2) 정부의 정책적 지원, (3) 북한 종교단체들의 입지 고려, (4) 인도적 지원과 포교와의 신중한 연계, (5) 종교교류협력 내용의 다변화·체계화, (6) 종교와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 정리, (7)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적극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4. 종교교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종교교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는 (1) 남북종교인 교차 방문 추진, (2) 종교문화 및 종교문화재의 교류확대, (3) 화해와 용서 대집회 등을 추진한다. 3.1절과 6.25, 광복절 등 국가절기와 각 종교의 절기행사에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범종단 합동집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공동집회를 평양이나 새로 들어선 신의주 행정특구, 금강산 등에서 부흥집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4) 국내유민과 탈북자들에 대한 공동 지원사업, (5) 종교건물 복원 및 개척사업, (6) 학생교환 및 학술교류, (7)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시·군·구역별로 자력갱생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프로젝트를 북한 전역을 200여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추진하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각 교단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식량지원과 더불어 북한선교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도 있다.

VI. 맺음말

종교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한 체제의 이질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통일과정에서 남한에는 여러 종파와 교파가 있어 북한의 민족주의적 혹은 주체사상적 교리가 첨가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상과 종교가 부재한 북한에는 다원적 종교상황은 큰 충격과 혼란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바로 종교교류이다.

종교교류는 또한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 이후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아노미 상태에 처하게 될 북한주민들에게 삶의 의미와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종교별로 주체사상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배격 또는 흡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종교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되 다원적 종교사회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전달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회단체에 불과하고, 남북한 종교교류도 북한의 의도대로 통일운동의 도구적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종교는 인도주의적 교류·협력과 남북한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원동력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종교인들, 특히 지도층인 성직자와 교역자들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이 강력히 요청된다. 남북한의 종교인들은 인도주의적 협력의 길을 마련하면서 더불어 살아가

는 민족화합과 화해의 공간을 넓히는데 아낌없는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제기와 목적	1
2. 연구방법과 범위	5
II. 북한의 종교정책과 남북한 종교실태	7
1.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	7
가. 냉전기 북한 종교정책의 전개	7
나. 탈냉전기 북한종교정책의 변화	23
2. 남북한의 종교실태	30
가. 불교	31
나. 개신교	39
다. 천주교	46
라. 민족종교	50
3. 남북한 종교의 이질화 실상	52
III. 남북한 종교교류의 현황과 특징	58
1. 남북한 종교교류의 전개	58
가. 불교교류	62
나. 개신교의 남북교류	68
다. 천주교의 남북교류	80
라. 민족종교의 남북교류	85
2. 종교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87
3. 남북한 종교교류의 특징 및 문제점	89

IV.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한 종교상황의 전망 93

- 1. 실질적 통합단계와 북한 종교지형의 확대 93
- 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종교교류 발전 102
- 3. 종교별 상황전개의 특징 104
 - 가. 불교 상황전개 104
 - 나. 개신교 상황전개 106
 - 다. 천주교 상황전개 108

V.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의 제도화 방안 112

- 1. 통일지향적 종교문화 창출 112
 - 가. 평화통일 종교교육의 확대 112
 - 나. 민족화해를 위한 종교협력의 강조 114
 - 다. 북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고취 116
 - 라. 교리와 신앙의 이해 증진 117
 - 마. 탈북자에 대한 관심 제고 118
- 2. 종교교류·협력 제도화의 원칙과 방향 118
 - 가. 제도화의 기본방향 118
 - 나. 제도화의 원칙 122
- 3. 종교교류·협력 제도화 추진 전략 125
 - 가. 제도화 추진의 수단 125
 - 나. 점진적·단계별 제도화 추진 127
 - 다. 제도화 추진의 구체적 전략 131
- 4. 종교교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139

VI. 맺음말 154

참고문헌 158

표 차례

<표 1> 남북 종교교류 현황 (1989.6. ~2001.12, 접촉현황)	59
<표 2> 국내외 대북지원 현황	60
<표 3> 서울 대교구의 대북지원 내역	83
<표 4> 춘천 교구의 대북지원 내역	84

I. 서 론

1. 문제제기와 목적

한반도의 이데올로기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북한의 종교가 매우 대조적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당시에 왕성하게 성장하던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각 종교는 57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약화되었다. 반면 남한에서는 해방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종교인구와 종교활동에 있어서 왕성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대부분의 북한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남북간에 실로 엄청난 변화와 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달라진 남북의 종교현실은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탈냉전시대를 사는 남북한의 모든 종교인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신앙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민족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소멸되고 민족을 단위로 통합과 분열을 거듭해온 탈냉전 10여 년을 보내면서 남북한은 탈냉전의 흐름에 매우 더디게 적응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남북한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공존과 민족번영을 희망하고 있다.

분단 55년만에 결실을 맺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남북간에 직항로를 연결하여 서울과 평양을 순식간에 왕래하는 항공로를 개척하였고 그 길을 따라 수백명 규모의 남북예술단과 이산가족들, 민간단체가 왕래하였다. 이렇게 열린 길을 통해 이산가족상봉과 경제교류, 도로와 철도 연결, 군사실무회담, 예술단 공연 및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 통일을 향한 민족대변혁의 역사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대변혁의 새 역사는 남북이 한 민족으로서의 역사적 정통성

2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이루어 가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는데서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국가적 통합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통하여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경제적인 관계 개선이나 군사적인 관계 개선 또는 정치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북한을 개혁하고 개방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한편 남한의 친민자본주의를 기반으로 굳혀진 지배 구조를 개혁하여 남북이 다함께 민족적인 공존과 상생의 신념을 나눌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남북민족의 공존과 상생, 화해와 화합의 가치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지대하다. 사회학자 파슨즈(T. Parsons)에 의하면 종교는 사회성원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종교는 전체 사회체계로 볼 때 문화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그 사회의 궁극적인 존재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통합화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파슨즈는 이를 잠재유형유지 기능이라 칭하였으며, 이는 사회성원들에게 동기를 제공하고 그들을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의 가치규정을 유지하고 후원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긴장을 효과적·건설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종교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사회현상에 대해 사회체계가 필요한 질서, 역할, 규범 등을 제시함과 아울러 성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일탈행위와 부정적인 행위를 완화시켜 사회전반에 걸쳐 통합의 정도를 높인다. 종교가 사회체계에 대한 일탈행위를 견제하여 통합기능을 수행할 경우, 그것은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과 동조적인 행위를 촉진시키는데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즉 종교는 구원이나 수행에 적합한 행동방향과 생활양식을 갖도록 독려하면서 질서의 개념 및 윤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 있고 효과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 모두 사회통합화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대중들이 종교를 수용한 뒤 회심과 변화된 삶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생활태도를 보이게 됨에 따라 사회적 결속은 더욱 단단해지고 살아 움직이는 사회체계로 구조화된다. 사회제도와 규범은 그 자체로서 합법화되기

보다는 종교와 연관되어야 충분히 합법화된다고 볼 때 사회에서 종교의 사회통합적 역할은 크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IMF 경제위기가 가져다준 충격보다 몇 배나 더 큰 위력으로 우리사회를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칠 대 사변이 될 것이다. 일제식민통치와 분단, 그리고 전쟁이 20세기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면 통일은 21세기 우리민족 운명에 최대의 위기를 몰고 올 것이다. 향후 탈사회주의 국제정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정보화와 민주화는 북한의 변화를 더 한층 촉진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민족의 교류는 탈냉전 시기의 국제정세 흐름이며 우리가 준비를 하든, 하지 않든 한반도 통일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30-40년간의 통일과정은 남북한 국민에게 냉전의 동굴에서 나와 통일의 광야로 나가는 시련의 시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 과정에는 한국전쟁의 상처와 적대감, 분단의 장기화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군사적 갈등과 긴장, 체제와 제도의 차이, 적대의식과 이질적 가치관은 통일과정에서 한반도에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몰고 올 것이다.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쌓인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좌우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는 정치적 혼란이 오게된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북한국민의 소득수준이 남한의 최하층 이하로 떨어진 현 상태가 몇 년간 더 지속된다면 남북한간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남북한의 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 속에서 남북한 국민들은 엄청난 당혹감과 두려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남북한의 종교인들은 한반도에 도래할 신질서와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사회갈등을 내다보면서 민족화해와 종교협력의 대전략을 가지고 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겪게 될 여러 문제들, 즉 가치관 혼란, 빈부격차, 전쟁의 상처로 인한 감정대결 등으로 인해 남북한 국민들은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갈구하게 될 것인데, 남한의 종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신적, 심리적 지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

4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지고 화해와 협력, 교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동안 남한은 북한과 비교적 폭넓은 종교교류와 접촉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남북종교교류는 활성화되었다. ‘고난의 행군’을 전개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국에 처한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식량, 의료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호응한 많은 국제구호 NGO 중 종교관련 NGO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과의 종교적인 접촉이 대폭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남한의 대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북한과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활동은 특히 인간의 도덕성과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종교계의 적극적인 북한수재 지원활동과 맞물리면서 남북종교교류가 한단계 발전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남북한간의 종교교류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해외거주 종교인들의 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분단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종교교류와 협력의 과정은 가치 그 기간의 남북관계의 축소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세기를 조금 넘는 분단의 기간 중 전쟁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극과 극을 넘나들며 남북의 관계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종교분야에서도 종교인들의 월남과 이데올로기적 차이에 편승한 남북종교인의 대립이 그 어느 분야보다 더 극심했지만, 이제는 남한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북한 종교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인적 및 물적 협력관계는 어느 우방 못지 않게 심화되고 있다. 그 동안 영향력있는 종교지도자들이 직접 방북하거나 제3국 등에서 북한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실상을 잘 파악하게 되었고,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종교의 존재양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상호관계의 폭과 깊이가 커지면서 남북한의 통합을 운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했고, 이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꾸준히 진행된 국내의 종교교류와 남한 종교지도자들의 방북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민족의 통일과 통합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다. 통일과정에서 종교와 종교인이 담당할 통합적 기능을 고려할 때 종교인들의 체제이해와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일은 민족통합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통일사회를 향한 남북연합의 초석을 놓게 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종교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남북연합’ 이후 남북한이 실질적 통합상태로 발전한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 이후 전개된 북한의 종교정책과 남북간 종교교류의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남북관계가 실질적 통합단계로 진입했을 때 남북한에 전개될 종교상황을 예상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남북한의 종교교류와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실무자 면접조사를 활용한다. 국내 및 해외에서의 남북 종교교류 실태와 종교교류정책에 관한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교류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종파별 대북접촉 실태 및 문제점, 교류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북교류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면담하여 의견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관계가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단계에 들어선 단계에서 남북한이 종교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연구기관들과의 협동연구 형태로 3년에 걸쳐 추진해온 다른 분야와는 달리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 남북간의 종교협력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남북한 사이의 종교교류는 사회문화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활발한 편이지만 아직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종교집회와 세미나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공동행사를 추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남한의 종교인이

6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북한을 방문하여 연합활동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북한의 종교인이 남한에 방문한 경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실질적 통합단계를 상정하여 남북한 종교교류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남북한의 종교실태와 지금까지의 남북간 종교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전개될 종교상황을 예측한 후, 이에 근거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종교 교류·협력의 제도화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II. 북한의 종교정책과 남북한 종교실태

1.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

가. 냉전기 북한 종교정책의 전개

(1) 종교의 배척: 해방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비과학적이며 미신으로 간주하여 개조해야 할 전근대적인 사상적 잔재로 간주한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당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후진국가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였다. …남은 사상잔재인 종교적 편견은 강제로 없앨 수 없다. 오직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제국주의 침략의 전위대, 침병으로 보고 있다.

1945년 분단이후 북한지역에 들어선 사회주의 정권은 종교억압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찍부터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여 종교활동을 적대시하였다. 맑스(Karl Marx)는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세의 행복과 보상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불평등과 불의로 점철된 현실세계의 비인간적인 사회질서를 용인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이념적 맥락에서 북한은 종교를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결국 아편과 같은 것으로 보고 종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가차원의 어용종교조직을 결성하고 기존의 민간종교조직을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바로 종교억압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전쟁을 겪기 전까지 종교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반제반봉건 시기로 제국주의적이거나 봉건적이지 않은 모든 역량을 결집할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가 용인된 때였다. 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에 소련군이 지원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나,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전선 형성의 필요성으로 인해 영향력 있는 종교집단과 연대를 모색하였다. 1947년 2월 출범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유례없이 짧은 기간 동안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등 일제 식민지 잔재 및 전통 봉건적 요소들을 청산하는 개혁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사회주의 정권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신속한 개혁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북한의 혁명주체세력은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초기 북한의 종교활동은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해방 당시 북한에는 상당한 종교인구가 성장하고 있었다. 해방 이전 북한에는 개신교, 천주교 등 서방종교가 남한보다 먼저 전래되었고, 불교, 천도교 등 전통종교도 교세가 성하여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속에 종교의 영향이 깊숙히 미치고 있었다. 천도교도 약 150만명, 불교도 약 37만 5천명, 개신교도 약 20만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명, 총계 약 200만여 명의 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¹⁾ 그 당시 북한인구(916만명)를 기준으로 볼 때, 불교인은 전체인구의 약 5.5%, 천도교인은 약 16.4%, 개신교인은 약 2.2%, 천주교는 약 0.6%로 종교인은 북한 전체인구의 22.2% 수준이었다. 성직자는 승려 732명, 목사 908명, 신부·수녀·수도사 등 262명이고, 교당이나 사찰수는 천도교 교당 99개, 사찰 518개, 교회 약 2,000여개, 천주교 교구 4개 등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²⁾

초기 북한의 종교정책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종교인구가 다수를

- 1)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 149; 강인철, “월남 개신교·천주교의 뿌리,” 『역사비평』 (1992년 여름), p. 109.
- 2) 기독교와 관련하여 해방전 북한지역의 신도수가 30만명을 넘으며 교회수도 3,0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해방이전에 현재의 황해남도 지역에 513개, 평안북도 지역에 452개, 평안남도에 439개, 황해북도 지역에 348개를 포함하여 총 3,022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찬영 편저, 『북한교회 사진명감』 (서울: 총회북한교회재건위원회, 2000), p. 10.

차지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방당시 조직화된 집단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세력이었고 지식층의 집결지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해방 직후 일제의 어용조직이 급속도로 해체 혹은 무력화되고 아직 새로운 대중조직들이 건설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종교세력들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었다.³⁾ 특히 천도교와 서북지역에서 급성장한 기독교 세력은 북한 사회주의 정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종교세력으로 존재하였다.

종교세력을 용인하는 초기 북한의 종교정책은 러시아혁명의 역사적 경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 이후 종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교회와 연합하는 종교용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로 1946.10.12 소련군은 북한으로 진주할 당시 「북조선 주둔 소련 25군사령관 성명서」를 통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을 허가한다”고 선언했다.⁴⁾ 이러한 러시아의 종교용인정책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북한정권은 사회주의 혁명을 최종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종교 세력들이 혁명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종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일성은

1946년 전체 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 하고 전체 공민이 성별, 신앙 및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치경제생활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초기 종교정책이 광범위한 통일전선적 유대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 북한에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의미의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정권과 종교인들과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과 탄압이 진행되었다. 종교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반제반봉건 혁명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서북지역의 개신교 신자들

3)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p. 149.

4) 사와 마사히코, “해방이후 북한지역 기독교: 1945. 8~1950. 6,”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p. 20.

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 부르주아 층으로 계급투쟁적 성격을 띠면서 종교 탄압이 전개되었다.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대변하는 사회주의 정권은 부르주아가 다수인 기독교세력에 대해 탄압의 수위를 높였고 기독교세력은 북한보다는 남한의 체제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북한 정권은 종교차제의 이유를 들어 종교인들을 탄압하기보다는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 경제·사회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종교외적 관점에서 종교를 억압하였다. 다시 말하면,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모든 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특정 종교를 척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같은 시기 농민층을 기반으로 했던 천도교의 교세 확장과 비교하면 이것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사회적 성분에 의한 종교의 핍박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초기 북한의 반제반봉건 개혁으로 불교와 기독교는 큰 타격을 입었다. 불교의 경우, 토지개혁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던 사찰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석왕사의 경우 4천여 정보의 토지를 모두 몰수당했으며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승려는 사찰을 떠나 3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100명 이상의 승려가 거주했던 보현사, 건봉사, 유점사, 귀주사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일정수 이상의 배급을 금지하였는데, 예를 들면, 200여명의 승려들이 있던 석왕사에서는 30명, 그 외의 작은 사찰은 그 규모에 따라 5명 이하에 축소 제한되었다. 한국전쟁 이전 “북조선 불교 총무원 아래 518개의 사찰이 있으며 승려수 732명, 신도수는 375,438명에 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⁵⁾

기독교는 토지개혁 등으로 교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성당, 사찰, 교회의 몰수 소유지는 1만 4,400정보로 전체 몰수토지 100만 정보의 1.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종교인의 토지는 5정보 미만이라도 민족반역자라는 구실하에 우선적으로 박탈되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당시 반혁명계급으로 희생되었던 35만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적지 않게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⁶⁾ 김일성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5) 『조선중앙년감』1950년판.

6) 사와 마사히코, “해방이후 북한지역 기독교,”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

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이며, 토지개혁에 협력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반동적인 장로, 목사로서 땅을 안가졌던 자가 거의 없고 놀고 먹지 않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에게 불평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놈들은 40년전부터 종교를 통하여 조선땅에 자기들의 사상적 영향을 퍼뜨리려고 광분하여 왔으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서 반동적 장로, 목사들을 길러내고 비호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신자들 가운데는 미국을 무조건 숭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동적 목사들은 우리 인민이 똑똑하여지면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가 더욱 곤란해지기 때문에 인민들을 계몽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우리 당을 싫어하며 당의 정책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습니다.⁷⁾

북한지역 천도교는 일제하에서 조국광복회를 통해 후일의 노동당 지도세력과 공고한 유대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혁명지지의 경향이 강했다. 개신교에 비해 조직화의 속도가 느렸지만 큰 탄압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정권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교세가 성장하였다. 1947. 2. 1 천도교북조선총무원이 설치되고 교무조직과는 별도로 서울의 천도교 청우당 본부는 1945년 10월 하순부터 북한지역에 수십개의 군당부를 설치했고 46. 2. 8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을 결성했다. 1947. 6 당원수는 약 40만명, 47년 말에는 60만명으로 늘어났다. 천도교에 대해서 “1946년 2월 1일 천도교 북조선총무원이 창설되었으며 현재 99개소의 시·군 총리원과 그 아래 구·면·리 총리원을 가지고 교인들을 포용하고 있다. 교인들은 자기들의 정당 청우당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종교가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에 의해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종교말살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50년에 채택한 북한의 「형법」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회사], p. 19.

7)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249~250.

규정하고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제257조)고 규정하여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북한에서는 해방당시 기독교는 천도교보다 교세가 약했지만 천도교는 하층 농민에까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천도교에 대해서는 온화정책을 취한 반면, 기독교는 소시민적 중산계급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독교에 대해서는 탄압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48년 3월 1일을 기해 천도교도들이 3.1재현운동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천도교에 대해서도 탄압이 가해졌다. 불교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와 달리 산악불교가 많고 이북의 민중에 충분히 침투할 힘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불교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다른 종교에 비해 손쉬운 상대였던 것으로 보인다.⁸⁾

이 시간 동안 정권수립을 위해서 명분상으로는 종교정책을 허용했지만 토지개혁과 노동정책을 통한 외형적 탄압과 인사와 행정의 간섭을 통한 내부적 회유를 병행한 시기로 특징된다. 종교에 대한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종교를 대남 통일전선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종교억압 및 반종교선전: 한국전쟁부터 1972년까지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종교정책은 완전히 달라진다. 전쟁으로 극심한 물적, 인적 피해를 당한 결과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연관되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상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미군의 무차별적 공습과 반공 종교인들의 행태는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이고 그 앞잡이라는 인상을 일반 주민들에게 남겼고 결과적으로 북한 정부에게 탄압의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전쟁 이후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적 집단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유일지배체제를 굳힌다. 이 시기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종교의 비과학성과 비현실성을 해설하며 종교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처럼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1953년

8) 사와 마사히코, “해방이후 북한지역 기독교,”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 15.

무렵까지 전쟁기간을 통해 북한에서의 종교활동은 본격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기간중 북한군 입대를 피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자유투사들의 은신처로 사용된 사찰을 감시하고 불교 및 기독교 신자를 인민군에 동원하는 등 탄압을 통해 종교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통일전선노선에서 폭력노선으로 바뀌어 종교의 유용성이 사라짐에 따라 종교에 대한 본격적 탄압이 실시된 것이다.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의 종교 현실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차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종교 시설이 철저히 파괴되어 있었고 많은 종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전쟁 중 희생되었으며 미국과 조금의 관련이라도 있는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는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종교에 대한 탄압,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절정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쟁이 끝난 1954년부터 1972년까지는 집중적인 반종교선전의 시기였다. 한국전쟁의 패전책임은 종교인들에게도 물어져서 전쟁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종교인들이 탄압받았다. 특히 사회주의 개혁시기에 해당되는 1954년부터 1958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해방 직후에 실시된 토지개혁의 기초 위에서 실시된 농업집단화와 개인상공업까지를 포함한 전산업국유화를 통해 종교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었다. 사회주의 개혁이 종료되고 1959년 김일성이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라는 지침서를 발표한 이래 일체의 종교행위가 금지되었다. 북한이 반종교 선전을 위해 1959년에 출판한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정하철)라는 책자에 의하면, 종교의 간판을 이용하여 반혁명적인 음모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반체제적인 종교인과 비밀조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1957년 8월의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기독교인 이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인 선거거부 투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반종교에 대한 집중적인 사상투쟁을 전개하였고 북한의 종교지형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1958년 무렵 전후 복구와

집단화가 마무리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적 투쟁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남은 종교인들은 이 기간 동안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종교인들 가운데도 핵심계층에 해당되는 노동자, 빈농, 사무원, 전사자 가족 등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쟁의 영향과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인들을 더 이상 포섭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북한 사회 안에서 종교의 입지가 줄어들었음이 확실하다.

북한당국의 전개한 반종교선전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학신의 일가’(1966년)라고 볼 수 있다. ‘최학신의 일가’는 최학신 목사의 가족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학신목사의 일가족은 기독교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미국사람들을 신뢰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야만적 행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반미주의 투쟁에 나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최학신의 일가’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선교하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영화는 최학신목사를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신앙과 미국에 대한 환상이 결합된 철저한 ‘숭미주의자’로 묘사한다. 이러한 숭미의식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갖게된 사상의식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기독교 신앙생활의 해악성을 폭로한다. 이 영화를 통한 반종교선전의 특징은 ‘미국=기독교’라는 등식을 설정하고 최학신은 미국을 하나님으로 믿고 무조건 숭배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최학신의 일가’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결국 반미주의이며, 반미주의를 통해 반기독교, 반종교적 정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감정은 사상의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최학신목사가 겪는 모든 가정적 비극도 바로 그가 가진 맹목적 숭미주의에 기인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종교선전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모든 사상선전 활동이 그러하듯이 상황을 일방적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극적인 대비효과를 사용한다. 예컨대, 최학신은 자신이 경험적으로 친구관계를 맺어온 미국사람과 신뢰를 중시한다. 미국인들의 야만적 행동을 보면서도 그것이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아니라 특정 미국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간주한다. 최학신은 미국인 킹그스터가 자기의 딸을 살해하는 상황에 이를 때 까지도 미국인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

리지 않는다. 결국 최학신은 미국인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한 후에야 미국인에 대한 기대를 접고 반미주의자가 된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대비시킴으로써 반종교선전의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최학신목사의 아들은 다른 상황을 대변한다. 즉 아들은 미국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맹목적으로 믿는 숭미주의자가 아니라, 미국이 남한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것을 불가피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공미분자’로 묘사된다. 이들은 미국의 만행에 강한 민족적 모욕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남한군의 장교로서 고민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렇지만 같은 민족에 충을 들이대야 하는 극적인 순간에 이르러 공미의 사상적 속박에서 벗어나 반미주의자가 되는 단호한 행동을 선택한다. 결국 미국의 편과 민족의 편으로 양분하고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은 민족반역자로 규정, 반미주의 노선을 취하도록 강렬하게 형상화한다.

반미주의 정서를 고취하기 위해 영화에 등장하는 미국인의 성격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미국인이라고 모두 무자비한 사람들만이 아니며, 각기 자기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무자비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집요하게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침략적 특성을 그려낸다. ‘최학신의 일가’의 내용에 대해 김일성은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영화의 대사와 액션에 대해 꼼꼼히 지적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지적에 따라 수정대본을 다시 올릴 정도였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이와 같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시의 반종교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1969년에 제작된 연극 ‘성황당’은 반종교선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성황당’은 무속신앙과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를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작품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원래 종교와 미신을 믿는 일부 사람을 풍자적으로 조소할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 종교와 미신의 비과학성을 폭로하고 자기 힘을 믿도록 인민을 깨우칠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혁명연

극 《성황당》이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색도 있는 독특한 양상을 가진 작품으로 된것은 종교와 미신의 비과학성을 날기놓고 인민들에게 자주정신을 심어주려는 교양적목적을 세운것과도 관련되어있습니다. 지난날 일제식 민지통치밑에서 갖은 굴욕과 무지몽매한 생활을 강요당하면서도 그것을 타고난 팔자로 여기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오직 《하느님》이나 《신령》만이 자기를 구원해줄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들을 깨우쳐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종교와 미신의 비과학성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자기 힘에 대한 자각을 가지도록 각성시키는것이 중요하였습니다.⁹⁾

1960년 경에 이르러서는 북한 땅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은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기존 종교활동이 거의 모습을 감추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에서 종교활동이 실제로 사라졌다는데 대해 김정일은 1966년 12월 27일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나라에서 종교문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해결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에 19세기 후반기에 미국선교사들에 의하여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전쟁전에 그 신자가 북반부에도 많이 있었는데 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폭격으로 레배당이 다 마사지고 미제의 살인만행에 의하여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었으며 살아남은 신자들도 대동군의 그 목사처럼 각성되어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는 종교를 믿고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종교문제에서 자그마한 것도 제기되는 것이 없습니다.¹⁰⁾

9)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 4. 20),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23~224.

10) 김정일,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6년 12

종교에 대한 북한당국의 박해는 종교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더욱 탄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스스로도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여 낙제시키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을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라고 개탄할 만큼 종교에 대한 박해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전개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¹¹⁾ 김정일은 1966년 12월, 문학예술 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의 담화에서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며칠전에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보시고 이 영화가 우리 나라에서 아직 종교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만든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 나라에는 종교문제가 없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종교가 어떻게 없어졌고 종교인들이 어떻게 개조되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화가 강동군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가 대동군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가 하는 것은 관계없이 목사가 미국놈을 반대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¹²⁾

김일성의 이러한 우려를 통해서 볼 때 당시에 분명히 종교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통한 선전 홍보활동은 북한주민들을 교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말처럼, 영화를 만들기 전에 국가정책에 의해 상당부분 이미 종교활동이 없어

월 27일),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81.

- 11) 안희국, 『낙농대신문』(일본어), 1961. 7. 14; 사와 마사히코, “해방이후 북한지역 기독교,” 김홍후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 21에서 재인용. 신자의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나 여러 소년단체 속에서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힐문당하여 울며 돌아오는 이야기는 아주 흔하였다고 한다.
- 12) 김정일,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 p. 184.

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문제는 사회문제로 남아 있었고, 종교문제로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을 반종교선전물을 통해 교육하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극적인 반종교선전으로 인해 북한의 기독교는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위축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종교의 반동성과 비과학성을 폭로하여 종교의 내적 모순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설복과 교양, 계몽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지식 수준을 제고하고 신문, 서적, 영화, 연극,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의 반동성과 비과학성을 폭로하며, 종교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실천적인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종교의 내적 모순을 스스로 깨닫도록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상층중심의 통일전선 활동으로 종교활동이 전개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 가정예배 형식의 신앙형태가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종교 활동이 정당, 직장, 학교, 근로단체 등 공공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행해졌으며, 공식적인 종교의식은 사라졌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을 제외한 종교단체도 없어졌다. 기독교는 불법화되었고 북한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예배의식이나 종교모임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1972.12 헌법개정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반종교 선전의 자유’(제54조)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3) 제도종교의 허용: 1972년부터 1988년까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종교활동은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듯하다. 60년대 말 반종교선전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1970년대 초부터는 북한에 종교인이 사라졌다고 선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적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이고 저명한 종교인들은 여전히 정부 안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1972년 남북대화가 본격화 된 이후 눈에 띄게 활발한 대외활동을 개시했다. 북한의 종교인들은 국제적인 종교단체에 참가하거나 교류하기 시작했다.¹³⁾

북한에 다시 종교단체가 등장하고 종교활동이 시작된 것은 7·4남북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남북회담과 상호방문이 실시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즉 북한은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였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북한의 종교정책은 남한 종교인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결성 및 활동에 목적을 두었지 종교활동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남한기독교인들의 진보적인 반정부 투쟁과 연대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이 내포되어 있었다. 장준하, 함석헌, 문익환 등 북한 사회의 종교에 대한 통념, 즉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의 첩병이라는 인식과 상충되는 남한의 반체제 종교인들의 소식으로 인한 자극이 그것이다.

이 시기의 북한의 종교활동은 철저히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1972년의 헌법에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기한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반종교 선전이란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정책으로 선교활동이나 포교활동을 합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종교억압정책이다. 북한이 1972년에 이르러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삽입했다는 사실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종교억압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했음을 반영한다. 72년에는 헌법에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하여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전면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국가주도적 종교활성화 정책에 근거하여 가시적인 종교활동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소위 공식종교 내지 체제협력적 종교가 태동된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조직을 강화하고 가입 신자수도 증가하였으며 종교지도자들의 해외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1972년 평양신학원을 재건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편찬하는 등의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신학교의 재건은 그 동안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13)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해방후 북한교회사』, p. 196.

참여한 국가 부주석 강량욱 목사 등 체제협력적인 종교인들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체 신학교 설립을 통해서 체제협력적인 기독교가 자체 내에서 재생산 될 수 있는 기능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정일은 1977년 11월 4일 문화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의 담화에서 종교는 비과학적이며 비주체적이라고 비판한다.

이 명작에는 종교와 미신은 거짓이며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나 《귀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는 사상적 알맹이가 심어져있습니다. 혁명연극 《성황당》에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느님》이나 《귀신》이 아니라 자기자신이며 사람의 힘이 제일이라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혁명연극 《성황당》의 종자의 철학성이 있습니다. 명작의 이 심오한 종자는 《하느님》이나 《귀신》의 힘을 빌어 더 높은 권세와 더 많은 재물을 얻어보려고 미쳐 날뛰는 계급적 원썩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함께 종교와 미신은 허위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힘을 자각하는 마을사람들의 각성과정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¹⁴⁾

이 시기에 국제정세가 미중데탕트 무드로 전환되고 남북관계에서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을 비롯한 종교집단은 활발한 대남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사회주의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인 북한 종교인들의 통일전선사업은 대폭 증대되며 내용도 풍부해진다.¹⁵⁾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강양욱목사는 1972.9 남북한 그리스도인 직접접촉을 제안하였고, 조그련은 조블련과 함께 남한내 민주화 사건과 관련한 비난성명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대남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조그련은 1975년 1월 인도 고타암에서 열린 ACPC총회와 1976년 11월 체코의 부르노에서 개최된 WCPC 정치·경제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국제적 연대할

14) 김정일, “혁명연극 《성황당》을 재현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471~472.

15)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p. 196~208.

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북한당국의 반종교선전은 계속된다. 이 시기의 반종교선전의 특징은 통일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계몽하고 설득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종교를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과 연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북한은 1973년부터 남한의 종교인들이 민주화투쟁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노동신문이나 역사서적에 남한종교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종교인들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취한다. 북한종교인들의 애국적 역할에 대한 찬양의 빈도도 점차 늘어나며 남한종교인들과 전세계 종교인들에 대한 의식적인 언급이 많아졌다. 1976년 당이론가 허중호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빠져있던 종교인들을 혁명의 보조역량에 포함시키고 종교인들과 통일전선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는 남조선의 “상층종교계 인사들 가운데는 하층 신도들과 함께 현 군사파쇼 통치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 시기 남조선에서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은 반파쇼민주화의 정치적 목표를 그 기초로 한다”고 말한다.¹⁶⁾

(4) 공식종교의 인정: 1988년 이후

북한의 종교정책은 1988년을 고비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교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맞게 된다. 개신교의 경우 1988년 평양에 두 개의 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천주교는 이 해 조선기독교도연맹과는 구별된 자신들의 독자적인 조직인 조선천주교인협회를 발족시키고, 평양에 새로 지어진 장충성당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불교계도 1986년 제15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조선불교도연맹이 정식으로 가입했으며, 1988년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등의 중요 절기의 기념 행사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고, 보현사에 보관중인 팔만대장경의 번역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한다.

16)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국통일리론과 남조선혁명」(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pp. 112~113; 양호민, “북한사회주의의 실상,” 『소련 동구 중국 북한』 pp. 210~211.에서 재인용.

북한에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대로서 그 계기는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의 영향이었다. 북한은 이 시기에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 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종교단체신설과 사찰복원·법회 개최, 성당·교회의 건립과 종교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대외선전활동의 일환으로써 주민차원에서의 보편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또한 종교단체들도 포교활동보다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남한의 종교계를 의식한 선전활동이나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내외 성명서 채택, 국제적인 종교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1985년 고향방문단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예배나 미사를 보고, 1988년과 89년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동성당이 건축되고 광범사, 보현사가 재건되어 아주 제한적이고 관제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종교의식을 허용했다. 그리고 구약, 신약성서와 한글 팔만대장경, 반야심경 등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결국 북한은 199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하고, 제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후 북한은 종교인들의 해외활동 및 남한종교인들과의 접촉, 해외동포종교인 및 남한종교인들의 방북 등을 적극 허용하고 노동신문이나 언론 등에서 종교인들의 활동을 보도하는가 하면 나아가서 새로 개정된 『조선말대사전』이나 출판문헌들에서 과거의 극히 적대적이며 노골적인 종교비판을 수정하여 석가탄신일이라든가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북한의 이러한 전향적인 종교정책의 변화는 첫째, 남한종교인 및 해외동포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구축의 의도, 둘째 종교를 믿는 북한주민들이 고령화되어 극소수이고 이미 대다수 청소년 및 장년층들은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 셋째 대외개방 및 해외이미지 개선에 종교의 적극적 활용, 넷째 주체사상과 종교의 친화성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 계속 활성화되던 북한의 종교 활동이 1988년이라는 시점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변화들이 모두 각 종교의 중앙 조직 차원의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북한 정부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보게 한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정황으로 보아서 같은 해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올림픽의 공동 개최 혹은 그 반작용으로서의 1989년의 세계청년학생축전 등을 대비하기 위해 종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외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88년 북한에 영향을 준 다른 사건을 찾는다면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의 방북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기독교인 임수경씨는 천주교인이고 따라서 임수경씨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문규현 신부가 파견되었다. 남한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통일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이들의 마음가짐과 용기는 종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던 북한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기독교에 대해서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후 북한의 변화는 1992년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서 감지된다. 「조선말대사전」에서 미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종교, 불교, 중, 기독교, 성경 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1988년 설립된 종교학과에는 1989년부터 기독교 학과가 신설되었다. 모두 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보다 긍정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나. 탈냉전기 북한종교정책의 변화

북한의 종교정책은 1970년대 말까지 주로 사회주의적 반종교 논리를 근간으로 한 반종교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은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등 각 종교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종교적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대남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민족주의 및 민족대단결 표방 차원에서 천도교와 불교 등에 대해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단군릉이 조성된 1994년에는 천도교를 통해 대종교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또한 북한에 산재해 있는 사찰들이 문화재로서 존재하고 불교정신과 불교문화가 타종교에 비해 뿌리가 깊으며, 타종교에 비해 종교적 활동을 감시하기가 수월하고 호국불교정신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대로 북한의 종교정책은 1988년을 계기로 그 성격이 달라졌다. 종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종교기관에 대한 지원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 때를 기준으로 북한에서는 공인된 종교적 성소, 곧 교회와 성당, 그리고 절에서 종교교유의 의식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1989년 말 현재 개신교 교회가 둘, 천주교 성당은 하나, 그리고 전국에 3백명밖에 안되는 불교 승려들이 있는 50여 개의 사찰일 망정, 각각 전통적인 종교신조를 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인을 얻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 부닥쳤다. 북한은 종교인들을 해외에 순방시키거나 국제종교회의에 참석시켜 북한에도 종교가 있음을 홍보하였으며 반종교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성경번역을 비롯하여 불교경전의 해제집을 출간하고 국내외 종교인의 방북 허용, 사찰의 보수와 교회 및 성당의 건립 등 종교의 존재를 천명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80년대 이후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를 보여준 분명한 근거는 각종 종교단체들의 대외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방후 북한정권의 비호아래 창립된 유명무실한 종교단체들은 한국전쟁후 거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서 북한언론에 그 활동상이 보고되고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해 졌다.

1989년 6월 북한의 종교인협회가 한국 종교협의회와의 종교인 회담을 제안하면서 내세운 의제가 바로 통일과 민족의 화해였다. 북한 종교단체의 모든 공식문서에는 이 주제가 반드시 포함된다. 1981년 처음으로 열린 해외동포 기독교인들과의 모임 역시 그 명칭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간의 대화'였다. 불교행사도 '조국통일기원법회'가 주종을 이룬다.

문학, 예술, 체육 등 모두 사회생활 자체가 곧 정치와 직결되는 전체주의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현상은 정치의 핵심 노동당의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김일성이 제시한 ‘1995년 통일’이라는 단일목표에 대한 종교계로서의 화답인 것이다. 여기에서 대남전략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종교가 이용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종교정책은 통일전선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종교는 체제종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모두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산하에 예속되어 있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구체화하여 종교활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1992년 개정된 헌법 68조에는 종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부분을 삭제하였으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이미 종교건물이 세워졌고 종교의식이 거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통해 북한이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의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 같으면서도 사회주의 체제 유지범위 내에서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은 종래에 지녀왔던 북한의 종교정책이 이전에 비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종교활동이 정치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인 “누구든

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구절 중 ‘누구든지’라는 문구는 1998년 헌법개정시 삭제된 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가 형식적이거나 신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5년에 들어와서는 남한이나 구미각국의 종교단체들과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였다. 95년 6월에는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 등 9명의 대표단이 한달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각종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대남 전략에 있어서 종교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의 증대에 따른 것임은 분명하지만 북한땅에서 종교활동의 허용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기 종교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김정일의 방침에 근거하고 있다. 박승덕박사는 김정일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었지 종교와 종교신자를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¹⁷⁾

김정일의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탈냉전기 북한의 종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의 종교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종교문제에 대하여서도 잘 해설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를 반대한 적이 없

17) 김정일,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p. 189;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주체사상과 기독교』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p. 81에서 재인용.

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종교세력이 약화된 경위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종교세력이 약화된 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국주의자들이 레베당을 폭격하고 종교인들을 살육하였기 때문이라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에 밝혀져 있는대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당에 마음대로 갈수 있지만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고 속죄할 것도 없으니 교회당에 찾아가지 않습니다.¹⁸⁾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종교관도 크게 변화되었다. 박승덕에 따르면 종교에는 나쁜점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김정일의 긍정적인 승인아래 이제 주체사상은, 종교를 ‘전도된 세계관’으로 보았던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관’을 내세운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의 평가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의 종교관은 종교를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단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 위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다시말해 마르크스주의는 ‘객관적인 세계를 형상적으로 반영한 의식형태’, ‘전도된 세계관’, 왜곡된 착취사회의 피상적 반영을 종교의 본질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박승덕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종교가 객관적 세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 주체사상은 종교를 사람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란 객관적 세계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성적 요구’, ‘압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인간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해 나왔다’는 것이 그 본질을 더욱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종교관의 변화는 종교정책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고립된 국제관계를 유화적으로 풀어나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변화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변화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북한종교

18) 김정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월 11일)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4.

단체와의 교류가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기독교를 포함한 각 종교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1992년 출판된 『조선말대사전』에는 종교를 “사회적 인간의 지향과념원을 환상적으로 반영하여 신성시하며 받들어 모시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또는 그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지난날의 사고와는 현격히 달라진 모습이다. 조선사회민주당 기관지는 종교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평양의 주체사상연구소 박승덕 소장도 김정일이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박승덕은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강의에서 기독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즉 기존의 맑스주의에서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편향적으로 해석하였으나, 주체사상에서는 기독교를 “압박받고 핍박받는 사회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요구를 반영한 의식”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본질적 의미에서 기독교는 바로 인간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능동적인 종교이며,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의 목적과 동기, 사명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민족을 위한 종교이다.

기독교의 교리와 내용에 있어서도 맑스는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매도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내세와 현재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본다. 맑스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배계급에 복무하며 인민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기독교는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¹⁹⁾

19) 박승덕, “주체사상과 기독교” 강연.

탈냉전기 변화된 종교정책에 근거하여 종교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북한에서 종교의 역할과 종교인들의 활동을 다른 기관보다 중시하는 조선사회민주당은 당기관지를 통해 종교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독려한다. 이에 의하면 종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종교인식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협한 것이었음을 비판한다.²⁰⁾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 발생근원과 종교교리, 종교기구와 단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는 종교의 발생근원을 거대한 자연의 파괴력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이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교를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즉 고대에는 자연이 주는 피해와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의 힘을 빌어 자신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해 보려는 염원에서 종교를 태동시켰던 측면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활동을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착취사회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의 억압과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염원에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즉 자연과 사회의 압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심을 갖게 되었고 종교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과거에 종교를 미신이라며 무조건 매도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주로 종교교리가 굴종과 순종의 교리를 강조하며 인민들 속에서 금욕주의와 현실도피사상을 주입시키는 반동적 교리로만 평가하였다. 이러한 교리가 종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교교리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기독교 교리에서 정의와 인도주의, 사랑과 화목이라든가, 불교의 권선징악과 평등의 교리, 천도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평등의 교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을 결부시킨 교리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

20) 하용길,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조선사회민주당』 (1993. 2), pp. 50~52.

교활동 자체도 변화를 반영하여 자주적 교리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2. 남북한의 종교실태

해방 당시 북한에는 천도교도 약 150만명, 불교도 약 37만 5천명, 개신교도 약 20만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명, 총계 약 200만여명의 종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¹⁾ 그 당시 북한인구(916만명)를 기준으로 볼 때, 불교인은 전체인구의 약 5.5%, 천도교인은 약 16.4%, 개신교인은 약 2.2%, 천주교는 약 0.6%로 종교인은 북한 전체인구의 22.2% 수준이었다. 성직자는 승려 732명, 목사 908명, 신부·수녀·수도사 등 262명이고, 교당이나 사찰수는 천도교 교당 99개, 사찰 518개, 교회 약 2,000여개, 천주교 교구 4개 등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세력은 전체 인구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해방당시 조직화된 집단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 세력이었고 지식층의 집결지이기도 했다. 해방 직후 일제의 어용조직이 급속도로 해체 혹은 무력화되고 아직 새로운 대중조직들이 건설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종교세력들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었다.²²⁾

그러나 그 후의 종교탄압정책으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월남하고, 전쟁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배교함으로써 현재에는 거의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북한의 종교정책에 따라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종교인수는 불교신자 약 1만명, 기독교신자 약 1만명, 천도교신자 약 1만5천명, 천주교신자 3~4천명 총 3만8천여명으로 인구의 약 0.2% 수준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신도수와 교당을 지닌 종교는 천도교로서, 천도교위원장인 류미영은

21)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 149; 강인철, “월남 개신교·천주교의 뿌리,” 『역사비평』 (1992년 여름), p. 109.

22)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p. 149.

김일성 장의위원회 273명 중 39위로 올라가 있으며, 천도교 청우당은 북한내 유일한 종교단체적 성격을 띤 정당으로서 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청우당원은 22명이고 지방의회 대의원으로 300여명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높다.

가. 불교

(1) 남한의 불교

남한의 경우에는 해방 전 22개 본산에서 660여 개의 사찰이 있었다. 현재는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만 보더라도 25개 교구에 820개 이상의 사찰이 소속되어 있다. 승려의 수도 조계종의 승적 보유자만 1만 8천명에 달하고 태고종을 비롯해서 50여 개의 군소 종단에 소속된 스님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불교계는 신도의 숫자가 남한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방 이후 북한의 불교가 유명무실화된 것과 달리 남한의 불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왔다. 대표종단인 조계종 이외에도 수십 개가 넘는 다양한 종단이 탄생해서 불교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다양한 종단은 불교의 기본이념이 서로 다른 배타적인 집단이 아니라 대부분 수행의 방법을 달리하는 분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승려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승가대학이나 강원 등 전문 교육기관이 많이 설립되었다. 사찰의 운영이나 포교 분야에서 재가불자의 역할도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교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포교교재를 개발함과 아울러 해외포교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 대중포교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2) 북한의 불교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인민들의 문화휴식처 제공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사찰이 복원됨

에 따라 그 활동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종파는 조계종이지만 승려가 머리를 기르고 절에 상주하지 않는 대처승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찰은 현재 종교적 의미와 기능은 상실한 채 다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즉 불가의 3대기념일인 석탄절, 열반절, 성도절 등에 예불을 집전하고 법회도 열리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신자들에 의한 신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승려는 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대선사, 선사, 대덕, 중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989년 김일성의 지시로 광범사내에 설립된 불교학원에서 양성된다고 한다.

북한의 경우, 1930년대에 9개 본산에 사찰 403개, 포교당 49개였던 사찰규모가 1994년에는 사찰수가 60여 개로, 승려의 수는 1,600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신도숫자는 37만여 명에서 1만여 명으로 줄었다.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의 연맹원들이 불교신도이다. 그러나 석탄일과 같은 큰 기념일에는 절을 찾는 이들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²³⁾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속성상 북한 정권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신앙활동의 자유를 제약해왔다. 정권 수립 초기에 강력한 탄압을 통해 불교활동을 말살시켰던 북한은 80년대 들어서면서 다소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도 순수하게 종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남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11월 26일 북조선불교도연맹과 북조선불교연합회가 결성되었다. 한달 후인 12월 26일 북조선불교도총연맹이 창립되었고 이후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으로 이름을 바꿨다. 조불련이 설립 당시부터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동조하기 위한 협력단체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은 조불련의 창립강령에도 잘 드러난다. 특히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9년에 수정된 조불련의 강령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²⁴⁾

23) 신법타, 『북한불교연구』(서울: 민족사, 2000), p. 97.

24)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정부 정강을 받들고, 이것을 철저히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며, 조국의 국토안정과 완전 자주독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일체 외래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앞잡이인 친일파 민족반역자 및 교단 반역자들과 과감히 싸우며, 일본제국주의의 사상잔재와 봉건유습을 철저히 숙

조블린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협력하는 조직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북한정권의 수립과정에서 불교가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종교에 비해 탄압을 덜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기독교와 천도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것과 달리 불교에 대한 탄압은 이들에 비해 훨씬 덜 했다. 사찰의 토지와 재산이 몰수되고 성직자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 이상의 가혹한 탄압은 없었던 것이다. 불교에 대한 북한 정권의 다소 유화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1946년 3월 4일 북한은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3월 한 달간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이 당시 대부분이 사찰토지였던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 총 14,855정보가 몰수되었다(5정보 이상을 소유한 사찰의 토지를 모두 몰수함). 이로써 사찰운영의 근거가 사라지게됨에 따라 승려의 사찰 거주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김일성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교시를 내림에 따라 승려들을 노동현장으로 내몰았고 승려의 탁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같은 해 4월 23일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위원회 제1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때 무상 몰수된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가 전체 토지개혁 대상의 1퍼센트에 달했다고 한다. 같은 해 4월 29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보물과 고적,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존령을 공포함에 따라 북한의 사찰과 불교문화재는 이 보존령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46년 7월 22일 북조선불교도연맹과 북조선불교연합회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산하단체로 가입했다. 이듬해 5월 13일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8년 3월 25일에는 북조선불교연합회가 “남조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사회단체에 고함”이

청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③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서 모든 민주과업을 성실히 실천한다. ④ 조국의 국토를 방위하며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민군대에 대하여 적극 원조한다. ⑤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며 다른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는 소비에트국가 및 제 민주주의 국가의 인민들과의 친선을 적극 노력한다. ⑥ 불교도들에게 노동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조국부강을 수립하고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한다. ⑦ 불교문화를 민주주의 방향으로 이끌며, 시대에 적용한 신교학을 수립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pp. 156~157.

란 성명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의 종교단체가 공개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 1948년 9월 9일 발표된 조선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헌법은 형식적이거나 제14조에서 종교활동의 자유화를 명문화했다.

1950년 3월 제정된 북한형법은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제257조)과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258조) 규정함으로써 종교활동의 재정적 기반을 박탈하고 종교행사 자체를 금지시켰다. 같은 해 7월 15일 불교신앙 협회, 불교청년사, 여성불교도회 공동으로 연합회의를 개최해서 6·25 전쟁에 1,300명의 불교도를 참여시키자고 결의했다. 1955년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조직체계를 갖추고 각 시도위원회를 구성했다. 북한은 1958년부터 종교에 대한 의식구조 개조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종교를 신앙하는 자를 반혁명분자로 낙인찍고 사찰을 관광지와 휴양지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했다.

1966년 10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역사·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보존,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중에 파괴된 사찰과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주요 사찰에는 전문관리인 자격으로 승려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1966년부터 1967년 3월까지 실시된 주민재등록을 위한 주민 성분조사사업의 결과 전체 51계층 가운데 불교인이 38번째로 분류되었다(천도교 32번, 기독교 37번, 천주교 39번, 유학자 40번). 이는 중소상공인, 월남자의 가족, 6·25 당시 남한군에 협조한 자, 숙청자, 인텔리 및 지주자본가 등이 포함된 적대계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1971년 김일성은 북송 재일교포의 창가학회와 기독교 복음활동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가 아닌 순수한 종교로서 당과 조국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종교는 혁명의 일정한 단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1972년 8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는 50년대 후반 이후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북한의 종교가 최초로 활동을 재개하는 의미를 갖는다. 같은 해 12월 27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제54조에서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문화했다.

1980년대는 북한 불교가 대외활동에 심혈을 기울인 10년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⁵⁾ 1982년 8월 조선불교도연맹이 몽고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에 참가해서 한국문제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1983년 4월 2일 조선불교도연맹 제8차 회의에서 남조선과 해외불교도에 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고 불교의 교리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회과학원출판사가 북한의 유물과 유적을 집대성한 “우리 나라 역사유적”이란 책을 발간했다.

1986년에는 8월과 9월에 각각 소련불교대표와 중국불교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했는데 이는 북한의 종교단체가 최초로 외국의 종교단체를 초청한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이 네팔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불교도회의(WFB)에 참석해서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²⁶⁾ 1988년 5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주관으로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가탄신일 기념법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북한 종교단체가 주관한 최초의 공식행사이고 북한의 불교단체가 주관한 최초의 대규모 불교행사로 기록된다. 이후 북한은 해마다 석가탄신일, 열반일, 성도일 등 중요한 불교 기념일에 기념법회를 실시해오고 있다. 1984년에 착공된 묘향산 팔만대장경보관소가 1988년 완공되었으며 이곳에는 고려대장경 영인본 전질과 조선조 인쇄목판본 3천여 점이 보관되어 있다.

1989년에는 양강도 삼수군 중흥사에 북한 최초의 승려교육기관인 불교학원이 건립되었다. 원장은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이 맡고 있다. 같은 해 5월 30일 장재철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종교인협회가 결성되었고, 조선불교도연맹도 이 협회에 가입했다. 조선불교도연맹의 박태화 위원장이 조선종교인협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6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

25) 김일성 주석이 북한의 불교활동 재개에 관심을 보인 계기의 하나는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의 권고였다는 설이 있다. 불교신자인 시아누크가 북한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묘향산 보현사를 자주 참배했는데, 시아누크는 김주석에게 절에 불상과 승려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복원할 것을 자주 얘기했다고 한다. LA 관음사 도안스님과의 인터뷰. 2002년 8월 22일.

26) 북한불교의 해외친선교류 주요 대상은 태국, 몽고, 일본, 캄보디아, 네팔 및 인도 등이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아시아종교평화회의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아시아불교도 평화회의 집행이사회에 참가했다. 7월에는 홍기문이 소장으로 있는 북한 사회과학원 부설 민족고전연구소가 “고려팔만대장경 해제본” 전25권을 발간했다.²⁷⁾

1990년대부터는 북한 불교가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남한과 해외의 한국불교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1년 9월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과가 신설되어 불교와 기독교 등 동서양의 종교에 관한 강의가 개설되었다. 1992년 4월 9일 개정된 헌법은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다시 천명했다.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다만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신헌법 제68조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남한 내 통일운동가와 재외교포들과의 통일운동을 고려하면서도 북한 체제에 미치는 후유증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²⁸⁾ 1998년 9월 5일 채택된 사회주의헌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12월 25일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창립 50돌 기념 대법회가 평양 용화사에서 거행되었다. 여기에는 조선불교도연맹 뿐만 아니라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천주교인협회,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등 북한의 종교단체 관계가 300여명이 참가했다. 1998년 5월 15일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확대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민족대단결 5대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8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의 박태화 위원장이 해방 53주년 기념으로 조국통일상을 수상했다. 11월 4일에는 평양 광범사에서 고 윤이상 선생의 천도제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주관으로 봉행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전통불교의식을 재현한 북한 최초의 천도제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정권의 불교에 대한 관점과 정책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3년에 발행된 북한의 정치사전은 불교를 북한체제에 해독을 끼치는 사악한 봉건지배계급의 사상적 도구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평가는 1981년 판 현대조선말

27) 홍기문은 임격정의 저자인 벽초 홍명희의 장남으로 1948년 7월 월북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와 정무원 기관지인 민주조선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지난 92년 사망했다.

28)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p. 70.

사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1992년 판 조선말대사전의 불교 관련 내용은 이전과 달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⁹⁾ 먼저 종교에 대해서는 81년에 반동적 세계관, 착취, 혁명의식 마비, 무저항주의, 아편 등의 용어가 포함되었던 부정적인 견해가 92년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의되었다. 불교에 대해서는 81년 판이 노예적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고 봉건지배계급의 지배도구로 이용되면서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과학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고 평가한 반면, 92년 판은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로서 인도에서 생겨났으며 인간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고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는 등 유물론적이나 정치적 견해를 없애고 사실에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처나 불경, 극락세계, 스님, 사찰을 설명하는데도 똑같이 나타난다. 조선말대사전이 불교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해석에서 탈피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려고 한 것은 남북한 불교교류 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처를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우상으로 보았던 81년 판과 달리 92년 판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를 이룬다고 한 것은 북한의 불교정책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신도 수는 대략 1만 명이고 300여명의 승려가 북한 전역의 60여 개의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승려들은 거의 다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대처승이 대부분이며 수행을 목적으로 독신생활을 하는 스님은 없다. 독신의 경우는 이혼이나 부인과 사별한 경우이다. 평상시에는 양복에 구두나 운동화를 착용하고 예식 때는 검은 예복을 입고 그 위에 붉은 장삼을 걸친다. 북한의 승려들은 음식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북한의 승려들은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데, 평양 용화사 주지의 경우는 15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승려들은 아침 예불과 사원 청소를 하고 신도들과의 대화시간도 가지며 경우에 따라 신도가정을 방문하기도 한다. 신도들이 요구하면 절에서 불공도 들려주고 일부 신도들의 집에는 불상도 봉안되어 있다. 조선불교도연맹의 박

29)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pp. 258~260.

태화 위원장은 북한불교의 종단 성격이 조계종이며 소의경전도 남한과 같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이라고 했다고 한다.³⁰⁾ 하지만 조계종은 승려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불교의 성격은 오히려 한국에서 승려의 결혼이 허용되는 태고종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스님들은 주로 해방 이전부터 승려 생활을 해 온 60~70대 노스님들이 대부분이며 한국과 달리 비구니 스님은 없다. 지난 89년 양강도 삼수군 중흥사에 승려교육기관인 불교학원을 설립하고 3년 과정으로 30여명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중흥사의 불교학원은 1991년 2월 평양에 광범사가 복원되면서 평양으로 이전되었다. 선배 승려들이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과목에 따라서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기도 한다고 한다. 불교학원의 규모와 교육프로그램은 남한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강원이나 승가대학과 같은 승려양성 전문기관에는 비할 수 없다.

북한이 사실상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고 엄격하게 분류된 신분위주의 사회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불교신도들이 받는 사회적 처우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1966년부터 1967년 3월까지 실시된 주민재등록을 위한 주민성분조사사업의 결과 전체 51계층 가운데 불교인이 38번째로 분류되어 특수감시를 받아왔다.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이후 종교인들에 대한 제한이 다소 풀렸고 현재는 불교인이 다른 인민들과 전혀 차이 없이 대우받는다는 것이 북한 스님들의 전언이다.³¹⁾ 하지만 체제의 속성상 자유로운 불교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신도의 대부분이 당원이고 당국으로부터 사찰에 다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 설법의 내용도 주체사상과 연관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불경을 사찰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반동적인 종교인으로 몰릴 것을 꺼려해서 개인적인 사찰방문을 삼가고 있다.

30)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신법타 스님과의 인터뷰, 2002년 6월 26일.

31)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p. 79.

매월 수 차례의 정기법회와 일요법회 등 다양한 법회가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법회는 매우 드물게 이뤄진다. 1988년부터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에 사찰 별로 법회가 이뤄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국통일기원법회와 같은 정치성 있는 법회가 개최된다. 1994년부터 4월 초파일은 “부처님오신날”로 개칭하고 “찬불가”도 부르는 등 일부 남한 불교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³²⁾ 평양방송 등 언론매체들도 법회의 개최사실과 법문의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일반 인민들도 불교활동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사찰은 승려가 관리하는 조선불교도연맹 소속의 사찰과 남한의 문화재관리국에 해당하는 문화유물총국이 문화재로 관리하는 사찰로 구분되어 있다. 북한에 현존하는 60여개의 사찰 가운데 1/3 정도를 조불련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유물총국에 소속된 사찰에는 승려가 없고 관리인만 상주한다. 북한은 주요 사찰을 복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기 392년에 창건된 평양 대성산의 광법사가 1991년 2월 복원되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창건된 정릉사도 1993년 5월에 복원되었다. 2002년에는 김정일이 국보급 유적으로 지정된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2010년까지 6·25 이전 모습으로 복원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³³⁾

나. 개신교

(1) 남한 개신교 현황

개신교는 1960년대 이후 비약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을 전후하여 침체 혹은 감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신 교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유래 없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인구센서스 통계에 의하

32)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p. 142.

33) 평북협 신법터 스님과의 의견교환, 2002년 6월 26일.

면 기독교인은 1985년 6,489,282명, 1995년 8,760,33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⁴⁾

그러나 기독교문사 편집부 『기독교대연감』(1992)에 따르면 1990년 기독교인 수는 13,768,672명으로 인구센서스 자료인 8,070,540명 보다 5백70여 만 명이 더 많게 집계하고 있다.³⁵⁾ 2001년 2월 기독교 주요 17개 교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월 말 현재 남한의 기독교 인구는 12,625,001 명으로 집계된다. 또한 17개 주요 교단만을 대상으로 살펴 볼 때 교회수는 39,413 개, 목사수는 73,678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교단이 100여 개가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남한의 기독교 인구는 1천 3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예장합동 3.0%, 예장통합 12.7%, 기독교장로회 7.9%, 감리교 11.1%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기독교가 19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 7. 31 현재 해외 파송 선교사는 개신교가 136개 단체에 9,046 명, 천주교가 58개 단체에 586명에 이른다.

남한교회는 해방 후 남한사회를 지배한 근대주의 이념에 충실하여 반공주의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미국화를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띠면서 양적인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남한교회는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 반공주의 등의 특성들이 발전하였다.³⁶⁾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를 반영하는 사례로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 신도수는 10% 수준밖에 늘지 않았는데, 교회수는 35,706개에서 58,046개로 62.6% 늘어났고, 성직자수는 58,542명에서 98,905명으로 68.9%가 늘어나 신도수에 비해 교

34)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통계』 1995년.

35) 2000년 12월 31일 현재 천주교의 교세는 15개 교구에 1,228개 교회 수, 3,116명의 성직자, 4,071,560명의 신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한국천주교회 통계(2000.12.31 현재)』 참조.

<http://www.mct.go.kr/cgi-bin/nph-hwp2html/tonggye/tonggye-data2/gyogu.hwp>

36)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회수와 성직자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음을 지적할 수 있다.³⁷⁾ 또한 개신교의 배타주의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사회의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의 배타주의는 44.3%, 포괄주의 33.1%, 다원주의 22.6%로 나타났다. 교단에 따라 배타성에도 차이가 있는데 배타주의가 기장의 경우 13.5%에 불과하나 감리교와 예장(통합)은 각각 40.6%, 46.6%이며, 침례교, 예장(합동), 성결교의 경우 각각 56.1%, 58.5%, 68.3%나 되고 있어 보수교단일수록 종교적 배타주의 성향이 강하게 표현된다.³⁸⁾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신교회의 교파간에 반공주의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으로 뚜렷이 이분화되어 있고 그 관계가 첨예한 갈등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⁹⁾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 보수-진보 교회의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예컨대, 1989년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에 대해 진보진영은 “통일을 향한 염원에서 감행한 애국적 신앙적 행위”로 찬양한 반면, 보수진영은 “그를 목사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용공의 이적 행위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보수주의 교회들의 입장은 극단적인 경우 멸공통일,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진보교회의 입장은 우선 반공법, 보안법 등을 철폐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주의 통일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남한교회의 이러한 양극화는 신학적인 차이와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대한 반응의 차이로 인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최근 대북지원을 계기로 보수-진보 교회가 연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남북교회협력의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남북교회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교회의 연합전선이 필요하다.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교회의 연합적 노력이 가시화되면 연합활동은 사회

37) 문화체육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부, 1997), p.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연감』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2), p. 505.

38)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pp. 51~52.

39) 이원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신학적 접근,” 『기독교사상』 (1989년 7월호), pp. 68~81.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2) 북한 개신교

북한 개신교 역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말까지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조선 기독교연맹에서 이름을 바꾼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인 강양욱이 6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1974년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세계기독교협의회(WCC)에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북한의 다른 종교에 비해 일찍이 해외에 그 존재를 알리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대외선전적 차원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기독교가 종교 본연의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평양에 북한정권수립 이후 최초로 88년 봉수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두번째로 평양에 칠골교회가 세워졌는데, 현재 이 두 교회에서 계기가 있을 때 100-300명의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다. 그러나 방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50대 이후의 노년층으로 어린아이는 전혀 없고 청년층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성직자로는 30여명의 목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1972년 설립된 평양신학원이라는 신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성서와 구약성서를 1983년, 1984년 각각 출간하였고, 신구약합본인 성경전서를 1990년에 출판하였다. 198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개설하여 신학도 강의되고 있다. 조선기독교도 연맹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독교신자는 1만여명 있고, 50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의 경우 북한의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등 건물형태와 그들 특유의 교회인 가정예배소가 그것이다. 특히 가정예배소는 북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북한측에서는 북한에 약 8백여 곳의 예배처소가 있는데 그중 33곳은 평양에 있다고 했다. 이들 가정예배소는 장로나 집사 등 평신도 등에 운영된다. 전쟁을 전후해 상당수의 목회자가 월남하거나 처형당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그리

스도인들은 약 1만명이 있는데 이들중 약 5천명은 10명 정도로 구성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구약성경이 1만부가 발간되었고 3년제 신학원도 있다.

북한의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속해 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라는 조직내에서 활동한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산하기관이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1999년 2월 조선기독교연맹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선천주교인협회도 조선카톨릭협회(99. 6)로 개칭되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위원장인 강양욱이 6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1974년 조선기독교연맹이 세계기독교협의회(WCC)에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북한의 다른 종교에 비해 일찍이 해외에 그 존재를 알리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대외선전적 차원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기독교가 종교 본연의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평양에 북한정권수립 이후 최초로 88년 봉수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북한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불교도연맹, 카톨릭협회, 천도교중앙위원회와 더불어 종교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북한의 종교인수에 대해 기독교신자 약 1만 명, 불교신자 약 1만 명, 천도교신자 약 1만5천명, 천주교신자 3~4천명 등 총 3만8천여 명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의 종교인구는 전체의 0.2%에 지나지 않는 미약한 형편이며 기독교 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공식교회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2곳 뿐이며, 북한전역에 520개의 가정교회가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90년대 초에는 목사 20명, 교회책임지도원(전도사) 130여명 정도가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목사 30명, 교직자 300명, 신자 1만2천300명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3년제의 조선신학원이 있는데 매해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이들이 졸업한 후에 다시 학생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신학교를 운영한다.

연맹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된다.⁴⁰⁾ 중앙조직으로는 총회가 있고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영섭), 서기(서기장: 오경우)가 있으며, 산하에 국제부(부장: 황시천), 선전부(부장: 리춘구), 조직부, 경리부(부장: 홍광일) 등이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평양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1972년 설립된 평양신학원은 북한교회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3년제 신학 교육기관이다. 198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개설하여 신학도 강의되고 있다.

가정예배소는 북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북한측에서는 북한에 약 520여 곳의 예배처소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평양과 남포, 개성에 각각 30개소, 평안남북도 각 60개소, 그 외의 도에 40개소씩 존재하고, 양강도와 자강도는 산간지역이어서 가정교회가 아직 없다고 한다. 이들 가정예배소는 장로나 집사 등 평신도 등에 운영된다. 전쟁을 전후해 상당수의 목회자가 월남하거나 처형당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약 1만 명이 있는데 이들 중 약 5천명은 10명 정도로 구성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공식적인 교회 이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신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의 선교단체들은 약 100여 개의 지하교회가 당국의 눈을 피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1950년 당시 북한의 기독교신자가 20만 명 이상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잠재적 신앙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많이 있다. 북한의 시골지역까지 방문하는 조선족 보따리 장사꾼들이나 연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 의하면 외딴 집이나 산속, 논두렁아래 등에서 서너 명씩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개인적으로 과거의 신앙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 김현희씨 어머니는 이러한 잠재적 신앙인의 부류에 속한다. 김현희씨의 어머니는 개성의 기독교계통 학교인 ‘호수돈여고’를 나왔다고 하는데, 김현희는 인민학교 시절 소아마비에 걸렸다가 옆집 손님으로 온 침구사의 도움으로 병이 나았을 때 어머니가 무심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했던 말을 회상했다.⁴¹⁾

40) 자세한 내용은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서울: 국민일보, 1991) 참조.

조동진목사의 평가에 의하면 북한에서 한국전쟁 이후 생존한 기독교인을 20만~25만 명으로 추정한다. 그는 전쟁이전 북한 기독교인구를 30~35만 명으로 보고 한국전쟁 기간 중 사망자 5만 명과 월남자 5만 명을 제외하면 적어도 20만 명 내지 25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까지 생존했다고 가정하면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잔류신도와 그 자녀수를 75만 명으로 추산한다.⁴²⁾ 물론 북한의 기독교 억압정책으로 인해 가족관계 이외의 방식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기독교인 수는 75만명 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가운데 전쟁당시 30세 이상의 인구층은 현재 80세가 넘어 이미 사망했거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신앙을 버렸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75만명의 인구는 가족관계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신빙성 있게 판단할 근거는 없다.

가정교회는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에서 90년대 초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린 이후에 잠재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 보장된 것이다. 해방이후 기독교인 후손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협력하면서도 부모들을 통해 전수받은 기독교신앙을 지켜왔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힘겹게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다. 80년대 후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매도한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독교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전향적인 해석을 내린다. 그 이후로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침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더 이상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합작과 연합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접근한다.

따라서 이러한 열린 공간을 배경으로 북한의 종교인들과 학자들은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종교를 무조건 비판하는 입장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주체적’ 해석을 내린다.

41)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서울: 고려원, 1991), p. 318.

42) 조동진, “역사적 전환기의 전방위 선교로서의 대북활동,” 『2001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강의자료』, p. 6.

기독교는 원래부터 ‘인민의 아편’이었던 것이 아니라 발전과정에서 특정시기에 인민을 착취하고 지배계급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는 생성초기에 외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양식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에 이를수록 일반민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북한당국의 변화된 종교정책에 대해 일반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종교를 배척하고 있으며 ‘인민의 아편’으로 생각하거나 미신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해석의 지형을 활용하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반동분자로 낙인찍는다거나 비판하였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기독교인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잠재적 기독교인들은 가정교회에 편입되거나 새롭게 가정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다. 천주교

(1) 남한의 천주교 실태

19세기에 100여년에 걸쳐 한국의 천주교는 박해를 받았다. 한국의 천주교는 1801년 신유년 박해, 1839년 기해년 박해, 1846년 병오년 박해(조선교회 첫 성직자 김대건 신부 순교), 1866년 병인년 박해 등을 받으면서 1만여명이 순교하였다. 1886년 한·불 수호조약에 “양국인이 서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천주교의 전파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892년 명동대성당이 세워졌다.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행사에 교황 요한 바울로 2세가 한국에 왔으며,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 103위를 성인으로 선포했다. 1999년 현재 한국 천주교의 총 신자는 384만 5천여명으로 전체 인구 4천 700만의 약 8.2%에 해당한다. 한국 천주교에는 주교 22명, 신부 2,800명, 수도자 8,139명이 있다. 그리고 교구 14개, 본당 1,147개(공

소 1,148)이 있다. 해외 교포신자는 58개 국가에 102,398명(미국 64,802명)이며, 사제 140명, 수녀 98명이다. 그리고 해외 교포 본당은 137개(집회소 75개)이다.

(2) 북한의 천주교 실태

해방 당시 북한지역의 천주교 교구는 평안도지역을 관장하는 평양교구, 함경도 지역을 관장하는 함흥교구, 성 베네딕도 수도원이 소재한 덕원면속구(함흥교구장이 교구장 겸임)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밖에도 38도선 이북인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이 북한지역의 교구에 속했다. 황해도 지역은 북한 지역이지만, 서울교구 관할 지역이어서 6.25 직전까지 서울교구에서 인사발령을 했고, 강원도의 38 이북지역은 춘천교구의 관할하에 있었다. 해방 당시 북한지역의 천주교 신자는 1944년 말 현재 평양교구 28,400명, 함흥교구 5,474명, 덕원면속구 5,370명, 황해도 지역 12,853 명 등으로 52,097 명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강원도 38도선 이북 지역의 신자와 1945년 이후 몇 년 동안의 신자 증가를 감안한다면 1945년 경 천주교인은 대략 55,000명 내외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 당국의 본격적인 탄압으로 절반 이상의 신자들이 남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 지역에 남은 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북한에 약 1만여 명 정도의 신도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분단후 평양교구장과 함흥교구장이 유고상태가 됨으로써 북한의 교계제도는 파괴되었다. 그대신 교황청은 남한의 주교를 평양교구장과 함흥교구장 서리에 임명함으로써 북한지역의 교구에 대한 관할권을 남한측 천주교구에게 위임하였다. 동독의 경우 분단이후에도 동독 천주교의 교구가 존속됨으로써 천주교의 교계가 유지되었던 것과는 다르다. 북한은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측 천주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장충성단 신도회 간부들은 김수환 추기경을 평양교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1998년 최창무 평양교구장 서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측은 최주교의 평양교구장 서리 직함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인도지원을 위한 방문으로 의미를 한정하였다.

북한 당국은 197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북한의 천주교인 숫자를 80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런데 1991년 4월 김현욱 의원이 IPU 평양총회 참석 시 평양 장충성당을 방문하여 확인한 숫자는 1,258명 정도에 이르렀다. 1995년 10월 뉴욕에서 개최된 남북, 해외천주교인 세미나에서 북한측 대표는 북한의 천주교 신자가 3,003명이라고 하였다. 이후 북한 천주교 관계자들은 현재 북한의 천주교 신자 수를 대략 3천명이라고 한다.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중앙 기구만 있을 뿐 하부조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라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남한의 종교계를 의식한 선전활동이나 로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내외 성명서 채택, 국제적인 종교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1988년 6월 30일 조선천주교인협회(위원장 장재철, 최근에 장재언으로 이름을 변경)가 결성되어 대외적으로 북한 천주교를 대표한다. 장재언 위원장은 조선종교인협회의 위원장과 조선적십자사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기도 하다. 부위원장 최선남, 서기장 강지영, 상임위원 한이철·김유철 등이 주요 인물이다. 조선천주교인협회의회는 1999년 6월 조선카톨릭교협회로 개칭되었다.⁴³⁾ 그러나 교황청은 북한지역에 교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카톨릭교협회를 천주교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1988년 10월에 평양 장충성당이 세워져 신자들이 주일마다 공소 예배를 갖고 외국에서 신부가 방문할 경우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장충성당 건립은 지난 1987년 10월 북한에 조선천주교인협회가 발기모임을 가지면서 본격화됐다. 이듬해 봄 장충성당 공사가 시작됐고 1988년 9월 말 분단 이후 북한 최초의 성당이 들어서게 됐다. 북한 당국은 공사가 한

43) http://www.hwahai.or.kr/sang_main.htm

창인 1988년 6월 30일 평양 방송을 통해 조선천주교인협회의 공식 발족 소식을 전하면서 장충성당을 간접적으로 공인했다.

장충성당은 대지 1천 3백 61평에 건평 1백51평으로 작은 규모이다. 장충성당의 제대 위에는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양떼를 이끄는 목자를 그린 성화가 붙어있고, 전면 왼쪽 벽에는 성모 마리아, 오른쪽 벽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요셉상이 걸려 있다. 또 앞쪽에는 지난 1998년 4월 미국 오렌지한인성당 박창득 주임신부가 전달한 최봉자 수녀의 성모 마리아상이 세워져 있다.

장충성당에서는 매주 100~200여명의 신도가 모여 약식 미사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충성당은 초대 회장인 박경수 바오로가 1990년 여름에 병사한 후 차성근 울리오가 회장을 맡아 공소예절 진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장충성당에서 첫 미사가 봉헌된 것은 1988년 10월 30일이다. 당시 서울대교구 사목연구실장 신부였던 장익 주교(춘천교구장)와 로마 유학중인 가톨릭대 정의철신부가 30일 저녁미사와 11월 1일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당시 장익 신부가 처음으로 첫 미사를 봉헌하면서 바티칸에서 가져온 성작을 기증하여 보관되어 있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신부들은 이 성작을 사용하고 있다. 그 뒤 많은 사제들이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했지만 대부분 미주지역의 한인신부들이 집전한 것이었다. 한국인 신부로는 문규현 신부가 1989년 임수경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을때 동행해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했으나 보안법위반으로 귀국후 구속되었다. 한국인 주교로는 1998년 5월 17일 서울대교구 최창무 주교가 오태순·이기현 신부 등과 함께 분단 후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는 1991년에 교리서와 가톨릭 기도서를 발간하였다. 천주교 교리서는 「천주교를 알자」, 「신앙생활의 걸음」의 2종이다. 「천주교를 알자」 교리서는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은총을 얻는 방법 등 3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발간된 교리서를 발췌하여 구성되었다. 「신앙생활의 걸음」은 교계제도의 특성과 소개, 성경 및 전례주기에 대한 설명 등 천주교에 관한 상식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가톨릭기도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내용과 동일하며, 표기법만 북

한식 표기법으로 고쳐진 것이다.

라. 민족종교

민족종교로 간주되고 있는 천도교는 북한에서 6.25 이후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활동이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천도교 청우당이 노동당의 우당으로 활동함에 따라 조선천도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성명서가 대남공세 차원에서 발표됨으로써 활동이 재개되었으나 종교 본연의 활동은 아니었다. 종교 본연의 활동은 1986년 천도교 창도 기념일인 ‘천일절’을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재개되었으며, 이 기념의식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단군능에서 단군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천도교는 이른바 민족종교로 부각되어 다른 종교에 비해 그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천도교는 북한 주민에게 종교본연의 활동보다는 정당단체로서의 활동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

해방당시 민족종교로서 약 2백 86만여명의 신도수를 가졌던 북한 천도교는 여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북한당국의 반종교정책에 의해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제한→탄압→말살의 단계적 조치를 당했다. 북한에서는 천도교를 우리나라 고유의 동학이 개편된 종교로서 신비주의적인 면이 강화되고 반침략·애국사상이 상실된 신앙(1983년판 백과전서)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 외곽조직으로 전락되어 1946년 2월8일 창당된 천도교 청우당이 북한정권과 상당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북한종교단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천도교는 1989년 5월30일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천도교단체로는 1946년 설립된 「천도교 북조선정무원」이 1949년까지 활동하다가 잠적했고,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종교의 자유 위장선전과 대남통일선전 형성 필요성에 의거 1974년 2월15일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오늘의 북한 천도교는 노동당의 선전기구로 완전히 전락하여, 1986년 천도교 창도 126주 기념행사 이후 매년 반복된 행사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야 천도교 이념이 구현

된 지상천국의 염원을 실현할수 있다”고 주장, 김일성 부자세습체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대남 비난선전과 한국 천도교인사 밀입북 공작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밀입북 공작을 전담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86년에는 한국 천도교 중앙본부 교령을 지낸 최덕신을 포섭, 월북시켜 89년 3월 청우당 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및 주한 미군철수 주장, 한국의 북방정책 모략 및 비방하는 등 한국내 반한·반미 선동에 북한 청우당을 적극 이용해 왔다. 또한 97년 월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도 최덕신과 동일하게 천도교의 대남사업 도구화에 이용되고 있다.

천도교청우당은 강령에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자기의 지도이념으로 하고, 갑오농민전쟁, 3.1운동, 조국광복을 위한 반일(反日)성전에서 이룩한 선열들의 애국애족과 민족단합의 전통을 계승한다”면서 척양, 척왜 등 9개항을 기본과업으로 한다고 밝혔다. 당 규약은 조직의 원칙과 구조와 관련, “중앙에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에 도(직할시)당위원회, 시(구역)·군에 시(구역)·군 당위원회를 두며, 당 최고기관으로 당대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93년 12월 이같은 내용의 천도교청우당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도교는 북한의 사회 체제 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종교이다. 반제반봉건 투쟁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천도교는 2001년 6월 현재 1만 3천 5백여 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다. 예배 형태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 혹은 소규모의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800개소의 전교실이 가정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아직 직접 방문한 기록은 없어 그 실태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평양에 100석 규모의 중앙 교당이 있으며, 지난 86년부터 천도교 기념일의 하나인 천일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개정된 천도교청우당 강령·규약에 보면 당원은 만 18세 이상의 천도교인들과 각계 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입당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해당 접에 제출하고, 시(구역)·군 당위원회는 접총회를 통해 1개월 안에 심의 처리한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

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직할시), 시(구역).군 당조직의 최고지도 기관은 도(직할시),시(구역).군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당대회는 4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조직으로 도(직할시) 당대표회는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3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접이다. 접의 지도기관은 접총회이다. 접은 수시로 접총회를 소집하고 상급 당조직의 결정, 지시, 집행대책을 토의한다. 당의 재정은 당원 월수입의 1%로 충당한다. 현재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최덕신의 처인 류미영이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강철웅, 김철민, 최희준, 한영수, 한영욱 등이 활동하고 있다.

3. 남북한 종교의 이질화 실상

남북한 종교의 이질화 현상은 심각하다. 북한당국의 종교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에 있어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는 그간의 북한당국의 선전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탈북자들이 ‘목사’나 ‘신부’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든가, 예수나 부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종교는 “정신나가고” “얼빠진” 사람이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방북 종교인들에 따르면, 가까운 곳에 사는 평양시민들이나 안내원조차 평양에 교회와 성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천주교와 천도교를 구분 못하든가 신부와 스님,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안내받는 스님을 ‘중선생’이라고 호칭했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이면서 종교 자체에 대해 무조건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모순도 갖고 있다. 그들은 종교가 무조건 사람을 홀리고 마비시키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점은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언급도 하지 않으려 하는 점에서 잘 드러났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이 이렇게 종교에 대해 적대심을 갖는 것은 11년간의 의무교육기간 동안 종교는 제국주의의 문화침투와 식민지적 침략의 침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갖도록 교육받는다. 북한은 기독교를 “철천지 원수”인 미제의 스파이라고 가르친다. 늘 제국주의적 침략의도를 놓치지 않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 가장 먼저 침병으로 보내어 그 곳 주민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두번째 이유는 과거 종교인들이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은 대체로 50, 60대 주민들이다. 이들은 해방직후나 전쟁후 많은 종교인들이 순교하거나 핍박받는 것을 보거나 들은 세대이다. 현재 북한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이하 주민들은 철저하게 출신성분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운명이 달라지는 북한의 사회여건상 종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종교를 사람들에게 환각을 갖게 하는 미신으로서 ‘주체적 인간’이 믿을 바 못되는 몹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점’ (占)을 본다든가 푸닥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는 토속신앙으로서 일종의 풍습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집안에 불상사가 있고 직장생활에서 곤경을 겪을 때 그 해결책을 미신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점은 당간부들의 경우가 더 극심하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불안으로 점집이 더욱 성행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95년까지 1개 시·군에 불과 30여명에 불과하던 점쟁이가 96년 이후에는 100여명으로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점쟁이들의 복채가 엄청나 궁핍의 경우 100원이며 미래예언이나 묘

자리의 경우 액수가 엄청나서 일반주민들의 평균소득을 몇배나 상회할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정주부들까지 가짜 점쟁이로 나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주민들은 손금을 보거나 물을 떠놓고 비는 행위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복채만 마련되면 점을 보러 가는 모습도 나타낸다. 이는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종교없이 살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종교욕구는 갖고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경제동물(homo economicus)이면서 종교동물(homo religious)이기도 하다. 인간은 본능에 의해 삶을 영위하지만 영적이며 정신적인 추동력에 의해서도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현재 북한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관제적 종교활동이 있고, 극히 일부 주민들만이 음성적으로 개인의 종교생활을 지키고 있지만, 종교욕구 자체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주민들은 종교적 욕구를 김일성주의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해방전 북한에는 개신교, 천주교 등 서방종교가 남한보다 먼저 전래되었고, 불교, 천도교 등 전통종교도 교세가 성하여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종교의 영향이 깊숙히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북한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지닌 공산주의적 종교관의 영향을 받아 김일성은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55년경에 이르러서는 북한 땅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은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1960년대 이르러서는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북한 종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김일성의 종교관은 김일성 자신이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고 착취·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라고 발언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북한의 종교관이 얼마나 반종교적인지는 그들이 출판한 백과전서에 수록된 종교에 관한 해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 다시 종교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회담과 상호방문이 실시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즉 북한은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였던 이른 바「조선기독교도연맹」,「조선불교도연맹」,「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등의 활동을 재개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북한의 종교정책은 남한 종교인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결성 및 활동에 목적을 두었지 종교활동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대로서 그 계기는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의 영향이었다. 북한은 이 시기에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 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등 종교단체신설과 사찰복원·법회 개최, 성당·교회의 건립과 종교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대외선전활동의 일환으로써 주민차원에서의 보편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종교단체들도 포교활동보다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남한의 종교계를 의식한 선전활동이나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내외 성명서 채택, 국제적인 종교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부정적 의식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거리로 김일성은 미국선교사가 어떤 소년에게 저지른 만행을 제기하곤 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자주 되풀이했던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 와 있던 미국선교사가 조선소년이 떨어진 사과를 한알 주어 먹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라는 얘기를 예로 들곤 한다.⁴⁴⁾

「로동신문」이나 방송매체에 실린 내용에서도 종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에 보도된 종교에 관한 내용이다.

44) 김정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

서울에 사는 한 대학생은 동료들이 “왜 교회에 안 가는가”고 묻자 “대를 두고 기독교를 믿어오지만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자비심도 베풀어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수해로 사경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은 것처럼 숭상하던 하느님이 아니라 조국을 광복하시고 민족을 재생시키신 김일성 주석이시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김일성 주석만을 믿어왔다”라고 말하였다.(『로동신문』, 1995. 3. 20)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나 세계 가톨릭 국제회의 웨스턴 서기장 같은 고명한 성직자들이 이북 방문 소감에서 이북에 한하여서는 선교할 필요가 없다면서 성서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는가 하면 주님이 가르친 그 이상사회가 이북과 같은 사회라며 “에덴동산이 아니라 주체의 낙원이 지구 위에 피어난 민중복락의 동산”이라고 격찬해 마지 않았다.(『로동신문』, 1996. 2. 18)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로동신문』, 1996. 2. 18)

김일성은 “미국은 오래 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각지에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숭미사상을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수십 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라고 교시하였다.(『로동신문』, 1999. 3. 16)

언젠가 김일성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서방의 정계, 종교계의 한 저명한 인사는 귀국후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야말로 덕과 사랑의 화신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주석님의 덕망에는 예수도, 하느님도 따르지 못할 사랑의 높이가 있고 가장 깊은 인정의 바다가 있다. 나는 김일성의 숭고한 덕망에서 하느님의 화신을 보았다”(『로동신문』, 1999. 7. 18)

미 국무성은 이른바 1999년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 데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종교상황을 제 몇대로 열거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느니, 종교활동을 하면 가혹한 형벌이 가해진다는니 하며 무턱대고 걸고들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신앙과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담보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이다. 『조선중앙방송』, 1999. 9. 27)

북한의 종교는 먼저 개인 혹은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처소에 배를 기본적인 예배 형태로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종교에 대한 주민들의 보편적 적대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전통에 있어서 일제시대의 특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처소와 개인 중심의 신앙 형태 때문에 그 원형이 보존되고 있는 까닭이다. 또 전도와 경전 소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도는 자신이 종교인임을 밝혀야 하는 부담과,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북한 주민들의 종교관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상 투쟁의 영향으로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무용론, 그리고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허무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종교는 교류를 통해 접하게 되는 외부의 종교 양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 안에서 종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전도의 수단이 제한되어있다는 상황과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데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종교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 혹은 집단의 의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천도교와 개신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정치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Ⅲ. 남북한 종교교류의 현황과 특징

1. 남북한 종교교류의 전개

1989년 6월 이후 2001년 12월까지 남북한 종교교류는 신청 390건(1,889명), 승인 334건(1,738명), 성사 144건(1,079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종교교류는 고 마태오 신부(84.3), 하와이 대원스님(88.7), 법타스님(89.6), 장익·정의철 신부(88.10), 박창득, 남해근, 조영희 신부와 미주 카톨릭신자 9명(89.21), 이대경 목사(89), 광선희 목사(91.9, 95.8), 문선명 목사(91.11), 권호경 목사(92.1) 등 일부 남한종교인들의 방북이 이루어진 가운데 주로 미국, 일본 등 제3국에서의 종교행사 공동참가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1996년 2월 26~28일 중국 북경에서는 「남북종교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내 10개 종단 협의기구인 한국종교협의회와 북한 종교인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남북종교교류 문제를 논의하였다. 종교교류도 전반적인 남북교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1998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1년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종교분야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1995년에는 북한의 수재와 관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교교류가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반적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종교교류도 위축되었다.

<표 1> 남북 종교교류 현황 (1989. 6. ~2001. 12, 접촉현황)

(단: 명)

연도	신청	승인	성사
1989	10 (10)	5 (5)	2 (51)
1990	16 (97)	15 (96)	13 (86)
1991	40 (155)	37 (142)	7 (54)
1992	38 (140)	30 (117)	1 (1)
1993	19 (65)	16 (62)	4 (68)
1994	23 (97)	16 (85)	12 (94)
1995	42 (213)	33 (187)	7 (133)
1996	26 (249)	16 (203)	13 (90)
1997	30 (141)	26 (134)	35 (150)
1998	55 (214)	51 (202)	20 (148)
1999	32 (222)	32 (218)	21 (118)
2000	43 (185)	41 (187)	9 (86)
2001	16 (101)	16 (100)	
계	390(1,889)	334(1,738)	144(1,079)

종교분야의 직접적인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총47건, 232명이다. 89~94년 3건(3명), 95년 2건(2명), 97년 3건(4명), 98년 10건(51명), 99년 9건(39명), 2000년 9건(47명), 2001년 11건(86명)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97년까지 매년 한 두건에 불과하던 북한 방문이 98년 10건으로 늘어났으며 종교계의 북한방문은 한층 빈번해졌다. 김동완·김영주 목사(97. 9), 최창무 주교 등 8명(98. 5), 박종화·홍정길 목사 등 6명(98. 5), 신현균 목사 등 4명(98. 6), 문규현 신부 등 9명(98. 8), 은희곤 목사 등 8명(98. 9), 남북종교인평화모임(KCRP, 98. 11, 99. 12, 00. 3, 01. 3), 진요한 등 7명(00.4, 01. 4), 은희곤 목사 등 6명(00. 7)의 방북이 진행되면서 남북 종교교류를 주도하였다. 2002년 6월에는 한민족복지재단 회원 297명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종교계의 대규모 교류가 처음으로 성사되었다. 남북종교의 교류는 제3국 공동회의 중심의 접촉주어에서 북한내에서의 연합종교행사, 북한종교실태조사 등 순수 종교적 목적의 방북이 증대하였다. 물론 종교교류 목적의

방북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지만, 남북종교는 점차 순수 종교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남한정부는 1995년 6월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15만톤의 쌀(2억3천2백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최초의 대북지원이었다.⁴⁵⁾ 이후 정부는 UN기구(WFP)를 통해 96년에 305만달러, 97년에 2,669만달러, 98년에 1,100만달러, 99년 2,825만달러, 2000년 7,863만달러, 2001년 7,045만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4억5천만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WFP(세계식량기구)나 UNICEF(국제아동기금),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방식과 한적을 통한 직접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옥수수, 밀가루, 분유, 쌀 등 식량과 농산물 증산을 위한 비료, 의약품, 내의 등을 지원하였다.

<표 2> 국내의 대북지원 현황

(단위: 천달러)

구 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누계
한 국	정부	232,000	3,050	26,670	11,000	28,250	78,630	70,450	450,050
	민간	250	1,550	20,560	20,850	18,630	35,130	64,940	161,910
	계(A)	232,250	4,600	47,230	31,850	46,880	113,760	135,390	611,960
국제사회(B)		55,650	97,650	263,500	301,990	358,710	181,770	246,470	1,505,740
총계(A+B)		287,900	102,250	310,730	333,840	405,590	295,530	381,860	2,117,700
A/A+B(%)		80.7	4.5	15.2	9.5	11.6	38.5	35.4	28.9

1995년 6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국내의 민간단체가 지원한 총액은 1억6,191만 달러(1,960억원)에 달한다.⁴⁶⁾ 남한교회의 북한지원 사

45) 북한은 1984년 9월 서울·경기지방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수재민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쌀 5만석과 천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및 기타 의약품을 남한에 전달한 적이 있다. 통일원, 「통일백서 1995」 (서울: 통일원, 1995), p. 166~167.

46) 2002년 5월말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억 7,823만 달러 (2,17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제131호, 2002년 5월).

업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99. 2. 10)가 취해지기 전까지 창구단일화(95. 9)의 정책에 의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적십자사 지원은 95. 9~97. 5까지 ‘국적’을 통해 지원하였고, 97. 6 이후 ‘한적’을 통해 남북간 직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997. 3. 31 민간지원에 제외되었던 쌀이 지원품목으로 허용되었다.

민간차원에서 1996년 6월 북한동포 돕기운동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개 종단과 시민단체, 학계를 망라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서로돕기운동본부』는 북한식량문제 국제회의를 개최(97. 3)하고 감자 2천톤과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북지원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도 추진중이다. 또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96년 8월 ‘북녘형제의 국수나누기 운동’을 시작하여 3만여 회원에 5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적십자에 전달하였다. 불교계는 24개 종단 연합기구인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와 조계종이 적십자를 통해 1억6천만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또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민간단체들은 식량지원과는 별도로 의약품, 생산기술, 영농방법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95년 9월부터 식량지원을 해온 재림교 개발구호기구(ADRA)는 96년 11월 심장전문의 17명을 평양에 파견해 김만유병원에서 환자 12명의 심장수술을 하였으며, 교회간 의료지원(IMA)과 국제자선단체연합(MCI)도 96년 1백만달러 이상의 의약품을 제공했다. 월드비전(World Vision) 미국지부는 평남평원군에 국수공장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미국 카터센터는 북한에 보리종자를 비롯하여 화학비료의 생산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옥수수의 다모작, 밀·보리와 벼농사의 2모작을 지원하는 등 영농방법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다. UNDP, MSF(국경없는 의사회, 98. 9 철수), WCC(세계교회협의회) 등도 보리종자를 지원하고 영농방법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내 한인교회들도 이산가족들과의 상봉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이산가족들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지속해 왔으며, 북한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요청받고 돕기운동을 추진중이다.⁴⁷⁾

가. 불교교류

남북한 불교교류를 담당하는 북한측 기구는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이다. 조불련은 1945년 12월 26일 창립된 북조선불교도 총연맹을 모체로 1947년 5월 13일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체제를 갖추었다. 조불련은 1955년경에 조직과 체계를 각 시도 단위까지 정비했다. 북한이 조불련을 단일 창구로 해서 대남 불교교류협력에 임하고 있는 데 비해서 남한은 불교 각 종단별로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구의 다양성은 남한의 불교활동이 그만큼 민간 중심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한 불교의 교류는 두 정치체제가 남북 종교간 교류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가능해지게 되었다. 북한은 80년대부터 종교의 대외교류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남한과의 불교교류를 적극 추진했다. 이는 동구 공산주의와 소련의 몰락으로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체제 생존의 돌파구를 남북대화에 두었던 8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 대화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역시 남북교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치적 조치가 불교교류 활성화의 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일명, 7·7선언을 발표하면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7·7선언을 계기로 해외거주 불교인의 방북이 먼저 성사되었고 이후 남한 불교계 인사들의 직접 방북도 가능해지면서 남북한 불교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교류협력활동이 전개

47) 지원한 물품으로는 정부기관에서 쓸 카메라, 복사기, 컴퓨터, 볼펜의 잉크, 아이들이 먹을 알사탕, 봉수교회에서 쓸 주보, 성가대 가운, 피아노, 전자울간, 성경과 찬송가, 스피커 시스템, 김일성대학에 기증한 기독교서적 등에서부터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구, 의약품, 의학서적, 평양제3병원, 평양 치과대학병원, 원산병원 및 청진병원 설립과 지원 등 다양하다.

되고 있는 남북한 불교의 통일운동과 교류협력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⁸⁾ 1988년 3월 25일 서울 개운사에서 대승불교승가회(회장 송산스님)가 창립식을 갖고 산하에 통일문제위원회(위원장 종태스님)를 설치했다. 대승불교승가회는 5월 18일 조국통일을 위한 대승보살의 다짐과 선언을 발표하면서 통일논의의 자유성 보장을 요구하고 핵무기 폐기, 남북평화조약 체결 등을 주장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5월 19일 결성된 민족화합 공동 올림픽추진 불교본부가 6월 12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공동 올림픽 기원법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조불련에 남북불자 공동기원법회를 동시에 개최하자는 서한을 보냈다. 8월 5일에는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한국불교민족통일협의회 구성을 결의했다. 7월에는 미국 국적을 갖고 하와이에 거주하던 기대원 스님이 남한출신 승려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다. 8월 15일에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불자 공동 기원법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개최되었다. 11월 15일에는 26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에 남북불교 교류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총재에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스님, 회장에 박완일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이 임명되었다.

1989년 6월 법타스님이 조계종 승려신분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고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 등과 남북해외불교교류 및 불교의 평화통일 기여 문제를 논의했다. 9월 26일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한민족대화합 기원 한강연등대법회에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 등 북한불교 대표단 30명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0월 13일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과 조불련 관계자가 판문점에서 회담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⁴⁹⁾ 하지만 10월 14일 개최된 제2회 한강연등대법회에서 조불련이 법타스님을 통해 조계종에 기증한 백죄불상 1좌에 대한 점안식이 거행되었다.⁵⁰⁾

48) 북한의 불교 교류협력 창구는 당의 통제를 받는 조불련 하나인 반면, 남한에서는 불교 교류협력을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류협력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겠다.

49) 북한은 불교행사와는 상관없는 통일문제 협의 등을 위해 판문점회담을 요구했고, 남한측이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회담에 나오지 않았다.

1990년 7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8월중 남북불교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과 북한의 불교문화재 발굴 지원 의사가 있음을 제의했다. 아울러 세계불교도대회 동시참가 및 한강연등제 초청 의사도 밝혔다. 1991년 1월 미국 LA에서 한민족불교교류추진 미주불교협의회가 창립되었고 회장에 관음사 주지 도안스님이 임명되었다. 1991년 4월에는 신법타 스님과 관음사의 도안스님이 북한을 방문해서 조선불교도연맹과 공식회담을 갖고 남북 불교교류 문제를 논의했다. 7월 소련에 불교가 전래된 지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대한불교청년회 임원단과 조불련 관계자가 회동했다. 같은 해 10월 29일부터 11월 7일에는 LA 관음사에서 남북한 및 해외의 동포와 불교지도자를 초청한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가 개최되었다. 이 합동법회를 통해 분단 47년만에 남과 북의 불교지도자들간의 최초 만남이 성사되었다.⁵¹⁾

1992년 2월 12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가 창립법회를 갖고 초대회장에 월주스님이 취임했다. 평불협은 조계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들도 참여하는 범종단 차원의 기구로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9월에는 평불협 미주본부가 LA 관음사에서 창립식을 갖고 북한불교 지원 및 평화통일기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10월에 개최되는 동북아불교지도자 평화회의에 조불련을 초청했으나 조불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3년 7월에 전국불교운동연합이 창립되었고 10월에는 전국불교운동연합과 실천승가회 등 10개 단체가 민족통일을 위한 불자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1994년 8월에는 대한불교청년회가 임진각에서 평화통일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1995년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평불협 미주본부의 실무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조선불교도연맹과 회담을 가졌다. 남과 북의 불교 교류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측이 남한 불교도들의 통일투쟁 참여를 요구

50) 백자여래좌상은 조불련 중앙위원회가 만수대 창작사에 의뢰해서 제작한 것이다. 이는 1988년 11월 LA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참석했던 남한 불교계의 박완일 대표가 몽고대표단을 통해 금동반가사유상을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에 대한 답례로 전해진 것이다.

51) 이 법회 개최 이전 해외 불교도들의 대북한 불교교류에 대한 논의는 신법타, 「북한불교연구」(서울: 민족사, 2000), pp. 339~340 참조.

함으로써 실무회담이 결렬되었다. 같은 달 28일에 조선불교도연맹의 박태화 위원장이 당시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남북한 불교교류에 앞서서 조국통일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8월에는 평북협 미주본부 도안스님이 8·15 경축단 미주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1996년 2월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종교인 회의에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이 참가했다. 12월 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가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1997년 4월 북경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남북불교 실무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고 조계종은 조불련에 옥수수 1,380톤을 지원했다. 5월에는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가 서울 봉은사에서 발족했고 조계사에서는 북녘동포돕기 한생명 살리기 100일 법회가 시작되었다. 6월 10일 평북협 미주본부장 도안스님과 조불련 심상진 서기장이 불교계의 남북교류합의서를 발표했다. 9월 7일 도안스님은 평북협 미주본부를 중심으로 북한에 국수공장을 건설해서 조불련에 기증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발표했다. 12월 29일에는 조불련과 평북협 미주본부간에 금강국수공장 설립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1998년 3월 조선불교도연맹의 심상진 서기장과 평북협 신법타 회장이 남북한 불교교류와 금강산 문화재 복원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 따라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인 신계사의 복원을 금강산국제그룹이 맡도록 했다. 4월부터 사리원에 세워진 금강국수공장이 가동을 시작했고 서울에서는 금강국수공장후원회도 결성되었다. 6월 고 윤이상 선생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결성되었다. 9월 16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한 협약서가 금강산 국제그룹과 평북협간에 체결되었다. 11월 윤이상 통일음악제에 참가한 평북협 관계자들이 평양 광범사에서 개최된 윤이상 선생 천도제에도 참석했다. 1999년 1월 13일 범종교단체 남북교류협의회가 창립되었다. 4월 3일 평북협과 조불련이 북경에서 남북불교회의를 개최했다. 6월 17일 평북협 미주본부는 세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여자축구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개최했다. 7월부터 약 한 달간 평북협은 북한동포돕기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전국순례법회를 개최했다. 11월 27일 북경에서 조불련과 평북협간에 남북불교회의가 개

최되었다.

북한의 대남 불교교류 창구는 조불련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남한의 대북 불교교류 창구는 다원화되어 있다. 현재 남북한 불교교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남한의 불교단체는 진각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산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평불협, 정토회 등 다섯 곳이며, 원불교도 지난 95년부터 대북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한 활동을 벌여 왔다.⁵²⁾ 진각종은 조불련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임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⁵³⁾ 2002 5월에는 서울에서 북한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불련의 신임이 두터운 이유는 종단 전체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작품 전시회때 북한 작가가 그린 진각종 종조의 초상화가 전시된 것도 진각종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진각종은 북방포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불교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매년 2억원 씩의 통일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적립금 가운데 해마다 1억 원씩을 대북 지원사업에 쓰고 있으며 북한에 컴퓨터 교육센터와 복지센터의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⁵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개별 불교종단이 할 수 없거나 개별 종단에 귀속되지 않아서 범불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사업을 관장한다.⁵⁵⁾ 아울러 북한 조불련의 남쪽 카운터파트로서 남북한 불교간의 공동법회를 협의하고 실행하는 등 연락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2002년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 당시 남북관계 개선을 기원하는 봉축기도문을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에서 공동으로 발표했고, 6·15 정상회담 두 돌을 기념하는 공동 발원문도 발표했다. 태고종 주도로 탕화에 사용되는 재료와 그림기술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2·3억원 규모의 약기를 운이상

52) 원불교의 대북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명신, “원불교 대북교류 지원 현황 및 방향,” 『종교 대북협력의 현황과 과제』, 종교분과위원회 제47차 회의,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2년 4월 25일 참조.

53) 범보신문 남배현 기자와의 의견교환, 2002년 6월 26일.

54) 진각종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논문을 참조. 김선관, “진각종 대북 교류 현황과 향후 계획,” 『종교 대북협력의 현황과 과제』, 종교분과위원회 제47차 회의,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2년 4월 25일.

55)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김석오 총무과장과의 의견교환, 2002년 7월 29일.

음악연구원에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에 남북불교교류 위원회(조계종 사회부장이 당연직 위원장)가 있지만 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계종 산하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는 지난 97년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진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불추위)의 업무를 계승한 조직이다. 현재 민추본의 가장 큰 사업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이다. 2002년 5월에는 신계사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도 발간했다.⁵⁶⁾ 신계사 터에 남아있는 기울어진 석탑의 복원도 추진중이다. 2002년 부처님오신날에는 신계사 터에서 남북공동연등달기 행사를 갖고 2,000개 이상의 연등을 금강산에 달았었다. 현대아산과 공동으로 신계사 터 복원을 위해 북한과 접촉중이다.

평불협은 불교계 통일운동의 선구자로서 많은 업적과 성과를 이룬 단체이다. LA에 미주본부를 두고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북한 불교계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평불협이 이룩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남북한 불교교류사에 큰 족적을 남길 만 하다.⁵⁷⁾ 특히 1998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사리원의 금강국수공장은 매일 7,700여 그릇의 국수를 생산해서 성불사 인근의 유치원, 각급학교, 병원 등에 나눠주고 있다.

정토회는 좋은 벗들과 JTS(Join Together Society)로 구성되어 있다. 좋은 벗들은 통일운동기구로서 북한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천일기도 정진법회를 여는 등 대중적인 통일운동에 힘쓰고 있다. 반면에 JTS는 북한주민을 위한 구호기구이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탈북자 지원팀이 모두 철수했고 중국내 재산은 압류된 상태이다. JTS는 북한 내에서 현지 지원활동도 벌인다. 나진 선봉지역에 100여 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사무소도 갖고 있다. 탁아소·유치원 지원 활동은 강진과 청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01년에는 북한 사찰의 단청을 돕기 위해 2천

56) 「금강산 신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정보문화재 학술총서 10 (서울: 민족공동체추진본부, 2002).

57) 「평불협 10돌 백서」(서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2002) 참조.

만원 상당의 재료와 도구를 보내기도 했다. JTS의 장점은 사찰이나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JTS는 국내에서 벌이는 통일운동의 하나로 통일저금통을 만들어 배포하고 동전으로 대북 지원자금 1억원 만들기 운동을 펼쳤다. 현재 4억원 이상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JTS 청년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명동에서 거리 캠페인도 벌인다.

나. 개신교의 남북교류

1972년 7.4공동성명에 자극을 받아 NCC계열의 진보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 통일문제에 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뚜렷이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보수진영의 교회는 여전히 안보와 북진통일의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었고, 진보진영은 남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 보수교회는 조국근대화를 기치로 경제건설에 힘쓰면서 개인적 신앙수양에 전력을 기울였고, 진보교회는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우선 민주화를 이루고 그 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선민주 후통일론을 주로 주장하였다. 북한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1972년 9월 남북한 그리스도인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1975년 1월 인도 고타암에서 열린 ACPC총회에 김성울 등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1976년 11월 체코의 부르노에서 개최된 WCPC 정치·경제토론회에 참여하여 북한교회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밝힌다거나 ‘결의문 및 성명’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79년 전 숭실대학교 학장인 김성락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만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남북교회는 ‘7.4공동성명’이라는 남북의 정치적 데탕트 무드를 타고 통일과 남북접촉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폭넓은 만남과 교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80년대 들어 해외 한인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북한 기독교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고려민

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후 남과 북의 각자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연방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홍보하던 시기였다. 1981년 11월 비엔나에서 북한과 해외 한인 기독교자들간에 최초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들의 대화' 제1차회의로 열린 이 모임에는 강위조(재미), 이영빈(재서독) 목사와 북한의 고기준 목사와 임국현 장로(조그런 부위원장), 전금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주로 해외에 거주하던 진보교회의 지도자들에 국한된 만남이었고 연방국가 창립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정치적 모임의 성격이 짙었으나, 북한의 고기준 목사와 처음으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 모임은 2차(82. 12, 헬싱키), 3차(84. 12)로 계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WCC) 국제위원회는 1984년 10월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회'(도잔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회의에 북한이 참석하였고, 그 해 11월과 86년에 WCC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교회의 만남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제1차 글리온회의(86. 9, 스위스)가 개최되었고 남한의 KNCC 대표단과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이 만남으로써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기독교인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남한교회지도자(NCC대표) 6명과 북한인사 5명이 글리온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이다. 비록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스위스라는 이국 땅에서의 만남이었지만 남북한 교회지도자가 분단이래 처음 만났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남북교회의 교류는 해외 한인 기독교인들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북한교회 대표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남한교회 대표들과 만나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남한교회 대표들은 물론 진보진영의 교회들에 국한되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 혹은 한인교회에 민족의 통일을 선교적 과제로 받아들이려는 운동이 태동되기 시작했다.⁵⁸⁾ 1988년 11월에는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한 개신교 대표자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여기에서 남북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1995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평화적 통일에 앞장설

58) 박희민, "2001 치유, 화해, 통일을 향한 기독교 대화"(2001. 7. 9-10) 개회에배.

것을 결의하였다. 1990년 12월에는 남북교회의 만남이 매우 진전되고 내용도 알찬 3차 글리온회의가 개최되었다.⁵⁹⁾

1980년대 남북교회는 직접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의 한인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만남과 접촉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점차 직접접촉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⁶⁰⁾ 1980년대의 남북교회 교류는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남북공동의식을 확대해 나갔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회간의 모임과 회의에서는 대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문과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만남의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언문에는 대부분 미군철수, 남한 민주화 실현, 연방제 통일, 평화보장, 민족단결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1984년 10월의 ‘도잔소 보고서’는 남북교회의 교류증진을 위해 보다 포괄적인 방향제시를 하였다. 도잔소 보고서는 ① 분단의 극복과 평화·통일은 화해의 복음의 구체적 실천의 결과이며 목표라는 점, ② 평화통일은 남한교회만의 일방적 선교과제가 아니고 남북한 교회쌍방의 공동과제라는 점, 그리고 북한 내지 북한교회의 고립화가 아닌 개방화를 통한 비판적 협력을 강구했다는 점, ③ 한반도 평화·통일이 단순히 남북한만이 아닌 세계교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해외교인들이 북한 방문 및 접촉을 통해 노력하되 반드시 한국교회의 주체적 참여와 사전사후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세계교회협의회 총괄적 조정을 결정한 점 등으로 요약된다.⁶¹⁾

59) 박성준, “1980년대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에 대한 고찰,” 『신학사상』 71집 (1990년 겨울), p. 952; 이만열,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p. 51에서 재인용.

60) 천주교의 남북교류는 교황청을 통한 간접교류이거나 외국인 신부의 한국 출신 신부들의 개인적인 방북사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로마교황청의 지시를 받는 단일조직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마테오 신부(84. 3), 장익·정의철 신부(88. 10), 박창득, 남해근, 조영희 신부와 미주 카톨릭신자 9명(89)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88년 11월 1일 장충성당 축성미사 봉헌시 장익·정의철 신부가 참석하였으며, 1989년 6월에는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결성되었다.

61) 박종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교회의 실천(자료모음),”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1990), p. 3; 이만열,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p. 48에서

이러한 일본 도잔소회의 결과 드디어 남한에서도 85년부터 통일문제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었고, 제1차에서 5차 협의회를 거쳐 1988년 2월 NCC 총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KNCC 통일선언’은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과 더불어 민족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그리고 인도주의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하고, 평화교육, 이산가족 상봉, 남북교회 방문교류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였다는 점에서 이 선언의 생명력이 있다.⁶²⁾ 또한 KNCC통일선언은 남북한의 교회가 분단을 해소해야 할 신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1990년대 들어서 남북교회의 교류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남한 내적으로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정부는 ‘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한 것이었다. 남북간에 진행된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맺어지고 정부의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⁸⁹⁾

재인용.

62) 이만열, 앞의 글, pp. 58~59.

6)이 제정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규제를 넘어서 법률에 근거한 남북간의 교류와 접촉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한·소수교(90. 9), 한·중수교(92. 8)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주변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남북교회 교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남북한간에 합법적인 교류와 협력의 법제도가 갖추어짐에 따라 그 동안 진보교회 중심으로 진행되던 남북교회 교류에 보수진영의 교회가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보수교회 지도자들의 방북이 성사되고 보수교회와 북한교회와의 교류가 시작됨으로써 남북교회 교류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남북관계의 진전은 보수주의권으로 분류되는 복음주의 교회에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에 복음주의권 교회는 북한문제에 대해 ‘북한선교’라는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민족통일이라는 ‘민족문제’의 시각에서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없었다.⁶³⁾ 그러나 ‘로잔언약’(1974년)을 바탕으로 사회참여를 통한 ‘하나님나라’ 확장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복음주의권 교회는 세계적 이념지형과 한반도 주변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통일준비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만약 준비없이 통일을 맞는다면 통일은 우리민족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생겨났다. 이들은 80년대에 남한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목격하면서도 신학노선 때문에 신앙적인 열정을 잠재우며 뒷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비판의 공간이 조금씩 열려지면서 갈등 속에 침묵했던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참여와 통일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 보수진영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북한선교나 대북활동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선교’를 기치로 내건 전문선교단체들을 조직하여 주로 방송과 문서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대북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⁶⁴⁾ 보수진영 교회는 1990년대 통일환경이 변화되기까지 북한선교를 목표로 방송과 선교회 활동을 통해 대북활동을 전개하였다. 북

63) 이만열,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p. 66.

64) 김형석, “북한의 실상과 우리의 과제,” <http://sharing.net> 통일논문자료실.

한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전파를 이용한 방송과 풍선을 이용한 문서전달 등 휴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군사적 전술개념의 선교방법들을 강구하였다. 1977년에는 북한선교를 목적으로 한 ‘북한선교회’가 설립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갔다. “북녘 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는 슬로건 아래 김창인, 정석홍 목사 등에 의해 설립된 북한선교회는 이후 ‘기독교북한선교회’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모퉁이 돌선교회’는 1980년대 중국선교 과정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존재를 확인하고 1988년부터 북한의 지하교회를 대상으로 북한선교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식량과 의복을 지원하고 성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북한선교훈련원’, ‘두리하나선교회’(99. 10) 등도 복음주의 선교단체들도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전문선교단체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북한에 직접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지하교회 성도들과의 연결을 모색하고 실천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성경과 전도지를 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⁶⁵⁾

세계적인 탈사회주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전환적 상황 속에서 영락교회와 충현교회 등 보수진영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태동되었다. 한기총은 출범직후 1990년 5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통해 북한에 쌀 1만가마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북한이 1984년 남한에 홍수피해 구호품으로 보낸 데 대한 답례로 북한의 농민과 광산촌민들에게 구호품으로 보낸 것이었다.⁶⁶⁾ 한기총의 대북활동은 북한선교의 맥락에서 진행되어 온 남한교회의 이러한 보수적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공급하는 식량과 생필품

65) 김성태, 『북방선교의 실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p. 204~207; 모퉁이돌선교회, 『카타콤 소식 94』(1998. 6), pp. 6~9; 김형석, “북한의 실상과 우리의 과제”에서 재인용.

66) 김명혁, “인도적 차원의 통일노력 실상과 향후과제,” 『광복 50주년, 한국종교인 통일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위원회 토론회, 1995. 3. 30), p. 19.

들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배포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보수적인 일부 기독교인들은 구제는 어디까지나 구제일 뿐 기독교의 선교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중국의 조선족 보따리 장수들이나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에 식량과 성경을 제공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한기총의 이러한 관심은 점차 북한교회 재건운동으로 이어져 나갔다. 1995년 한기총은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에 존재했던 2,850교회의 명단을 조사하여 『북한교회 재건백서』를 발간하는 한편, 국내교회들을 대상으로 재건대상교회를 확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⁶⁷⁾

그러나 한기총이 추진한 북한교회재건운동은 통일을 대비한 준비활동으로 당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한기총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KNCC 교단으로부터도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기총의 대북활동은 점차 북한의 공식기관들과 접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기총이 명시적으로 북한의 공식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선교의 방향은 다분히 지하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활동의 속성상 북한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교회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한기총은 북한공식교회와 교류하며 수양관·교회 건립을 위한 접촉을 전개하였다.

북한교회 재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과의 접촉이 불가피하였다. 북한교회 재건과 관련하여 감리교계로부터 대북선교 활동의 전권을 위임받고 있는 ‘서부연회’는 98. 5 방북하여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북한교회 설립을 논의하기도 했다. 감리교는 최근 평양신학원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실시하며 평양신학원과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복음주의권 교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민족통일을 위해 진보와 보수가 연합하는 운동이 태동하였다. 1993년 4월 발족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당시 진보적 교회는 전반적인 진보적 사회운동이 국민적 지지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던 터라 새로운 지원세력이 필요하였고, 신앙적 열정과 물질 자원을 가진 보수교회는 진보진영의 노하우가 필요하였다. 특히 북한교회는

67) 한기총북한교회재건위원회, 『북한교회 재건백서』 (서울: 한기총북한교회 재건위원회, 1997), p. 413.

남한교회의 물질적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으며, 남한 보수교회의 재정적 잠재력은 남북교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 필요성에 의해 ‘나눔운동’은 남북교회의 교류를 촉진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의 연합운동으로 출발한 ‘나눔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와 보수의 균형잡힌 연합이라는 특성은 많은 부분 약해졌고 복음주의권이 주축을 이루는 느슨한 연합형태로 바뀌고 있다.

1990년 7월부터는 남북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다.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회의’(도쿄)가 시작된 후, 2차(91. 7, 도쿄), 3차(92. 10, 도쿄), 4차(94. 5, 도쿄), 5차(96. 6, 도쿄), 6차(98. 10, 오사카), 7차(00. 12, 후쿠오카)까지 이어져 남북한간 기독교 교류방안과 평화통일운동 및 선교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다. 1980년대를 통해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 동안 세계교회 협의회나 미국, 일본, 독일교회가 주최하는 형식으로 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의 문제를 토론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이 ‘동경회의’에서야 비로소 남북교회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선교’라는 담화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점차 많아짐으로써 진보적 성향은 조금씩 약해졌다. 북한교회의 시각에서 보면 선교라는 것은 위낙 제국주의적 침략의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 남한의 진보진영의 교회는 평화와 통일이 선교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싫어하는 선교라는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남북교회의 선교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평화와 통일이라는 데로 모아지면서 ‘선교’에 대한 반사적 거부감은 감소되었다. 1990년 7월의 동경회의에서 남북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해방 50주년이 되는 1995년을 회년으로 선언하고 특별히 성경의 회년과 우리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1991년 3월 ‘남북교회학자 심포지움’(LA)에 이어 5월 ‘북미 기독교사회 제25차 연례대회’(미국 스톤 포인트)가 개최되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95. 3, 교토), ‘미주 평화통일 회년대회’(95. 7, 신시네티),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세미나’(95. 10, 뉴

저지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협의회’(96. 1, 마카오) 등을 통해 남북의 교계지도자들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1996년 2월 중국 북경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내 10개 종단 협의기구인 한국종교협의회와 북한 종교인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남북종교교류 문제를 논의하였다. 1997년에는 개별 차원에서 보다는 KNCC, KCRP 등 종교단체의 각종 국제회의를 통한 접촉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순수 종교목적 외에도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가 대북접촉의 계기가 되는 양상을 보였다. 접촉이 이루어진 주요사안으로는 ‘남·북·미 교회협의회’(97. 3, 뉴욕), ‘남북한 종교지도자 회의’(97. 5, 북경), ‘남북 천주교인 세미나’(97. 6, 북경) 등이다. 98년에는 ‘통일과 나눔 남북교회 협의회’(98. 3, 시드니)이 성사되었고, 1999년에는 KNCC, 감리교 서부연회 등 남북종교인 교류협력방안 협의 목적 등으로 접촉하였고,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99. 4, 북경) 등에서 남북교회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1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조선그리스도연맹과의 종교교류 협의(01. 3),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협의(01. 3), 금강산 평화모임 협의(01. 3), 남북불교교류 협의(01. 4), 개천절 공동행사 협의(01. 4), 남북 기독교 교류협의(01. 6) 등이 있었다.

종교교류 가운데 개신교는 전체 종교교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경우 개신교가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며 불교가 16%, 천주교와 천도교가 각각 7%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NCC는 1986년부터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남북교회 교류는 실제로 KNCC가 주도하였다. 1990년대 들어 ‘한기총’이 북한선교를 위한 대북접촉을 시작하면서 보수진영 교회도 통일문제를 선교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교회의 문제로 다루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보수교회와 진보교회가 북한교회와의 협력에서 누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냐 하는 문제로 긴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보수진영 교회의 경우 북한선교나 인도적 차원의 북한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보

이고 있으며 백두산 통일기도회, 성경보내기 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보수교단이 주축이 되고 일부 진보적 교단도 동참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도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와 나진·선봉지역에 예배소, 병원, 탁아소 건립을 논의하는 등 남북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98년 4월 1차 쌀모으기운동을 통해 쌀 60만톤을 전달한 바 있는 KNCC도 98년 1차 쌀모으기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강산단체방문 등의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남한교회는 한기총과 별도로 교단별, 개교회별로 북한선교와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5년 북한의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된 인도주의 대북지원에 남한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교회와 교류하는 남한교회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확대되었다. 1990년대의 남북교회 교류는 기존의 통일운동 차원에서부터 구체적인 대북지원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보수진영의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한기총, 1990년)’과 ‘사랑의 의약품 나누기 운동’(1991년, 1997. 2 ‘한민족복지재단’으로 발전)을 전개하였다. 거기에 1995년부터 시작된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생산이 급감하고 대규모 기아사태가 발생하여 식량과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남한교회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구호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보수적인 남한교회가 북한돕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연합(UN)이 국제사회에 북한을 돕기 위한 ‘긴급호소’를 시작하였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데서 자극 받은 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1995년

68) 유엔 인도지원국(UNDHA)은 95년 홍수피해 이후 WFP(세계식량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등 UN산하기구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대북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UNDP, WFP, UNICEF 등 유엔의 인도적 구호기관과 월드비전, MCI, CARE USA, 캐톨릭구호기구(Catholic Relief Services), 국제아미고스(Amigos Internacionales) 등이 공동으로 식량지원연락사무소(Food Aid Liason Unit: FALU)를 운영하며, 국제적십자연맹(IFRC), OXFAM, CARE, ACT(Action by Churches Together) InterAction(160개국, 150개 인도적 구호개발 난민기구 연합체) 등도 대북지원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지원 사업이 개시된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국제사회와 남한이 북한에 지원된 대북지원은 총 21억 1,77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9%인 6억 1,196만 달러가 남한에서 지원되었다. 남한에서 지원된 대북지원 총량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인 1억 6천만 달러에 이르며, 나머지 4억5천만달러는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98년 이후 각각 4.8억 달러, 2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국내의 민간 대북지원 가운데 기독교계가 기여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기독교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주의 대북지원을 총괄하는 통일부에서는 대북지원 자료나 통계를 특정 종단별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북한에 지원한 실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경험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가운데 약 3분의 2가 기독교계 지원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2001년 말까지 민간차원에서 지원한 1,960억원 가운데 적게 잡아도 1,200억원(1억 달러) 이상이 기독교계가 지원한 금액이 될 것이다. 기독교계의 지원은 많은 부분이 한민족복지재단, 유진벨재단, 남북니눔운동, 월드비전, 한국이웃사랑회,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기독교 배경을 지닌 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이나 유니세프 등 국제 NGO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교회나 교단은 대부분 99년 창구다원화 조치 이후에도 대북접촉 채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독자적인 대북지원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독교계통의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대북지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1년 대북지원실적을 사례로 살펴보자. 2001년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총 6,494만불(844억원)이며, 이 가운데 한적창구를 통해 지원한 금액(286억원)을 제외하면 19개 단체가 독자창구로 지원한 금액은 4,294만 달러 (558억원)이다. 기독교계의 지원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기독교적 배경이 강한 단체로 간주되는 한민족복지재단, 기독교북한동포돕기후원연합회, 한국이웃사랑회, 유진벨재단, 월드비전, 국제옥수수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의 대북지원 비중은 전체의 59.8%를

차지한다.⁶⁹⁾ 여기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 등의 단체는 제외하였다. 즉 대북지원의 60% 정도가 기독교계에서 지원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일반적으로 대북지원의 3분의 2가 기독교계의 지원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아주 틀린 판단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기독교계의 대북지원이 다소 과대평가 되었을 것이라는 신중한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는 기독교계 지원의 대부분이 교단이나 교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데서 느껴지는 판단인 것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개별교단이 직접 대북지원을 실시하는 예가 드물고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계가 독자창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북지원은 탄력을 얻게 되었다.

개교회나 선교회 차원에서 해외 한인교회 및 선교회와 연결하여 벌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지원품목도 의약품, 의류는 물론 비료,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고, 일회성의 식량지원에서 국수공장, 빵공장 설립 등 지속적인 대북지원 형태로 발전하였다. 보수교단과 진보교단이 참여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은 1994년부터 식품과 의류, 의약품 등을 북한동포들에게 꾸준히 전달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분유, 의약품 등을 지원하였고, 나진·선봉지역에 사회복지센터 건립을 논의하는 등 대북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97년 2월 출범한 「한국기독교 북한동포후원연합회(식량은행)」도 개신교계를 대표하여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동 연합회는 최근 20여개 의류업체에서 기탁받은 7억 1천여만원 상당의 이동복 2,500여점을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지원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에스라운동협의회」는 미국에 있는 CANKU (Center for American-North Korean Understanding)와의 연대하에 남한에서 출판된 종교서적 및 선한 사마리아 생명현금 등을 전달하였고, 미국 GOD(Global 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기증을 받아 1백만달러 상당의 의료기구 및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월드비전 한국지부,

69) 통일부, 「2001 남북교류협력 추진실적(종합)」, (서울: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2).

도 “북한식량지원 사업개요”를 세우고 1995년 옥수수 500톤 지원을 필두로 미국지부와 연대하에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 천주교의 남북교류

한국의 천주교회는 1984년 한국교회 창립 2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북한 선교를 염두에 두고 기념사업부안에 「북한선교부」를 설치하였다. 북한선교부는 1985년 「주교회의 북한 선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교회의 전국위원회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선교위원회」는 북한 교회의 재건과 북한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통일사목연구소와 북방선교협의회를 두었다. 통일사목연구소는 북한 선교활동을 위한 기초작업을 위한 것으로 1988년 5월 창립되었다. 「북한선교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 대북선교 및 통일사목연구사업, 교육사업, 간행물 발간 등 홍보활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는 1992년 3월 춘계 주교회의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도라산전망대에서 평화통일 기원미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5년 서울 대교구에 「민족화해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당시 서울대교구장인 동시에 평양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던 김수환 추기경이 광복 50주년인 1995년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민족의 화해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1995년 3월 서울 대교구에 「민족화해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서울대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최창무 주교가 임명되었으며 명동대성당에서 매주 화요일 민족화해 미사가 봉헌되었다. 그리고 1995년 10월 민족화해학교가 개설되었다. 서울 대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는 이후 전 교구를 망라한 대북선교활동 조직인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결성되는 모태가 되었다.

한편 「북한선교위원회」는 1999년 10월 추계 주교회의에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각 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 및 수도회를 연계하는 전국적인 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각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수도회가 전개하는 민족의 화해를 위한 기도운동을 비롯하여 대북지원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대북지원 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위원회, 북한 난민 지원 소위원회, 협력전문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의 사업을 지원한다.

남북한의 사제간 만남은 제 3국에서 시작하여 북한지역에서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북한측의 장재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대표단이 1993년 4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이기현 신부를 비롯한 재일 교포 신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서울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8회에 걸쳐 미국, 중국에서 북한 천주교인과 접촉하였다. 미주 교회의 주선으로 1995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뉴욕에서 서울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와 북한의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접촉하였다. 남한측에서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인 최창무 주교를 비롯한 7명이 참가하였고 북한측에서는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참가하였으며 미주교회에서는 박창득 신부(미국 뉴저지 오렌지성당)를 포함한 5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2차 남북 천주교인 접촉은 1997년 6월 중국 북경에서 이루어졌다. 3차 남북천주교인 접촉은 1998년 3월 북경에서 이루어졌는데, 남한측이 옥수수 3천 톤과 비료 1천 톤을 지원하기로 하고 부활절에 남과 북, 해외에서 평화통일미사를 동시에 봉헌할 것이 합의되었다. 4차 남북천주교인 접촉(1998. 7. 13~15)에 이어 중국 대련에서 이루어진 5차 남북천주교인 접촉(1998. 9. 14~18)에서는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울 대교구 민화위원회는 북한의 아태위원회와 2000년까지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기로 하고 옥수수 지원시 모니터링과 식량도착 및 배급 과정에 대한 사진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의향서를 교환하였다. 이후 6차 남북천주교인 접촉(1999. 4. 5~7), 7차 남북천주교인 접촉(1999. 5. 2~3), 8차 남북천주교인 접촉(2000. 3. 27~29)이 이루어졌다.⁷⁰⁾

70) 김대민, “카톨릭 대북지원 활동의 현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

서울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998년부터 6차에 걸쳐 북한을 직접 방문하였다. 1차 방문(1998. 5. 15~22)에는 최창무 주교 외 6명이 평양, 평안남도, 강원도 원산 등을 방문하였다. 최창무 주교 일행은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방북하여 평양 장충성당에서 북한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하고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최창무 주교 일행은 103위 한국 순교성인 가운데 평양지역에 관련된 유정를(베드로, 1835~1866) 성인의 유적지인 평양시 역포구역 대현리 평양과수농장 일대를 답사하였다. 2차 방문(1998. 12. 12~15)에는 이기현 신부 외 2명이 평양과 남포를 방문하였다. 3차 방문(1999. 12. 4~11)에는 최창화 신부 외 3명이 평양과 황해도를 방문하였다. 4차 방문(2000. 7. 8~15)에는 정광웅 신부외 3명이 평양,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리 협동농장, 황해도 신천군 백석 협동농장, 평안남도 안주시 풍년동 식량공급소를 방문하였다. 5차 방문(2001. 3. 20~24)에는 정광웅 신부 외 4명이 평양, 남포,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을 방문하였다. 6차 방문(2001. 7. 17~24)에는 정광웅 신부 외 2명이 평양, 남포시 국수공장, 황해남도 신천군,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을 방문하였다.

천주교의 대북 종교교류는 대북지원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대북지원사업은 긴급구호사업, 농업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긴급구호사업은 식량(옥수수, 감자, 밀가루)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며, 농업지원사업은 각종 종자의 씨앗, 옥수수, 씨감자와 농업기자재, 비닐, 농약, 비료 등을 지원하고, 의료지원사업은 의료기자재와 의약품을 지원한다. 대북지원의 창구는 서울대교구·한마음 한몸운동본부이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각 교구 및 수도회의 대북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명의로 별도 창구를 개설하고자 한다.

대북지원사업 및 남북 천주교 교류는 각 교구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톨릭 교구 가운데 가장 활동이 활발한 것은 서울대교구이다. 서울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약 97억 7,100만원을 북한측에 지원하였다. 서울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연도별로 북한에 지

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서울 대교구의 대북지원 내역

연도	중간기탁처 및 직접기탁처	품목	금액
1995	대한적십자사/뉴저지 한인교회	밀가루	2억 4,000만원
1996	중국교회/대한적십자사/뉴저지 한인교회	밀가루	2억 7,000만원
1997	대한적십자사/유진벨재단/뉴저지한인교회/불교운동본부(JTS)/중국 단둥 천주교회/조선천주교인협회	밀가루, 감자, 옥수수, 탈곡기, 어린이영양식, 과자, 사탕, 양말, 옷 등	26억 8,900만원
1998	중국단둥천주교회/불교운동본부(JTS)/조선천주교인협회/홍콩 까리타스/유진벨 재단/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밀가루, 과자, 사탕, 양말, 어린이영양식, 옥수수, 비료, 탈지분유, 입쌀, 타올, 의약품, 비닐, 결핵약 등	32억 5,200만원
199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리아태위원회/중국 단둥 천주교회/오렌지한인교회/조선카톨릭교협회	밀가루, 비료, 옥수수	9억 7,800만원
2000	조선카톨릭교협회/남양알로에(현해주고려인 지원)	어린이 이불, 옷, 버스, 옥수수, 옷감, 양말, 벼	7억 2,900만원
2001	라선시 빵공장/평남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남포·평양·황해도 신천 국수공장	공장부지/설비부품, 모판용 비닐, 국수기계, 밀가루, 옥수수	9억 6,400만원
2002년 9월현재	조선카톨릭교회/한마은 한몸운동본부	빵 제조 원료, 모판용 비닐, 밀가루, 옥수수, 발전기	6억 4,700만원

춘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남북 한삶 위원회)는 1997년부터 북한에 농업지원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춘천교구는 유진벨 재단과의 협력하에 결핵 및 간염예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4> 춘천 교구의 대북지원 내역

연도	내역	금액
1997. 6~2001	북한 적응 슈퍼옥수수 개발기금후원	7,000만원
1998. 9	북강원도에 감자 300톤 지원	1억 3,000만원
1999. 11	북한 원산대에 씨감자 30톤 지원	6,300만원
2000. 11	백신 접종차량 지원	1억 1,000만원
2001. 2	남북강원도민 서로돕기 운동기금 지원	20만원
2001. 4	간염예방접종차량 지원	1억 800만원

대전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의 감자재배 및 운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교구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동불사진 일대 12ha에 감자를 직영하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 기신진 일대 30ha를 조선족에게 위탁경영하여 수확량을 북한에게 전달하였다. 대전교구는 1차(2001. 9)로 327톤(직영수확 200톤, 구매 127톤)과 2차(2001. 10)로 510톤(위탁경영 농민에게서 구매)을 북한 외교부 뉴욕대표부에게 전달하였다. 총 지출액은 9,300만원이었는데, 한국에서 이 정도의 감자를 구입하였을 경우 예상 지출액은 7억 1,000만원이었다.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양초, 분무기 등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나진·선봉지역 병원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1997. 4), 개성시와 나진·선봉지역 어린이집 및 유아원에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쌀 60톤(2000. 4)을 지원하고, 북한 장충성당의 냉난방 시설 건설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다(2001. 1). 부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에 1,000만원 어치의 의료용품을 지원하였다(2001. 7). 청주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옥수수사업의 기금으로 7,200만원(1999. 3~2000. 11)을 지원하였으며, 간염예방용 차량 1대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비닐하우스 자재 및 농약, 비료 보조로 1,000만원(2001. 11)을 지원하였다.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국제옥수수재단에 900만원(2001. 3)을 지원하였다.

북한의 유일한 성당으로 남북한 천주교회의 화해와 일치의 상징인 평양

장충성당이 1998년 9월 말로 설립 10돌을 맞았다. 김승훈 신부를 비롯한 9명의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는 1998년 8월 11일부터 북한을 방문하여 8·15 53주년과 함께 장충성당 10돌을 기념하는 미사를 집전하였다.

한편 카톨릭 수도회별로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메리놀 외방 전교회 한국지부는 2000년에 결핵 관련 의약품과 의료기구,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 옥수수 등을 지원하였다. 1995년 5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성베네딕 수도원의 김상진신부가 북한을 방문하였다. 김신부는 김영환(대구가톨릭대학 의학부총장), 안경렬 신부, 김석좌 신부 등과 함께 방북하여 라진에 2백 병상 규모의 병원건립문제를 협의했다. 김상진신부는 1997년에도 방북(5. 28~30)하여 의료선교문제를 협의하고 라진병원 기공식에 참여했다. 2000년 4월에도 성베네딕 수도원의 신부와 수사 3명은 라진 지역 국제카톨릭병원 건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였다.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중국 단둥을 통해서 면, 양초, 옥수수 등 7,7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조선카톨릭교협회를 통해 4컨테이너 분량의 일용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샬트르 성바로로 대구관구 수녀회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가 북한돕기 기금을 조성하여 한국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를 통해 북한에 기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서울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 성 바오로 딸 수도회도 의류, 식량 등을 지원하였다.

라. 민족종교의 남북교류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는 2000년 5월 1~2일 본회 사무총장,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천도교 실무자회담에 참석하여 조국의 自主의 民主統一을 이루기 위하여 남북에 실재하고 있는 천도교 조직이 자주적인 신앙 역량을 확대하고 和解와 平和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에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이 민족 앞에 약속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동 선언의 실천적 과제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에 즈음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9~13일 본회 사무총장 등 2인이 5박6일 일정으로 방북하여 북

한 천도교회와 청우당을 방문, 남북한 천도교와 前衛團體의 재건중흥 방안 및 그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1년 6월 19일 본회 임운길 의장은 북한 청우당 위원장과 회담 차 평양을 방문하고 류 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청우당 관계자와 접촉하여 남북 천도교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 같은 해 8월15일 ‘8.15 남북공동행사 평양축전’에 양제호, 진방식 운영위원, 오훈동 사무총장 등이 참가하여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와 천도교 청우당을 방문하고 합동시일식을 봉행하는 등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2001년 6월 남북천도교 대표자회의(6. 20~6. 22, 평양)를 개최하고 동학사적지 공동조사,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등 상호교류문제를 협의하였다. 2001년 9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남한 천도교 중앙총부 김철(金哲, 73) 교령 일행이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과 회동했다. 양형섭 부위원장은 교령 일행과 동포애의 분위기속에서 담화했다으며 이 자리에는 북한 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류미영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교령은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류미영 위원장 등 북한 천도교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한 천도교간의 교류와 공동행사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측천도교 대표단은 ‘천일(天日)기념식’(1860년 4월 5일, 동학이 시작된 날)등 각종 기념식 공동개최, 북한내 천도교 교당 복원·보수, 남북한 천도교 역사 및 사적지 공동 발굴, 경전 공동출판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2002년 10월 3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참가한 개천절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 위원장과 단군 민족통일협의회 회장인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 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안경호 국장 등이 참가했고 남측에서는 천도교중앙총부, 대중교 총본사, 민족종교협의회, 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국학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대표들과 종교계 학계 인사들을 망라한 남측 개천절 기념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회원 등 126명이 참가했다. 남측 개천절 기념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한양원 위원장은 “민족분열 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여기 단군릉에

서 개천절을 뜻깊게 기념하게 됐다”며 “6.15 선언은 우리 민족이 분단의 치욕을 씻어내고 세계 인류 평화 달성의 향도자로 나설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류미영 회장은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역사도 하나 문화도 하나인 우리 단군민족이 더 큰 하나가 되어 부흥하고 발전하자면 하루 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종교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남북 종교교류의 제도화를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종교교류에 대한 입장을 분석·평가한다.

북한은 폐쇄적이며 종교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체제의 속성상 대폭적인 종교교류를 추진하는데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교류 협력을 통해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짐으로써 개방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남한과의 접촉과 인적교류가 자본주의 사조 및 민주적 사조의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체제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종교교류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종교교류의 국내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그동안 손상된 국가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는데 신중하게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서방세계와의 경협 증진과 대외무역 확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교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방세계권의 종교세력 및 남한 종교인들의 동향과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자, 종교단체들의 대외적 활동을 통해 통일전선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대미관계 개선을 겨냥하여 종교인들을 대미 외교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종교인들의 교류를 통해 정치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천주교연맹위원장 장재철을 단장으로 한 종교인·학자대표단(95)을 미국에 보내 외교전선에 나서게 하고, 리종혁과 박승덕 주체사상연구소장 등 일행이 북미주기독교자협회 주체 세미나(96.

4)에 참석하게 하여 대미협상 및 관계개선을 측면 지원하게 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종교단체들을 외교적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남한정부 배제전략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북한은 종교인들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종교교류시 보안법철폐, 방북인사 석방 등 정치적 선결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직면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남한의 종교단체들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종교계가 대북 쌀지원 문제로 마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동시에 기독교, 카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로 구성된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범종추)에 쌀을 포함한 수재지원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국정부와 종교계간의 마찰을 가능한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연방제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통일투쟁을 선동(96. 1)하였고,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는 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와 합동전원회의(96. 2. 2)를 갖고 정당·단체연합회의(96. 1. 24)에서 제기된 대민족회의 소집을 위한 남북간 종교인들의 대화접촉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종교인들의 애국적 투쟁사를 강조하며 종교인들이 조국통일과 연방제를 지지하도록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신앙인이기 전에 먼저 민족의 한 성원이며...따라서 종교인들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조국통일의 주인으로 나서서 그 실현을 위해 주동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국통일성업에서 종교인들이 가져야 할 다른 하나의 중요한 자세는 연방제통일의 지지자로 나서서 그의 적극적인 추진자로 되는 것이다.⁷¹⁾

북한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닌 정치인임을 잘 알고 있다. 1990년 4월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687명) 가운데 종교단체 대표 6명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강영

71) 홍경란, "조국통일과 종교인의 자세," 『조선사회민주당』, 1993년 3월, pp. 56~57.

섭과 ‘조선불교로연맹’ 위원장 박태호는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천주교인협회’ 위원장 장재철 역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이다. 이들은 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인들로서 이들의 움직임은 신앙적 의미의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다.

북한은 남한종교계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체제의 특성상 교류·협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군사적 경쟁과 대립 구도속에서 남한종교계와 선별적인 접촉을 통해 보안법철폐, 핵무기철수, 방북인사 석방 등 정치적 조건을 내세우거나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도록하는 통일전선 구축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3. 남북한 종교교류의 특징 및 문제점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이후 남북한 종교교류는 특별히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남북한은 그동안 종교교류를 통해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대북선교의 가능성과 방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었다. 남북한 종교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일과정에서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타영역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이다. 통일을 국토가 하나되고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것뿐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면 과거부터 남북한간에 문화적 동화를 이룰 수 있는 종교교류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한국 불교는 이미 2,5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과 접목되어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있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전통문화는 상당부분 불교문화 그 자체이며 특히 불교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호국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통일의 여정에서 불교의 역할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천도교와 같은 종교는 북한 정권이 여러 이유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종교교류는 교류가 활발한 만큼 여러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문제점으로는 첫째, 남북간의 종교교류가 지나치게 통일논의 위주의 교류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과 종교교류가 다양한 종교단체들에 의해 여러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들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남북 종교인들의 만남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통일'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통일이라는 주제하에 남한 및 해외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 구축이라는 정치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종교교류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안법 철폐,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정치적인 문제를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종교인의 관심은 주로 선교나 포교 등 교세확장에 쏠려 있기 때문에 통일을 앞세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묵인하면서 제한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종교계의 일부 단체들이 반정부운동과 통일운동을 결부시키는데서 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선스님이 회장으로 있는 민족자주통일불교협의회(통불협)는 재야단체와 연대해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이면서 간헐적으로 북한과의 불교교류를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한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선스님과 청화스님이 의장으로 있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실천승가회)는 통일음악제, 백두산 산행, 군축운동 등을 추진하면서 통일원년 선포 종교인대회, 분단 희생영령 천도제, 남북해외 불교도 통일한마음 대회 등 통일운동과 불교종단의 개혁운동을 함께 벌여나가고 있다. 이들 재야단체들의 통일운동은 정부의 승인을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둘째, 다원주의 민주사회에서 종교현실도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북선교의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교과주의적 분열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모든 종교단체들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종교인협의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면서 대남교류에 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한의 여러 종교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추진할 경우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상호협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 종교계는 조불련이나 조그련으로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는 반면에 남한종교의 대북창구가 다원화되어 있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남한종교계의 창구 다원화에서 오는 문제점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조불련이나 조그련, 천주교협회 등이 남한종교계의 대북 지원단체들간에 경쟁을 시킴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남한의 종교단체들간에 종교의 첫번째 덕목인 화합이 손상될 수 있고 대북 교류협력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남한 종교단체들이 같은 성격의 사업에 2중, 3중으로 참여함으로써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현대아산과 공동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해 북한과 접촉중인데, 이는 평불협과 금강산관광그룹간의 금강산 문화재 복원에 대한 합의와 중복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남북종교교류는 상호 교류가 아니라 남한측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지원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 종교의 대북접촉은 북한측 접촉 창구인 조불련이나 조그련, 조선천주교인 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다. 초기에는 제 3국에서 남북한 사제간 만남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남한측 성직자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 종교지도자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측 성직자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북한측이 남한을 방문하지는 않고 있다.

넷째, 남북종교교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종교계의 대북지원은 선교와 무관하게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적 지원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히 북한은 종교교류를 남한으로부터의 지원물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북지원 품목은 옥수수, 감자, 우유 등 곡물과 구호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약품, 의류, 농약, 농기구, 기계설비 등도 지원되고 있다. 북한측은 구호품과 식량지원을 넘어서 병원건설 지원, 식품가공공장 건설 지원, 복지관 건설 등 규모가 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대북지원활동은 12개의 교구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구별로 교세에 따라서 대북지원활동에 있어서도 편차가 크다. 이 가운데

교세가 큰 서울 대교구가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춘천교구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른 교구에 비해서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그리고 20여개에 이르는 수도단체가 대북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남북종교 교류협력에 임하는 자세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종교와 무관한 정치적 사안의 해결도 요구하는 과도한 의욕을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은 종교분야에 국한되어 종교 본연의 자세와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IV.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한 종교상황의 전망

1. 실질적 통합단계와 북한 종교지형의 확대

남북관계가 실질적 통합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루어지고 통일을 위한 과도기단계로서 남북연합이 구성된 이후 모든 부문에 걸쳐 본격적인 통일의 준비를 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민족공동체」 실현의 첫 번째 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다.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안정된 관계가 형성된다.⁷²⁾

화해·협력단계에서는 ‘1민족 2국가 2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간 사회·문화·경제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의해서 남북간 평화공존체제가 정착된다. 「남북기본합의서」 및 각종 「부속합의서」,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이 공고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단계에서의 주요과제인 남북간 불신 및 적대관계의 청산,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은 다음 단계인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화해·협력단계는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데에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 통일논의의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준비의 기초를 제공하지만, 본격적인 통일의 준비는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 단계는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구축, 평화공존이 정착·제도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통일국가로 탄생할 때까지 통일의

72) 박영호·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37.

기반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체제로서 특수한 기능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연합의 체제적 특징은 연합정부는 대외적으로 제3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주권성을 갖지 않으며, 남북한 각기 주권을 가지고 정치·외교·군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2체제 2정부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남북한간에는 국제법상의 관계가 아닌 국내법에 준하는 특수한 법적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⁷³⁾ 이렇게 볼 때, 서로 다른 체제로 분리된 단일민족이 재결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상된 남북연합이라는 결합형태는 대내외적으로 모순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남북연합단계를 지나면 본 연구에서 전망하고자 하는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른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통일의 완성은 통일헌법이 제정·발효되는 때가 기점이 될 것이다. 남북연합 후기에 남북간의 공존공영이 정착됨으로써 통일여건이 완비되어 가면 최종적으로 남북한은 남북평의회를 통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여 이를 남북한 주민 전체의 국민투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국가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단계는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을 통해 통일정부를 결성함으로써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하고 평화통일을 완성하는 단계, 곧 「통일헌법」의 이행·실천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의 형태에서 실질적 통합단계로 들어서는 시점은 남북한 통일의 전과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단계를 거친다고 할지라도 남북연합의 2국가 2체제에서 막상 1국 1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갈등, 실제적인 이행문제 등 한꺼번에 무수한 과제를 극복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

73)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2), pp. 85~86.

록 장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북연합에서 통일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환시기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보다 세분화된 단계로서 실질적 통합단계를 상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커다란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실질적 통합단계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통합의 단계에서 별개의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 내에서 통일을 목전에 두고 통합준비의 완성 또는 실제적인 실행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체제에서 통합이 제도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정착된 시기이며,⁷⁴⁾ 법·제도적 국가통합의 최종 단계만 남겨 놓고 있는 통일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동안의 모든 준비과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질적 통합시기야말로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양적·질적 통일과제가 집중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남북연합 단계를 통틀어 본다면 초기에는 주로 그 동안의 화해·협력을 보다 더 긴밀한 협력·유대관계로 이끄는 것과 남북연합체제를 형성시키고 공고히 하는 것,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부문에서 통일 국가의 기본체제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남북연합이 제도화되어 정착되면 비로소 실질적 통합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체제의 제도화가 심화되고⁷⁵⁾ 공고해지는 남북연합의 성숙기를 의미한다. 이 때부터는 문자 그대로 남북 통합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문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도적 통

74) 동서독의 경우, 실질적 통합은 1990년 5월 18일 동서독간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에 체결한 이후 가속화 되었다.

75) 통합과정에서 통합정도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것은 통합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결정된다. 즉 합법적 절차 및 과정에 의한 통합은 제도화가 높은 상태로서 통합체제의 안정성이 높다. 반대로 통합과정의 비제도화상태에서는 통합체제의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 통합에 필요한 제절차를 통합에 임하는 두 체제간 상호 합의하에 확정짓는 것이 통합의 제도화에 중요요소가 된다;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 Press, 1968, p.12; 김도태,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이해”, 『국방논총』, 제20호, 1992, p.39.

일을 이루기 이전에 남북 양 체제가 실질적인 부문에서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자체적인 체제변혁을 통해서 체제적인 동질성을 미리 확보하고 이질적 체제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두 개체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국가로 두 체제가 결합하는 데에 따르는 구체적인 세세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남북한의 종교상황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특히 북한사회 내의 종교지형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평양에 봉수교회와 창충성당이 들어선 1988년, 그리고 불교의 성도절(成道節) 기념법회를 전국사찰에서 가진 1989년 이후 종교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찾아올 국제손님들에게 “종교가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씻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임을 과시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적 측면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로부터 연유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대외관계 개선 필요성과 같은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사회의 전반적 변화의 속도와 범위, 수준에 따라 북한의 종교지형도 변화될 것이 확실하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상봉,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발효(02. 9. 17) 등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2002년 9월 이후 이산가족상봉, 남북통일축구를 비롯하여 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 및 응원단이 대거 참가하여 남북관계의 분위기는 매우 고조되었다. 여기에 금강산 육로관광이 개통되고 개성공단이 조성되어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마도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전에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더불어 2002년 7월 1일 북한정부는 물가조정, 임금인상, 개별기업소에 대한 계획, 생산, 판매의 자율화를 단행하였다. 일상생활용품을 비롯한 국정가격 전반을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실제 가격으로 20~40배 인상하였으며 국가가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각종

서비스를 폐지하고 유료화하였다. 이와 함께 이금을 기존의 200원에서 2,000~3,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2002년 9월 19일에는 신의주 행정특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무비자’로 신의주지역 방문을 허용할 채비를 갖추는 등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은 본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북한사회는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시장형성과 자본주의적 교환관계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배급을 받는 무상배급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임금노동의 제도로 변화될 것이다. 주민들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생산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누진노급제’를 강화할 것이며, 농업부문에서도 집단농장제에서 개인영농제로 전면 개편될 것이다.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북한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남북한 간에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북한사회에 체제전환기에 수반되는 사회적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사회주의 복지제도에 익숙한 북한사람들 가운데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경제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류가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을 보더라도 체제변혁기에 겪게되는 고통스런 상황으로 인해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변화된 체제에 대한 불만이 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주민들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종교활동의 공간도 넓어질 것이다.

북한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이러한 개혁·개방의 변화들이 국가통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탄압국’이라는 누명을 벗고 대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교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개방은 북한사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종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의 종교지형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제도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되고 제도화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남북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정상회의, 각료회의, 실무회의, 남북의회 등을 축으로 하는 중앙연합기구의 통제력이 점점 강해져 외교권과 국방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통제하는 시기가 되면 정치적 통일은 아니지만 태풍의 눈과 같은 남북간의 전쟁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통제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일단 통일의 실질적이며 안정된 기반을 갖춘 셈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안정된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제도의 일원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통일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각 정파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남북한의 현재 정당들이 앞으로 이 단계까지 정당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한반도에 적어도 5~6개의 정당들이 정권획득을 위해 경쟁적인 정치활동을 벌일 것이다. 동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볼 때 이 시기에 이르면 과거 공산당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게 되어 대부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간판을 달고 신당을 창당한다. 정치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활동을 계속할 터이니 사회주의 정당이 통일국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남한의 정당이 분열된 채 연합의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통일한국의 정치지도력은 사회주의 쪽으로 가게 될 공산도 없지 않다. 이 시기에 남북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정치갈등은 고조된다. 문화적인 이해를 제고하지 못하면 남북한은 심각한 심리적 분열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의 종교적 지형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형성될 북한의 종교지형을 진단하기 위해 종교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종교단체와 국가와의 상호관계에서 종교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가 한 사회의 종교지형을 특징짓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세계종교사를 통해 볼 때 종교는 정권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세계종교사를 통해서 볼 때, 종교는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① 국교

체제 → ② 준국교형 공인종교 → ③ 통제형 공인종교 → ④ 다종교로 진행되어 왔다.⁷⁶⁾ 이 역사적 진행은 종교의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확보된 과정을 보여준다.

국교체제란 하나의 종교가 국가권력의 신성화를 보장하는 형태의 종교를 지칭한다. 종교는 통치이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신성화를 보장하고, 통치권은 국교의 권위를 확고하게 지켜준다. 이처럼 국교는 신성정권의 이념적 기반이 되고, 정권은 자신의 안정과 국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교 이외의 타종교를 탄압하거나 또는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국교제도는 종교와 정치권이 사실상 하나의 통치세력으로 결합하는 결과에 이른다. 서양의 중세 기독교 사회와, 현재의 이슬람 사회가 그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공인종교는 국교체제와 다종교사회의 중간 형태로 여러 종교 가운데 특정한 하나 또는 몇 개의 종교로 하여금 정권의 신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종교제도는 상대적으로 기타 비공인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준국교형 공인종교는 정권의 신성화를 위해 공인된 종교로 영국의 성공회와 대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공인종교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공회는 영국이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한 주체였으며, 지금도 영국 국체의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다종교사회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로 잘 알려져 있다. 대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은 불교, 신도교,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종교로 인정하고, 타종교는 “공인종교에 유사한 종교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유사종교라 이름하였다. 유사종교가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제는 국제사회에서의 잡음을 피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공인했으며, 일본의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하여 불교를 공인하였고, 일본천황의 신성성을 현양하기 위하여 신도교를 공인하였다. 이처럼 준국교형 공인종교는 결국 자국의 통치체제의 신성성과 안정의 보장을 위하여 특종종교를 공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인종교제도의 운영의 정도에 따라, 국교의 성격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성숙한 다종교상

76) 윤이흠, “북한의 개혁개방과 종교정책의 전망,” 민주평통 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 제45차 회의자료(2001. 3. 19), pp. 3~7.

황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통제형 공인종교는 반종교적 이념을 지닌 정권이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공인하는 경우로 그 전형적인 예가 공산사회이다. 공산주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교를 ‘아편’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아편과 같은 강력한 최면력을 가진 종교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회의 혁명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공산사회에서도 종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기왕에 존재하는 종교단체들에 한하여 공산체제의 발전에 최소한도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발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교의 활동을 인정해준다. 그 전형적인 형태를 중국의 삼자교회(삼자운동은 자립, 자양, 자전)에서 볼 수 있다. 구소련체제에서도 지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동방정교회를 위시한 여러 종교들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이는 주어진 이데올로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교를 동원하거나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특정한 종교를 공인하는 형태이다. 통제형 공인종교는, 말하자면 종교도 세속적 정치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이데올로기는 절대신념체계가 되고, 정권은 유사종교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공산주의는 국교의 의미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며 다종교로 발전한다. 다종교 상황이야말로 현대 민주사회의 특징적 얼굴이며 목표이다. 다종교사회에서 정권은 모든 종교의 자율성(3차원의)을 보장하는 것이 그 사회적 수임이다. 한마디로 정권은 다종교사회의 질서유지의 임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 통치권이 질서유지의 수임을 넘어, 종교적 이상이나 신념내용, 그리고 실천체계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면, 그 정권은 전체주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다종교사회는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가? 종교의 자유는 ① 신앙의 자유와 ② 행위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엄정하게 보장하는 이상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종교의 교리내용에 대한 이유로 그 종교를 박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사회적 수순을 밟게 된다. 우선 어느 특정한 교리의 비합리성을 들어 그 종교를 거부한다면, 모든 종교가 거부되어야 하는 사태에 이른다. 어떤 종교도 자신의 종교적 세계관의 맥락 밖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의 교리를 거부하는 정책은 그 자체가 전체주의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는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행되고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종교지형도 이러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의 통제형 공인종교로부터 다종교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종교상황으로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북한이 통제하고 있는 각 교파의 조지과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다종교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전통종교가 국가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상당한 규모의 신자를 기반으로 활발한 종교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바뀌고 사회주의 이념적 성향이 다소 약화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북한정권이 종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단번에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종교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도 처음에는 북한정권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용인할 것이며, 종교의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종교활동의 허용은 세속 가치를 넘어선 절대신념체계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이념을 상대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종교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의 종교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종교지형은 지금보다는 훨씬 확대될 것이다.

2.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종교교류 발전

화해협력단계에서 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남북한 직접교류방식보다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방식으로 진행되며,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간 직접교류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이다. 실질적인 통일단계에 이르면 남북한의 종교는 각 종단별로 단일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종단은 남북종교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단계로 1종단 1체제 1행정기구의 통합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불교의 경우에는 예컨대, ‘고려불교통합조계종단(가칭)’ 혹은 ‘남북불교통합조계종(가칭)’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와 천주교도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협회와 단일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개신교의 경우 범기독교 기관을 망라하는 단일조직이 출범할 경우 북한의 조그련과 통합기구를 구성하게 될 것이며, 단일조직으로 되어 있는 카톨릭의 경우에는 남북의 통합조직 출범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발족할 단일 종단조직은 각 종단별로 남북한 종교의 행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통합기구의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행정적으로 실천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통합기구는 인사, 포교, 사회복지, 사찰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통합기구를 법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법령제정이 필요하다. 통합기구의 법령에는 교단이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교단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복지사업 활성화 등을 중요한 임무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⁷⁷⁾

또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종교교류는 단순한 인적교류나 종교상징물의 교환과 같은 외형적 교류를 넘어서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영성의 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⁷⁸⁾ 남북 종교교류와 종교

77) 통합종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법타, “통일국가 시대의 불교,” 『평불협 10돌 백서』(서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2002), pp. 114-116 참조.

78) 김종서, “남북종교의 화해와 협력방안” 민주평통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 제44차 회의자료(2000. 11. 27), p. 9.

대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적 만남 자체가 중요하지만, 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되면 그 만남의 핵심이 종교적 영성의 교류에 초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 종교적 상황이 뒤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남한의 종교인들은 북한측 종교인들에 비해 종교적 훈련이나 영성에 관한 한 훨씬 높은 자질을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종교인들이 북한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접촉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면 북한 종교지도자와 종교인들을 영적으로 개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종교교류는 남북한 각 종교의 진정한 영적인 상호이해를 구축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였지만 두 사회간의 지식이나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통합 형성에 유리하다는 점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현재의 상호 인식상대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협력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회간의 잦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두 사회간의 유사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두 체제간의 상호왕래와 사상·커뮤니케이션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⁷⁹⁾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한 분야에서의 성공적 교류 및 동질화의 경험은 다른 분야로 파급된다는 것이다. 필요성에 따라 발생하는 한 분야의 교류·협력 경험은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자극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상호 정보매체의 교환이나, 교육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실상이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호이해의 증대는 정부차원 보다는 민간조직이 주체가 되어 비정치적 요소들의 교류를 행함으로써 주민들간의 심리적 친화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 종교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확대되는 기능적 교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79) F.I. Greenstein and N.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8 (1975), p. 369.

남북한간의 사회적 이질성은 정치통합이나 경제통합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사회간의 동질성 증대와 통합과정은 장기적·단계적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은 심리적 긴장과 갈등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이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단계에서 교류협력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2단계에서 이질성이 존재하나 상호 절충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초기 통합단계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동질화를 추구하는 완전한 사회통합 단계가 된다. 사회가 동질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같아야 함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⁸⁰⁾ 남북한간에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의 동질성이 증대되면 사회통합의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정적 통제와 긍정적 참여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즉 통제의 측면에서는 개인이익의 허용기준을 일정한 정도 제한하고 통제기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집단연대감을 장려하고 이를 사회전체의 연대감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⁸¹⁾ 전체사회의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신념체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종교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강조될 수 있다.

3. 종교별 상황전개의 특징

가. 불교 상황전개

남북한 불교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반세기간의 격리로 야기된 남북한 승려와 신도들의 이질감

80) Philip E. Jacob and Henry Teune, "The integrative process: Guidelines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Jacob and James V. Toscano, eds.,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Lippincott, 1964), pp. 16~45.

81) T. Parsons, *The Social System*, pp. 133, 135~136.

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남쪽의 불자들이 북한의 유명 사찰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고, 북한의 사찰은 남한의 불교 의식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남북한 불교의식도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등 불교계의 주요 행사일에는 공동 법요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의 법회를 동시 생중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교계가 실질적인 통합단계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현재 예상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 스님들은 모두 기혼자이고 삭발을 하지 않으며 예복도 종교적인 엄숙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불교통합의 주역이 될 승려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화합의 공약수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교류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만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교 교류협력이 실질적인 통합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양측 불교계간에 확고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 불교의 제도와 의식을 남한의 정통 불교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의 스님들 일부가 다시 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조짐임에 틀림없다.⁸²⁾

북한불교를 대표하는 단체는 조불련으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에 남한의 불교계는 50개의 군소 종단이 있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종단만 해도 28개에 이르는 현실도 문제가 된다. 남북한 불교통합의 주도세력 내지는 창구, 즉 조불련의 남쪽 카운터파트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되어야 할지,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불교계 내에서 많은 논란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남측 불교계의 대북 지원사업에 중복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북 포교와 지원을 위한 불교계 단체들간의 경쟁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통일 이후 북한

82) 민병도, “남북불교교류의 현황과 과제,” 『종교 대북협력의 현황과 과제』, 종교분과위원회 제47차 회의,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2년 4월 25일. p. 4.

소재 사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제도적인 해결은 남북한 불교가 불교연합단계로 진입해서 남북 불교계 공동의 기구와 제도를 만들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단 이전에 북한의 사찰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회복하는 것도 남북 불교가 실질적 통합단계를 거치면서 통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 질 문제이다. 사찰토지의 회복 문제는 해당 토지가 개인의 재산권과 연결되어 있거나 타종교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토지소유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의 최종적 해결은 통일 이후 북한 토지 전반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 개신교 상황전개

우선,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은 각 종단별로 단일기구를 구성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남한의 개신교는 통합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단일한 종교조직과 어떤 방식으로 단일체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남한 개신교의 각 교파가 하나의 조직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북한과 어떤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상해야 한다. 다행히 남한 개신교 각 교파가 통일분야에서만큼은 연대하여 대표성 있는 조직을 만든다면 남북 개신교 교류협력의 제도화는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다.

남북한 교회의 협력이 진전되고 확대되면 가장 먼저 외형적으로 교회건축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개신교 각 교파가 준비하고 있는 ‘북한교회재건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각 교단별로 사전협의 거쳐 북한의 각 지역별로 교단을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만은 교파를 초월하여 단일한 교단을 형성하도록 배려할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각 지역에 과거의 교회를 복원하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신의주 지역은 개방된 행정특구라는 잇점 때문에 교회건립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선교활동도

다른 지역보다 왕성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 때가 되면 개신교인들도 북한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의 공식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도 증가할 것이고, 특별히 가정교회와 지하교회 교인들의 수가 대폭 늘어나 새로 건립된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진다. 공식교회와 지하교회 사이에 정통성 시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공식교회가 외형적으로 많아지고 종교지형이 넓어지면 가정교회 교인과 지하교회 교인들이 점차 공식교회로 흡수될 것으로 보여 심각한 갈등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종교인들의 후손들의 인구비중으로 추정해 볼 때, 그리고 남한교회의 물질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북한인들의 기대가 커질 경우 100만명 정도의 신자 확보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

북한에 건립될 각 지역의 교회에는 현지 북한인 목회자가 사역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북한인 성직자들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평양신학원이나 김일성대학의 종교학과 의 강의를 위해 신학교수와 학생들의 교환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감리교 서부연회에서 지원중인 평양신학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며, 많은 학생들이 종교적 목적과 사회적 진출 등을 목적으로 신학공부를 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다. 평양신학원은 북한에서 다른 어떤 학교보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학교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신학생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남한의 신학대학에서 유학하는 것도 선호할 것이다. 최근 중국 연변의 조선족들 가운데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남한으로 오고 싶지만 경제적 뒷받침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남한교회가 북한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재정적인 후원을 보장하는 혜택을 제공할 경우,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신학공부를 위해 남한으로 올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북한을 복음화 하겠다는 순수한 선교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출세를 위해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신학공부하는 것이 수단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지역에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회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남한출신 성직자가 북한교회에서 사역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신

학교에 북한선교를 목표로 신학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북한선교 전문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북한지역으로 목회자를 파송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교회는 북한출신 성직자를 선호하겠지만 경제적 형편이 이를 지탱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한의 각 교회가 자매결연식의 협력관계를 맺어 북한교회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한에서 목회자도 파견해주고 재정적인 도움도 주게 된다.

또한 기념할만한 절기에는 남북한 개신교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정기적으로 합동집회를 갖는다. 북한교회에서 남한교회의 성직자를 초청하여 부흥회와 같은 합동집회를 갖거나,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연합집회를 개최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다. 천주교 상황전개

북한 헌법 68조는 원칙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종교활동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남북한 종교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종교 자유를 허용하는 하위 법률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교역자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된 장소에서만 종교활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선교 목적의 남북한 천주교의 교류·협력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측의 평양교구장 서리 및 함흥교구장 서리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평양교구장 및 함흥 교구장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공식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천주교간 종교적 교류·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측의 종교적 관할권 인정으로 인한 종속을 우려하여 남한 교구장의 북한지역 관할권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이 교황청과의 직접적인 관계 수립을 통해서 천주교의 교계(hierarchy)를 확립할 수도 있다. 중국은 천주교의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정부가 천주교의 교구장을 직접 임명하고

교황청과 대만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교황청과의 공식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황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교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중국에는 교황청을 지지하는 신부들을 중심으로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종교자유를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지원 확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교황청과의 관계개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1987년 6월 교황청 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이후 교황청의 대북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황과 김수환 추기경의 북한 방문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9년 문귀현 신부의 방북 및 임수경 사건으로 북한이 교황의 북한 방문을 반대하였다. 북한과 교황청과의 공식관계가 수립되고 북한의 교구가 교황청으로부터 인정되면 교황청이 평양교구장과 함흥교구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 지역 교구장의 관리하에 북한지역에서의 천주교의 종교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런데 교황청이 북한지역에 교구장을 임명하기 이전 단계에서 교황청의 파견대사가 교구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교황청이 북한지역에 독자적인 교구장을 임명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북한이 교구 설정에 반대할 경우, 과도적 단계로 교황청의 북한 주재대사가 주교급으로서 교구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지역에 교황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목구」가 설정되고 이것이 「대목구」로 발전될 수 있다. 과도단계를 거쳐 북한지역에 종교활동의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황청이 정식으로 북한지역의 교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한편, 평양 교구가 수립되기 이전에 수도회들이 평양에 수도회 지부로서 「면속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수도회는 교황청에 위계상으로 연계된 통상적 교구와는 달리 별도의 「면속구」로서 교황청으로부터 종교활동을 인정받는다. 수도회의 「면속구」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만 교구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수도회는 교구에 직접 소속되기도 한다. 수도회는 교육, 의료사업, 출판사업 등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으며, 종교적 의식도 행할 수 있다. 특히 해방전 북한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성 베네딕도 수도원(덕원 면속구)이 북

한지역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도회가 인도적 지원 및 사회·교육활동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들의 종교활동을 통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교구 수립 이전에 수도회의 활동을 허용할 수도 있다.⁸³⁾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천주교의 사제 및 신자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다원화되며, 정례화될 것이다. 남북한의 천주교 대표간 접촉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신자간 교류도 확대될 것이다. 남한측 신자가 북한의 성당을 방문하여 공동미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북한 신자들의 남한 성당방문과 남한 성당에서의 공동 미사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천주교의 인적 교류는 각 교구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대복지원 및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의 종류도 다양화될 것이다. 천주교의 대복지원은 식량, 의약품, 농약, 농기구 등 물품의 직접 전달 중심에서 중·장기적인 사업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당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국수공장이나 병원의 건설, 영농기술 전수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한편 천주교의 주관하에 사회, 문화, 예술, 교육분야에서 각종 공동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공동 부활절 행사, 성탄절 행사, 공동미사, 성가대회, 성화 전시, 천주교인 체육대회, 천주교인 미술대회 등이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천주교사에 대한 자료조사와 자료발굴 작업이 추진될 것이다. 특히 해방이후 북한지역 천주교의 수난과 복구 과정에 대한 자료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 천주교 선교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한을 통합한 한국천주교회사를 발간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도 필요하다.

남북간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천주교의 신자가운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대북봉사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분야, 농업기술분야, 컴퓨터분야, 영어 등의 분야에서 전문능력이 있는 신자들이 자원 봉사자로 북한에 파견되어 북한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83) 변진홍(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면담. 2002. 11. 6.

천주교의 포교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 교구의 북한지역 관할권을 인정할 경우, 남한측 천주교의 주도로 남북한 천주교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럴 경우 원론적으로는 남한측 천주교에서 신부, 수녀, 수도사 등을 북한에 파견하고 북한에서 포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 출신의 신부 및 수녀의 대북파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한국말에 능통한 외국인 신부를 대신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도 있다. 이럴 경우, 외국인 신부는 남한측 교구장의 지침을 이행하고 미사 집전 등 일반적 종교 의식을 실행할 것이다.

북한이 외국인 신부의 대북파견도 반대할 경우, 북한의 신도회 회장에게 신부를 대행하는 보조자로서 사목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이럴 경우 천주교 전래 초기단계에서 선교사가 공소의 회장을 신부대행자로 임명하여 미사강론을 하도록 한 사례가 북한에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서울 교구에 평양교구청을 정식으로 설치하여 서울 소재 평양교구청에서 북한지역 선교를 점담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지역의 신부, 수녀들은 남한지역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북한지역으로 복귀하여 선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교황청과 북한이 공식관계를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평양교구가 수립될 경우, 남북한 천주교의 교류·협력은 독립된 교구간 교류·협력의 형태를 띠고 전개될 것이다. 이럴 경우, 평양교구가 자율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한지역의 천주교구가 북한지역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동독의 경우 독립적인 교계가 지속되었지만 서독의 천주교회가 동독지역 천주교회의 모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심지어 서독 천주교회가 동독 천주교회 신부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하였다.

북한이 수도회의 활동을 허용할 경우, 남북한 천주교의 교류·협력은 수도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북한지역에 설치된 수도회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대망을 통해 북한지역 선교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이럴 경우 남한측 천주교회는 북한에 설치된 수도회를 매개로 하여 대북종교활동을 지원할 것이다.⁸⁴⁾

V.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의 제도화 방안

1. 통일지향적 종교문화 창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이 종교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에 통일지향적 종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남북한이 통일지향적 종교문화를 효율적으로 형성해 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 평화통일 종교교육의 확대

남북한 사이에 평화적인 통일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연합단계를 지나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통일인가를 두고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에 대한 개념과 견해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남북간에도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 남한은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통일민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두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제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통일에 관한 시각 차를 보여 왔다. 남한은 남북 협력과 교류를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연방제를 통한 군사력 감축과 정치적 통일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에 통일지향적 종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종교인들이 통일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통일운동과 종교교류에 참여하도록 종교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관한 열기는 내적으로는 민족의 역량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기회이다. 남북의 분열이 스스로의 의지였다기보다 외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노력도 주변의 4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 따라 자체적 의지나 역량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었다.

84) 변진홍(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면담, 2002. 11. 6.

그러나 순전히 남북의 힘으로만 일궈낸 6·15 공동선언은 민족의 통일을 향한 주체적, 내적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변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보조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민족의식의 고양과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행해온 역사를 살펴보고 기존의 모순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즉, 1국가 1체제의 이상국가 완성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모순과 억압으로 잘못된 역사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 온 통일교육에 대해 전면적인 분석이 앞서야 한다. 기존 통일교육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냉전시대의 논리를 갖고 적대적 개념을 주입시켰던 것은 통일시대의 화합적, 상대 인정적 관점을 회향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에 관한 목적의식적 관점에서의 고찰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들인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정서를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등으로 솔직하게 나눠 비판적인 고찰을 해야 한다. 통일을 원하는 것도 현실이고 분단의 고착상황에 익숙해진 것도 또한 일정부분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종교 평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통일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이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남과 북이 하나되어 살아야 하는 통일의 필요성, 남과 북의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괴리감, 남과 북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이질감 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평화교육을 하루 빨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 등 각 종교의 기본사상을 덕목으로 하여 상대의 아픔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은 세대를 정신적, 도덕적으로 교육시켜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종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각 종교기관 뿐만 아니라 종교관련 단체와 각급 학교에 폭넓게 보급해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종교적 포용정신으로 무장하고 열린 마음으로 남북화해와 통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지향적 종교문화 창출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나. 민족화해를 위한 종교협력의 강조

남북종교 교류·협력은 민족화해의 물꼬를 트는 작업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은 좌우익 갈등과 한국전쟁을 통한 살상 등의 경험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국전쟁은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구조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남한은 85만명의 인명손실과 전지역 초토화 등으로 반공주의와 레드컴플렉스가 깊게 뿌리 내릴 만큼 혹독한 전쟁경험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남한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원산폭격’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의 5대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직접적인 인명손실도 최대 175만 명에 육박하였다. 그 결과 북한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전쟁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결손가족이 되었다. 북한은 전쟁 직후 세밀한 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전사자, 피살자와 같은 전쟁의 피해자 가족들을 우대하는 소위 ‘북한식 보훈정책’을 추진하였다. 성분정책을 통해 전쟁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등용시키면서 계층구조를 재정비한 결과 인구의 25~30%의 사람들이 핵심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계층구조에서 중산층 이상은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상류층은 한국전쟁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단순히 사상교육이나 세뇌교육만을 통해 한국전쟁의 처절함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며 가족관계를 통해 체험적으로 적대의식을 터득한 그 후손들이다. 이들은 북한식 보훈정책에 의해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득권 세력이다. 소외된 주변인으로서가 아닌 사회의 상층 기득권세력으로 집단과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구조는 남북화해와 민족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남한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와 북한에 대한 적대감정이 주로 국가와 학교의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 형성되어 있으며, 전쟁피해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사회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이나 월남자들에 대해 사회의 주요집단이나 계층을 형성하도록 배려한 북한과는 달리 재정적 보상 정도의 국가보훈정책을 추진하였다. 남한에서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하고 전쟁피해 가족들을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재편하려는 사회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강렬한 것을 보면, 전쟁피해가족들을 계급정책으로 구조화한 북한의 적대의식은 대단하리라 예상된다.⁸⁵⁾

남북한간에 자리 잡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불안의식과 이질감의 근원은 한국전쟁에서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의 상처로 인해 남북간에 적대감과 복수심이 생겨났으며, 반공(남)과 반제(북)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 남북간의 문화충격과 사회적 이질성으로부터 오는 냉소주의적 태도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한국전쟁과 같은 사회문제와 맞물려 터져 나온다면 더욱 첨예한 갈등으로 치달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많은 인적 피해를 입었고 전쟁피해의 적대감정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북한의 현실을 상기한다면 통일과정에서 한국전쟁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임은 불문가지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감정과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진정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남북한 사람들이 마음에 지니고 있는 증오와 두려움을 생각할 때 통일과정에서 마음의 적개심이 터져 나올 것은 분명하다. 통일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들과 갈등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오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민족의 재앙이며 혼란과 좌절뿐일 것이다. 특히 교회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97. 5월에

85)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2000), pp. 219~242.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8%의 국민들이 대북지원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북한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사람은 15%에 불과하며 12%는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73%는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도와주자는 소극적 지원파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북 ‘퍼주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의 냉담한 반응은 탈북자들의 눈에도 그대로 비쳐지고 있다. 탈북자들은 남한주민들의 태도가 냉담(33.3%)하거나 심지어 적대적·멸시적(25.6%)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동정적(10.3%)이거나 호의적(10.3%)이라는 탈북자의 평가는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⁸⁶⁾ 지난 50여년 동안 분단과 전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두려움과 불안, 적대감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남북간에 놓인 적개심의 장벽을 허물고 복수심을 극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간에 가로놓인 적대감정, 복수심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종교의 화해와 교류는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한종교계는 한국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남북한 민족에게 용서와 화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특히 북한동포의 경제적 삶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북 경제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미움과 적개심으로 쌓인 분단의 벽을 허물고 화해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북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고취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은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류협력과 제도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해소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남한사회에서 제기되는 ‘북한퍼주기’, 즉 왜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우리는 퍼주기만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과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가 등의 의문점들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

86)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72.

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이 충분한 자료교환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식량난과 대규모 이사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계층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 그 동안 추진한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진단하고 통일교육을 통해 종교인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제도화되는 단계에 이른다 해도 경제적으로 우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종교인들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구호물자와 접촉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적대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의식의 변화도 촉진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여 외국투자의 안정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남한의 경제발전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즉 대북지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남북교류의 규모를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함을 역설해야 한다.

라. 교리와 신앙의 이해 증진

통일지향적인 종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각 종교의 교리와 신앙내용에 대해 남북한의 각 종단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종교활동에서 물질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삶의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이야말로 종교 본연의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교계의 대북 교류협력사업도 물질적인 대북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꺾박받는 동포들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분단으로 얼어붙은 남북 주민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시대에 종교 본연의 사명

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종교계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교류와 대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막연한 기대나 일회성 성과를 노리거나 대중적 인기에 부합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교계는 종교 본연의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 교류협력에 임해야 한다.

마. 탈북자에 대한 관심 제고

남북한 종교교류 진행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제3국을 떠돌거나 한국으로 들어 온 탈북자들을 돕는 문제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북한체제를 탈출해 온 탈북자들이야말로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의 선봉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희망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반세기간 국제사회와 격리되어 암흑 속에서 헤매던 이들에게 종교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 역시 통일 지향적 종교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위치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되던 간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종교계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당국을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종교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앞세워 탈북자 문제까지도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통일지향적 종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종교교류·협력 제도화의 원칙과 방향

가. 제도화의 기본방향

(1) 민족공동체 의식 정립에 기여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은 분단된 사회체제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민족통합을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통일사회에서 민족공동체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가치를 정립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현실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두 사회 혹은 문화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은 공동체로 끌어들이려는 통합요소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려는 분열·갈등의 요인들 사이의 역동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남북한에도 예술공연과 교예공연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민족유대감, 일체감이 남북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반면, 전쟁적대감이나 정치이념의 이질성, 생활방식 차이 등은 서로간에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려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 통합의 구심력과 분열의 원심력이 상호 변증법적 역학을 이루면서 공동체는 유지된다. 이 분화와 갈등의 원심력을 구조적 조정과 문화적 적응을 통해 어떻게 흡수함으로써 통합의 구심력을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해체나 붕괴를 방지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이렇게 볼 때 종교교류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두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류의식과 민족감정을 고취시킴으로써 통합의 구심력을 확보하는데 두어야 한다. 상이한 체제와 제도로 달라진 남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이해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체제와 제도의 통일이 되어 법적으로 국가 혹은 사회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산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민족 혹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갈등을 흡수하고 두 체제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강한 민족의식과 민족감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에 공유가치를 확인하고 민족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문화 교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여러 사회갈등을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적 일체감으로 과연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민족과 사회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다. 역사적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고 때로는 상징화하여 통합의 구심점을 만든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감정을 갖게 된

다. 구성원들의 공통된 경험은 공유가치가 되고 이는 집단정체성과 사회적 유대감과 신뢰(trust)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⁸⁷⁾

(2) 남북한의 종교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

종교교류 제도화의 기본방향은 두 번째로 남북한의 종교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전체 종교인구와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남한에는 북한인구만큼의 종교인구가 있고 다양한 반면, 북한의 종교현실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러 북한에 종교문화를 창출하고 자유로운 종교교류와 협력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북한종교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종교교류는 남북간의 객관적인 종교현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남북간의 동질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종교교류는 동질적 유대의식 확대와 병행하여 남북 상호간의 이질성을 수용하고 이를 다양성으로 조화·발전시켜 나가는데 또 하나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통합이념이나 단일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일체감을 창출하는 것만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질적인 것이 반드시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뒤켄(E. Durkheim)의 분석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질적 기능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체제를 유지해 나간다.

따라서 이질성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거나 배타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이 혹은 다름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교류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이질적인 것을 동질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을 상호보완적 기능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공존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87) Emil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64), p. 49.

남북한 국민들이 민족감정과 정체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남북한이 종교분야의 교류를 하고 접촉과 왕래가 잦아지면 갈등적 요소가 불거질 것은 분명하다. 역사의식과 전통, 유교적 윤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점은 공통적인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서로 다른 부분은 상호 수용성과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역사의식도 달라졌고 관혼상제의 전통도 변화되었으며 유교적 가치는 특히 남한에서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 변화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서 서로 달라진 문화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이질적인 부분을 상호간의 매력으로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이 내면적 심층구조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정적 가치관과 관습이 종교교류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북한 사회에 깊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연줄·토대문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약강문화’, 관료적 부정부패, 폐쇄성과 같은 문화가 부정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⁸⁸⁾ 남북한은 종교교류를 통해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를 공존공영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동질성과 민족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

(3) 종교공동체 의식 창출

남북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등 각 종교공동체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남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단을 해소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화해와 포용을 목표로 하는 종교기관이 먼저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근거하여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종교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종교가 각각의 영역에서 진정한 종교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면 남북한의 통합은 실질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88) 김명세, “‘우열’과 ‘다름’의 남북문화,” 이영선 편, 「통일을 위해 남한도 변해야 한다」 (서울: 오름, 1998), pp. 51~75.

(4)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이행에 기초

종교교류 제도화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관련조항의 이행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남북한이 실질적 통합단계에 들어가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교류협력의 기본틀이 상호협력을 통해 실천가능한 단계로 진전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종교교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다시 작성된다면 종교교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종교문화의 교류와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나. 제도화의 원칙

(1) 남한 종교기관간의 지나친 경쟁 지양

북한은 종교별로 단일한 단체에서 단일한 통로를 통해 남한의 교류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한 종교단체들 간의 지나친 경쟁은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 종교교류 제도화는 남한 종교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사전협의와 논의를 거쳐 유기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종교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채널을 다원화하고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 남한에는 여러 종파가 있고 각 종단은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교류 채널은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가능하다면 다원화된 각 교파들간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종단 내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교파와의 접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인적교류의 확대와 종교교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종교교류를 체육, 학술, 문화교류 등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고, 남한 종교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상호 정보교환으로 남북 종교교류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2) 인적교류를 통한 인간적 이해에 중점

사상과 이념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종교교류는 인적교류를 통한 인간적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종교교류와 문화교류는 이념논쟁이나 교리, 신학과 직결되는 까다로운 분야이어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물론 북한이 인적교류의 확대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상징물과 같은 가시적 상품이라도 먼저 교환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는 종교적 성과물을 먼저 교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성직자, 신자, 학생 등의 인적교류 중심으로 사람의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지도자들과 학생들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 ‘의리’를 중시하는 북한문화의 특성상 교류당사자들이 인간적 신뢰를 쌓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 분야별로 전문인들이 모임을 갖고 개인적 유대와 친분을 유지함으로써 각 종교의 구체적 내용을 교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인적만남의 정례화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며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교류협력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남북종교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3) 비정치적 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북한 종교기관과의 협력 강화

남북한은 종교교류와 같은 교류시에는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항상 통일을 내세운 정치적 주장을 거론하기 때문에 교류가 제한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빈번하다. 지금까지의 남북한 종교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8·15, 6·15 기념 공동집회 등 정치적 사안에 치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기념일과 기독교기념일에도 북측 종교계 지도자들의 범어나 발언에는 정치색이 짙게 풍기는 경우가 많았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이러한 정치색을 초월해서 순수한 민간교류, 종교교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민간종교교류가 북·미 관계와 남북대화 등 정치적 요인에 의

해 크게 영향받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정치, 외교적 사안들은 종교 교류협력의 범위와 속도를 규율하는 고정변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종교 교류협력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치성을 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할 때 진정한 종교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종교적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⁸⁹⁾ 즉 종교적 신앙으로 승화되고 신학적으로 재고되는 통일논의로 이끌어 감으로써 북한의 주장에 호도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능한 한 종교교류가 비정치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종교단체는 대남 선전선동활동에도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한 종교기관도 북한과의 교류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종교의 정치적 종속의 경향은 매우 뚜렷하였다. 특히 북한의 종교단체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한국의 정치, 사회문제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종교의 체제 순응적인 특징이 북한종교에서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의 종교계도 분단상태에서 반공을 국시로 삼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남한 종교의 성격을 규정하고 행동했다. 남한 종교계 일부의 통일운동이 상당히 정치성을 띄고 있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남북한이 체제의 상이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의 만남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벽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인들은 정치적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정치적 사안의 해결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종교와 정치는 나뉠대로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교인은 종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요구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의 종교교류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하고 정치적 색채를 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한의 종교인들이 통일에 대해 북한종교인들과 논의하고 어떤 합의된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간차원의 견해 중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정부의 통일방안과 민간단체의 통일방안

89) 유성민, 앞의 보고서, pp. 61~62.

이 구별되지 않지만 우리는 다양한 통일논의와 방안이 민간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교류를 통해 남한사회의 다원성을 북한에 전달하고 남한의 종교적 다원성을 이해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 협력과 교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의 종교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북한의 종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종교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서도 종교기관이 아닌 다른 정치, 경제 관련 기관과 교류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교류를 제도화하려면 가급적 북한의 종교기관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각 종단은 북한의 종교계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제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교의 경우, 북한의 파트너인 조불련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북한의 불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다른 어떤 정치, 행정 기관보다 조불련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개신교와 천주교도 마찬가지이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나 조선카톨릭협회를 교류협력의 파트너로 하여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조불련, 조그련 등의 종교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실천방안으로서 북한의 각 종교기관들이 다른 사회 기관에 대해 생색을 낼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서 북한에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이다. 종교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의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각종 접촉과 집회, 교류를 추진한다면 남북 종교교류의 실질적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3. 종교교류·협력 제도화 추진 전략

가. 제도화 추진의 수단

(1) 물질적 인센티브

북한이 외화벌이 및 대북지원성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 이를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

용하되 이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결적이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적용할 수 없으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이 교류성사의 대가로 일정금액의 돈을 요구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돈거래 요구를 줄여나가도록 교류당사자들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뢰의 기반이 취약한 남북한 관계에서 교류협력에 소요되는 비용지불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활용한 종교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내재해 있기 상황에서 초청자가 초청사례비 형식으로 돈거래를 하는 것은 현 남북관계의 형편상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초청자가 위험부분을 부담해주고 그 대신 입장료와 광고비 등을 통해 수지타산을 맞추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을 뒷돈거래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거래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화해와 민족적 일체감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의 교류라면 물질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건물 건축과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남북간 종교교류에 활용하여야 한다.

(2) 민족전통과 문화자원

북한은 종교교류 과정에서 ‘민족대단결’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의 통일방침을 선전하고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종교교류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류를 원하는 남한의 종교기관과 단체는 북한의 이러한 접근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와 민족문화, 역사, 주체사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남한 각 기관과 단체의 입장을 사전에 정리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 북한의 민족주의적 접근에 대해 지나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

나,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현실적으로 민족주의 담론을 충분히 활용하는 제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또 종교교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민족적 요소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요소들은 남북한이 한 핏줄이며 한겨레이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 이어진 뜨거운 민족정신과 겨레의식을 갖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남북한 민족이 민족애를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북한이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식주와 민족놀이, 관혼상제 등 전통이며, 셋째는 유교적 윤리와 가치의식이다. 이것이 남북한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 과정에서 단군의 자손으로 13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다는 역사의식과 일제식민지의 경험,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는 것, 씨름, 윷놀이, 연날리기, 효와 장유유서의 예절 등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활용해야 한다.

남북한 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와 전통뿐만이 아니라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한이 각기 발전시켜온 종교적 자원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남북한의 종교가 일제시대에 함께 협력했던 과거를 돌이켜보거나 해외에서의 협력사업, 이산가족상봉에서의 역할 등을 되새기며 민족적 자부심과 민족동질성,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문화자산을 서로 교류하면서 민족의 긍지를 높이고 민족화합적 공감대를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나. 점진적·단계별 제도화 추진

남북한간의 종교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이 실질적 협력단계에 이른다 해도 남북한의 종교문화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종교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교류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화해협

력단계를 거치면서 북한종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종교계 상호간의 화해와 협력이 실현되고, 남북연합단계를 거치면서 종교지도자 수준의 접촉과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 다른 분야와 남북교류협력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남북한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제도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종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류협력 확대 단계에서 남북 상호간의 문화적 이해를 높인 후 점진적으로 교류를 제도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 종교교류 제도화를 단번에 추진하려고 할 경우 경주에 지쳐 헐떡이는 운동선수에게 힘을 준다며 음식대신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우려가 될 수 있으므로 남북한의 상황변화에 맞게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 제도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종교분야의 제도화가 남북사회의 다른 분야와 상호간 밀접한 연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종교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제도화도 다른 분야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즉 종교라는 특정 분야의 독특한 남북교류와 협력이 그 외의 다른 여러 분야의 남북관계가 상응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종교교류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경제교류와 이산가족교류, 특히 남북간 통일논의의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종교가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남한 종교계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추진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교류에 접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현 단계에서 남북 종교교류는 사회 여러 분야와의 균형과 보조를 맞추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쌓은 후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교류와 정치분야의 통일논의와 속도를 맞추면서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서 연합제와 연방제가 합일점을 찾아 통일논의가 활발해 진다면 종교교류는 더욱 활기를 띠고 대폭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류협력 확대 및 정리화

인적 왕래, 종교행사 등 시범적인 남북화합을 위한 교류를 추진한다. 초기 단계에서 처음부터 교류에 필요한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다소 무리한 일이다. 남북한관계가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제도화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면, 통일은 벌써 이루어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따라서 기대수준을 낮춰 우선적으로는 비제도적인 틀에서나마 시범적 교류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시범적 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적용되는 규범이나 법은 기존의 관행을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적 교류사업을 통해 상호간에 신뢰가 쌓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법제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에 교류가 확대되면 교류 건수별로 통제하기 힘들 것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교류협력의 법제화

시범적 교류와 협력사업이 점차 확대되면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종교교류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논의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도적으로 상징적이거나 남북연합 단계에 들어가면 종교교류도 제도화된 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교류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 종교교류가 활성화되려면 남북 양자간 ‘통행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동서독 경우를 보면 ‘통행협정’을 체결(1972)하여 양독간 왕래 및 관광, 여행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남북한도 교통과 통신, 통행을 포괄하는 제도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간에는 아쉽게도 「남북기본합의서」나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는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제9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 합의서는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

(제10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논의(제14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회문화공동위원회를 결성, 가동하여 종교교류협력의 법제화에 관한 문제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종교문화협정 체결

이 단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교류가 법적인 틀에서 진행된다면 이러한 교류사업이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번 시작된 교류협력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혹은 최소한 연례행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는 양자간 ‘문화협정’을 체결하여 양 체제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문화협정에서 다루어질 종교분야는 남북한 종교의 외적인 교류와 협력을 넘어서 교리와 신앙의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할 것이다.

남북한간에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1972년 기본조약에서 문화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고 1973년 11월 후속협상을 시작했으나 13년이 지난 1986년 5월에야 비로소 결실을 보았다.⁹⁰⁾ 이는 동독이 서독의 제국주의 문화가 침투할 것을 우려하여 협정체결에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동서독간에 문화협정(1986년)이 타결되기까지는 우편교류(1970년), 통행(1972년), 체육·보건(1974년) 협정이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남북한간에 ‘문화협정’이 체결되어 상호 문화적 이해가 높아진다면 보다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실현을 위한 다음 단계의 교류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0) 황병덕·김학성·박형중·손기웅,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서울: 두리, 2000), p. 295. 문화협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위의 책」, pp. 299~300을 참조.

다. 제도화 추진의 구체적 전략

이러한 기본방향과 원칙 하에 종교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개발한다.

(1) 범종교간 협의체 구성 필요

북한종교인들과 종교단체의 활동은 단일화되어 있고 대화의 통로도 종교별 혹은 종교단체별로 통일되어 있다. 반면, 남한은 각 종교별로 무수히 많은 종파와 교파, 종교단체들이 있어 각각 북한의 단일한 단체들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종교별로 단일한 단체에서 단일한 통로를 통해 남한의 교류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 종교계의 대북교류는 각 종단별, 개별적으로 그리고 선교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북한의 입장대로 끌려갈 소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자칫 종교계의 선의의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 사업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종교교류 과정에서 종교간 마찰도 예상된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먼저 북한 땅에 있는 자기 종교의 성지를 복원하는가 하는 주도권 싸움이 될 것이다.⁹¹⁾ 남한의 천진암과 같이 불교와 천주교의 성지가 중복되는 경우 종교간에 심각한 갈등의 소지가 됨으로써 남북 종교교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예상되는 종교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당면문제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도 불교 사찰과 문화재 방화나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종교간 갈등이 현실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문제가 남북간 교류협력의 와중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종교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들이 자기 종교만을 고집하고 타종교를 부인하는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없애는 자정노력을

91) 법보신문 남배현 기자와의 인터뷰. 2002년 6월 26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⁹²⁾ 종교의 본래 목적이 화합과 평화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새삼 가슴속에 새기고 남북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축적된 각 종단의 경험이 범종교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북 종교교류에 대한 남한 종교단체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들간의 경쟁적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각 종교 내부는 물론 범종교간 협의체 혹은 정책조정기구를 만들어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종단별로는 여러 교단이나 교파, 혹은 단체들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일관된 태도로 교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종교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종단 자체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 종교계의 대북 지원활동을 보면 각 단체들간에 조정과 조율이 안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큰 이유는 한국 종교 자체가 횡적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로 눈을 돌리기보다 내면을 성찰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적 본성에 영향받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종교내 교파간, 성직자들간, 그리고 성직자와 신도들간의 횡적 유대감이 부족함으로써 사소한 문제로 불화가 생기고 법정 소송 등 불미스런 사태로 비화되는 일이 많다. 이런 문제가 남북 종교교류협력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이 조불련과 조그련 등으로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남한은 다양한 주체가 경쟁적으로 대북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마찰이 빚어지고 실패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종교의 제도적 정비는 범종단적 합의, 교류창구의 실질화, 교류주체의 전문화, 대북지원 방법의 통일화 등에 기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⁹³⁾ 범종단적 합의는 북한 종교계와의 사업을 각 종단내 개별 종교단체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범종단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별단체의

92) 캐나다 삼우스님과의 인터뷰. 2002년 8월 24일.

93)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pp. 342~343.

대북 지원활동은 활발한 반면에 명분과 역량을 두루 갖춘 중단차원의 활동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⁹⁴⁾ 교류 창구의 실질화는 실현 가능한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북한과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창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류주체의 전문화는 대북교류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담당함으로써 교류협력 정책의 연속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원방법의 통일화는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되 북한 내에서 조물런, 조그런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통일된 목적을 갖고 대북지원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라져 있는 기구들을 정부의 지원 하에 역사성, 정통성, 국제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1993년 7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질적 통합기구로서 기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효율적인 남북한 종교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나 한국종교평화회의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각 종단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종단적, 초당파적 종교인 협의회가 내실 있는 조직력을 갖추도록 민주평통 종교분과위원회가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민간교류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종교인들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북한 종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종교 연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⁹⁵⁾ 남북한 종교교류가 북한의 전술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한 종교단체들의 대북활동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사전안내 및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94)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용준 기획과장과의 의견교환, 2002년 7월 29일.

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북 종교정책의 현황과 방향,” 종교분과위원회 제42차 회의, 1999년 11월 18일.

있는 교육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서 방북자들에 대해 간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이다.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서 북한문제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통일교육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남한정부는 종교기관의 자율적인 교류참여를 유도하고 남북간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거나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논쟁을 넘어서 이제는 민간과 정부, 준정부기관이 다양한 접촉을 통해 폭넓은 교류를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특히 민족간 화해와 평화공존의 내적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와 준정부 기관 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NGOs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NGOs의 참여를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⁹⁶⁾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정부는 종교계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교인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하에서 종교계가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종교계의 새로운 인식도 중요하지만, 많은 종교인구를 고려한 정부측의 노력도 요망되며, 정부의 지원이 규제와 통제가 아닌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성숙되어야만 남북교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 종교단체들의 입지 고려

남북종교의 실질적인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종교단체들이 북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열악한 위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북한 종교인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들 체제의 한 특성으로 이해하고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치적 혹은 경제적 주장이나 요구를

96) 조한범,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8), p. 44.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들이 북한체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종교교류를 자본주의 퇴폐풍조 유입으로 매우 경계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북한문화를 부정적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북한이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먼저 과감하게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칭문제나 언어사용 등 ‘명분’있는 부분에서는 양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또 북한의 자존심과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특히, 남한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입장을 내세우지 말며 언론매체의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보도를 지양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마치 60년대 우리 사회가 개발 독재의 요구를 정당화할 때와 같은 상황과 절박함 속에 놓여 있다. 그런 그들과 함께 경쟁을 하려하거나 생색을 내는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남과 북이 동시에 민족사를 관통하는 역사 의식과 민족 의식을 찾아낼 때 진정한 공존과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는 한편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람들은 남한의 언론이 ‘들취내기식’의 보도를 할 경우에 교류협력, 나아가 통일에 저해가 된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언론은 가급적 남북간 사안을 통일지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상호이해가 진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인도적 지원과 포교와의 신중한 연계

북한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 단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교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인도적 지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속적인 지원과 고통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다.⁹⁷⁾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기아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불교인들이 앞장서서 물

질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앙운동의 싹을 틔우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화의 상대인 북한 당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지원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과 아무런 지원도 없이 대화를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대가 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종교계의 대북 교류협력은 순수한 종교적 교류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북한이 경제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북한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순수한 종교적 교류는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종교적 포교와 결부시켜서 인도적 지원이 포교의 대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에도 없는 종교의 포교대상이 됨으로써 종교가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5) 종교교류협력 내용의 다변화·체계화

남북한의 종교교류를 종교행사나 대북 지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체육, 학술, 문화교류, 역사교육 등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적 교류의 확대와 종교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 종교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상호 정보교환으로 남북한의 종교교류를 체계화 할 필요도 있다. 통일을 위한 민간단체를 다방면으로 육성하고, 대북관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의 쌍무적인 관계를 다자간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통일관련 민간단체를 다양한 형태의 콘소시엄이나 협의회로 구성함으로써 대북교류 협력의 자율성 증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간 역사의 과오를 청산하는 종교적인 화해와 용서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종교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97) LA 관음사 도안스님과과의 인터뷰. 2002년 8월 22일.

가칭 “21세기 평화를 위한 민족대화합의 종교 축전” 같은 것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동의식은 남북한의 종교인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한 세계적인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종교계는 보다 더 긴밀한 국제적인 연대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 및 중국 현지 종교인들과의 협력 활동강화가 요구된다.

(6) 종교와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 정리

북한이 종교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종교인들은 종교와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북한의 주장에 대비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은 평양에 단군릉을 만들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종교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민족문제로서의 단군릉에 관해서는 일정한 해석과 평가를 내리며 각 종교의 입장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민족대단결 10대원칙」과 같은 민족주의 노선을 종교교류의 전제조건으로 천명할 경우, 「10대원칙」의 제1항에 「연방제」통일방안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의 ‘연방제’를 고집하지 말고, 순수한 민족사랑과 독립정신의 원칙론적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종교인들은 ‘연방제’건 ‘남북연합’이건 만남과 교류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화해협력단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종교교류의 일차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각 종교의 민족주의적 특성과 애국주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교류협력력을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은 특히 불교나 민족종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지역의 사찰과 불교 문화재를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복원하면서 민족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주요 사찰을 국제적 명승지로 부각시켜서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를 얻으려

한다는 점이다. 지난 76년에 복원된 묘향산 보현사는 80년부터 외국 귀빈들의 주요 방문코스가 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불교가 민족의 재래신앙과도 혼합되어 전래됨으로써,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불교적 정신과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승려들이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북한의 체제유지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왜란 당시 왜병에 맞서 싸운 서산, 사명 등 승병들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한용운 스님을 ‘애국승려’로 칭하고, 그런 승려를 배출한 불교를 ‘애국종교’라고 부르고 있다.⁹⁸⁾ 같은 맥락에서, 신라시대의 원효대사는 귀족적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힘쓴 공로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불교의 경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인민과 친화적이었고, 조상의 높은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인민의 휴식공간이자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선전과 옹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타종교에 비해 다소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종교는 민족주의적 특성과 애국적 요소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남북 종교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7)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적극 활용

2002년 7월 북한의 임금향상과 월급제 실시 등 북한의 경제관련 조치는 향후 북한 내 종교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앙운동의 기초는 기도를 통해서 물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복을 비는 ‘기복’ 정서가 있어야 신앙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북한은 배급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복의 정서가 태동할 여건이 아니었다.⁹⁹⁾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북한 정권이 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 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야만 정상적인 신앙운동이 일반 민중들 사이에

98) 한용운 스님의 아들은 북한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법타 스님과의 인터뷰, 2002년 6월 26일.

99) LA 관음사 도안스님과의 인터뷰. 2002년 8월 22일.

서 싹틀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제개혁 조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남북한 종교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내적 여건의 하나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한의 종교인들은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에 종교의 씨를 새로 뿌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북 교류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4. 종교교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1) 남북종교인 교차방문 추진

지금까지 종교교류는 남북의 종교인들이나 종교단체들이 주도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제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제3국에서 간접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대북 지원과 관련한 남한 종교인들의 방북이 급증하면서 남북한간 종교인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사 차원에서 남북종교인의 정상적인 교류는 활발하지 못했다. 또한 남한종교인들의 북한방문은 있어 왔지만 북한종교인의 남한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불균형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류의 지속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차 남북의 종교인들이 남한이나 북한에서 직접 접촉하고 북한종교인들의 남한방문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종교인들의 교차방문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과 제주도 등 남북한의 특정 지역을 종교인들이 상호방문하고 종교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남북 종교교류를 제도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중시하고 인간적 이해를 기초로 한 종교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종교지도자들이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서로 왕래하고 대화하는 교차방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종교문헌 및 종교문화재의 교류확대

성경이나 불상 등 경전, 종교상징물, 종교서적, 종교문화재의 교류는 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양을 상호 교환하거나 알리는 것은 손쉬운 교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상당량의 종교서적이 북한에 들어갔고 종교상징물의 교환사업도 추진되었으나, 앞으로 각 종단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종교문헌과 문화재 교류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종교교육을 위한 오디오, 비디오 시설을 남측에서 제공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간에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더라도 북한의 경제상황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때 북한내 종교의 신장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대규모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활동과 종교시설 내에 필요한 각종 문헌과 설비들을 남한이 북한에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화해와 용서 대집회

지나간 분단역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상과 교리 차원에서 종교적인 화해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범종단 합동집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범종단 차원에서나 혹은 각 종파별로 함께 참여하는 가칭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 한마당” 같은 것을 서울이나 평양의 각 종교건물에서 개최할 수 있다. 종교 한마당에서는 종교집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 남북한의 토속음식 장마당, 남북한 토산품 판매, 종교 문화재 상호 교류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교 한마당은 남북한의 종교인들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 지향적 종교문화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종교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정

확히 이해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제도적 통합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혼란, 고통을 겪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노력을 크게 기울여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종교계는 각각 상대방의 역사, 사회, 문화, 생활, 의례 등과 같은 기본상식과 함께 향후 정치적 통합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종단은 각각의 경전 속에 나오는 갈등의 화해 교리를 정리하고 남북관계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읽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간 남한사람들은 북한의 공산당에 관한 인식 및 반공 교육에 익숙해 있으며, 북한도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를 용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통일장전과 성경 등 교리적, 사상적 접근을 통해 의식을 제고하고, 실행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실천방안의 예로 불교의 경우, 북한 부처님께 공양미 올리기, 북한의 불자들에게 줄 신행선물로서의 108염주, 단주 만들어 보시하기, 북한 스님들께 승복 등 불전 일용품 공양하기, 통일을 위한 기도문 작성 및 정기적 발원 실천하기, 각종 통일기도·법회 참석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종교의 절기행사로 남북한 종교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3.1절과 6.25, 광복절 등 국가절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종교행사를 거행한다. 또한 불교의 석탄일과 같은 주요 불교기념일, 기독교의 부활절, 성탄절, 민족종교의 단오절, 개천절 등의 절기행사에 남북이 공동으로 합동법회 또는 연합예배를 드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의주 행정특구가 신설되고 금강산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집회를 평양이나 새로 들어선 신의주 행정특구, 금강산 등에서 부흥집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국내유민과 탈북자들에 대한 공동 지원사업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남북한 교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이 협력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변지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실시하는 공동사업을 북한 종교기관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자유로운 종교의 포교활동은 제한될 것이다. 또한 탈북자에 대해서도 중국당국은 불법월경자로 간주하여 체포·송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북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탈북자 문제까지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북지원 단체가 탈북자 지원에도 참여하면 북한이 반발함으로써 대북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불협과 같은 단체도 탈북자 지원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¹⁰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 북한종교인들과 협의하여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북한으로 돌아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으로 탈출하지 않더라도 북한내부에서 거주지를 떠나 배회하는 북한주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지원 사업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사업을 남북 종교기관이 공동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살생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방생”이라는 불교의식이 있는데, 동물을 살려주는 방생보다 탈북자의 생활을 돌보는 “인간방생”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¹⁰¹⁾ 앞으로 각 종단의 교단 차원에서 탈북자의 교육·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

100) 법타스님의 주도로 남순지장회라는 탈북자 지원 단체가 만들어졌지만 북한이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평불협은 남순지장회와의 관계를 끊었다. 이후 불자들의 관심도 떨어져서 현재 이 단체의 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평불협 박정숙 사무국장과의 의견교환, 2002년 6월 26일.

101) 2002년 7월 31일 평불협 박정숙 사무국장과의 의견교환.

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탈북자 재교육 시설을 정부가 독점하지 말고 종교계가 일부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북한사람들을 종교의 품안으로 끌어들이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탈북자 지원사업은 더 시급하게 실천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남북의 종교기관은 탈북자들을 체제와 이데올로기 선전에 활용하지 않고 철저히 인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탈북자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

(5) 종교건물 복원 및 개척사업

각 종교별로 과거의 종교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을 북한 종교당국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불교사원을 복원하고 교회와 성당을 복구하는데 남북한 종교기관이 협력한다.

불교계는 북한 전통사찰 복원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관광부가 주도하는 정부측 지원은 민족문화 관리 차원에서, 불교계는 종교유산 보존 차원에, 학계는 문화와 역사 연구 및 자료보존 차원에서 정부와 불교계 및 학계가 병행 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 복원은 불교의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남북이 하나임을 깨닫게 하며 불교도로서의 신앙심을 회복하는 귀중한 사업이다. 문화재 복원사업은 남과 북의 문화와 역사 공동체를 형성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북한 내에 있는 사찰 등 각종 문화재의 복원은 민족사와 정기의 복원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 종파, 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민족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만, 남한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우선 순위적 측면에서 북한의 필요성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이 복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찰로는 금강산의 신계사와 장안사, 개성의 영통사, 안변의 석왕사 등이다. 신계사는 조계종, 장안사는 진각종, 영통사는 천태종이 복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¹⁰²⁾ 신계사, 장안사, 마하연의 복원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김정일위

102) 김선관, “진각종 대북 교류 현황과 향후 계획,” 『종교 대북협력의 현황과 과제』, 종교분과위원회 제47차 회의,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장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 영통사의 복원을 일개 종단 뿐 아니라 범 불교적 차원에서 동참하는 것이 앞으로의 복원 불사를 원만 회향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찰의 복원은 남쪽의 기술과 재원, 북쪽의 노동력과 자재가 결합해서 전통문화를 되살린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계는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개신교회가 연합하여 1단계로 과거에 북한지역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2,850개의 교회를 교세별로 할당하였는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개신교인 6천명당 1교회씩을 배정한 셈이된다. 과거에 교파가 없었던 순복음과 같은 교단도 북한내 ‘단일기독교단’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다. 가급적 교단적 배경을 고려하지만 필요한 경우 교차배정을 할 수도 있다. 지역분제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 어느 교단에 편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평양을 비롯한 북한 각처를 골고루 섞어 배분하는 원칙 하에 추진한다.

(6) 학생교환 및 학술교류

종교계 내부의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이해 증진을 추진한다. 일차적으로 남북종교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각 주체간에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각 종단 내지 대북협력창구 별로 갖고 있는 연구소의 활동을 강화하며, 연구소간 협력을 통해 종교계의 공통적인 대북 협력 입장과 정책방안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불교, 기독교, 전통종교 등 각 종교의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간의 교류를 정례화한다. 평양신학원 및 김일성대 종교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한의 여러 종교교육기관과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남한의 각 종단 산하의 남북교류위원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통일에 관련된 종교계 전문가들을 파악해서 이들의 신상과 전문영역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필요시 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지역개발 프로젝트 공동추진

식량지원 및 의료지원 등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남북한이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대북지원이 주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형식으로 실시될 것이다. 프로젝트 협력사업은 단회성의 구호활동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립훈련과 기술습득을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영역의 프로젝트 협력사업은 남북한 주민들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화해의 모색과 동질성 회복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일회성의 소비성 물자가 아닌 생산설비가 지원됨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산업활동과 기술훈련 등을 통해 북한 사회에 개방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통해 북한측에 거부감을 주지 않는 간접선교를 기대할 수 있다.¹⁰³⁾ 이와 같은 프로젝트 사업은 남북한 양측이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하는 복지센터,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설립, 병원과 의학대학 설립, 영농개발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에 그루터기교회 세운다는 목표 하에 북한의 지방 군단위로 협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풀뿌리신도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역마다 묻혀있는 옛 교회의 그루터기들을 발굴하고 애향산업단지에서 함께 일하면서 풀뿌리신도들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생교회로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시·군·구역별로 자력갱생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프로젝트를 북한 전역을 200여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추진하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각 교단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식량지원과 더불어 북한선교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도 있다.

103) 김형석, “새로운 형태로서의 선교모델들,” <http://sharing.net>. 평양과 학기기술대학 작공식이 2002년 6월 평양의 통일거리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북한지역 농촌을 대상으로 영농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농민들과 경제적 유민들에게 전문적인 영농기술을 가르치고 농토와 농기구, 농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해 주는 한편, 각 종교에서 필요로 하는 신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체 생활과 신앙을 병행하는 영농지도자 겸 종교 전도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모델운동과 프로젝트 연구, 예를 들면 크리스천 중소기업의 북한 지공장 설립, 가나안 농군학교, 두레마을, 수피옥수수 농장, 농·축산 기술 시범사업, 시범복지 사업기관을 북한에 개설, 오옹진신부 꽃동네 모델, 호스피스 등 특수 의료봉사기관과 연대하는 봉사활동 실시, 유통사업, 종합 복덕방센타, 이동진료차, 컨테이너, 표준 조립 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불교 프로그램>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불교는 남북불교 통합종단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남북 양측의 불교종단이 참여하는 ‘남북불교조계종연합(가칭)’ 혹은 ‘민족전통불교조계종연합(가칭)’을 과도종단으로 설립하고, 1종단 2체제 2행정기구를 갖춘다.¹⁰⁴⁾ 양측 불교간의 공존공영과 동질화에 중점을 두고 불교의식의 단일화 및 제도의 통합을 통해 남북불교공동체를 이룬다. 남북불교조계종연합은 남북한의 정치·사상적 차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불교 차원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독립적 종무행정을 보장한다. 북한 지역에 분단 전에 있었던 9개 교구본사를 부활한다. 과도종단 산하에 교구본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조계종연합총회(가칭)’를 구성하고 종무행정처로 ‘남북조계종연합종무원(가칭)’을 설치한다. 남북불교공동체가 지향하는 느슨한 형태의 불교연합현장을 채택한다.

연합현장에 근거하여 남북불교는 ‘고려불교통합조계종단(가칭)’ 혹은 ‘남북불교통합조계종(가칭)’을 설립하며, 1종단 1체제 1행정기구를 갖춘

104) 불교종단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다음의 글을 참조했다. 신법타, “고려불교 통합조계종 통일안을 제안한다,” 『평북협 10돌 백서』(서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2002), pp. 85~91.

다. 국가통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남북한 불교계의 합의와 남북한 정권의 정치적 승인만 있으면 정치통일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 ‘남북조계종연합종회(가칭)’을 ‘통합조계종종회(가칭)’으로, ‘남북조계종연합종무원(가칭)’을 ‘통합조계종종무원(가칭)’으로 전환한다. 종무행정의 주요 업무는 한반도 불교의 행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통합종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행정적으로 실천한다. 인사, 포교, 사회복지, 사찰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북측의 대처승은 당대만 인정함으로써 통합불교가 명실상부한 조계종의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한다. 다만 북한불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기존의 기혼승은 신분을 인정하고 가족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는 가장과 가정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불교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 단일기구로 형성된 통합불교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종무행정의 주요 업무로는 북한불교의 재정, 토지, 사찰보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남북한 불교의 대외활동을 조정·중재, 승려의 두발과 복식제도 통일, 북한 소재 주요 사찰에 대한 복원,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지를 중심으로 신규 사찰 건립 등을 추진한다.¹⁰⁵⁾ 남북한의 불교계가 남북의 불교와 사회 전반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며, 실질적 통합을 위한 불교계의 학술토론회 개최할 수 있다. 남북 불교도의 성지순례와 종단 교환방문 등을 통한 불교도들의 이해 증진 및 일체감 도모하고, 한강, 대동강, 임진강 등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합동 연등제와 법회를 정례화한다. 나아가 금강산특구, 신의주 특구 등에서 남북 공동법회를 개최하고, 남한의 한 사찰이 북한의 한 사찰을 돕는 “1사찰 지원 운동”을 전개하고 북한 사찰에 필요한 불교용품 지원, 찬불가 등 현대식 법회이식을 보급한다. 보현사 소재 팔만대장경 해제본의 수입을 자유화하고, 북한 민중에게 익숙한 불교관련 이야기나 동화, 설화를 책자로 발간하고 만화, 드라마, 영화로 소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장르별로 북한특집 코너를 만드는 것

105) 북한 소재 사찰과 불교문화재의 소재와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북한사찰연구』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출판부, 1993).

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불교계가 북한의 경제적 고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식량, 의류, 생필품, 학용품 등을 북한 불교신도들에게 적극 지원한다. 금강국수공장 등 꾸준히 진행해 온 대북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불교계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동참하여 불교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사찰이나 개인 혹은 청년회와 같은 단체와 북한의 특정 탁아소나 유치원을 연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원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감과 의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지원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북한에서 제작된 佛具(불상, 염주, 목탁 등)를 수입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북한의 식량지원이나 사찰 복원 기금으로 환원한다. 탈북자, 귀순자들의 생활 정착과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범불교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 남북한 승려의 일정기간 교환 거주 및 상호 유학을 실시하며, 남북한 불교문화제의 상호 방문 전시, 불교문화제 관련 정보 교환, 공동 발굴 실시, 보존방안 등을 강구한다. 화재사상, 중도사상 등 불교의 통일이념에 대한 남북 불교도간의 공동 연구 및 학술회의를 추진하고, 각 사찰 예산의 1% 정도를 대북 협력기금으로 모금해서 이 돈을 범 종단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대북 지원 및 투자 사업에 활용한다. 식량이나 생필품 지원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단순지원을 불교병원건립, 불교 양로원 및 고아원 건립 등 영구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 포교활동을 둘러싼 종교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교와 타종교간의 통일문제에 관한 교류도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7대 종교의 성직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통일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7대 종교의 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있다. 이와 같은 통합기구의 활동을 정례화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남북한 불교의 실질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사부대중을 교단의 중심으로 보고 자유와 민주 그리고 자비와 평화의 사상을 포용해야 하며, 교단의 경제운영에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교단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고 교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승려의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관장할 기구로 중앙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고령이거나 무의탁 승려와 사회일반의 소외계층을 돌 볼 수 있는 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작업이 교단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개신교 프로그램>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개신교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단 일기구를 구성하여 선교사업을 활발히 진행한다. 불수교회와 칠골교회 이외에 520여개 되는 가정교회가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당 건축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과거 북한지역에 2,000 혹은 3,000여 교회가 있었으므로 과거의 교회를 복원한다는 목표 하에 단계적으로 북한의 교회를 건축해 나간다. 제1단계로 3천교회가 재건되면 다음단계로 1만2천교회의 재건으로 들어간다. 개척담당교회모집은 3천교회씩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1만2천교회를 북한의 어느 곳에 개척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북한교회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남한에서 우선 3천교회 개척을 위한 후원조직을 구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4차에 걸쳐 최종 1만2천교회를 개척한다.

또한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남북간에 정보화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사이버 종교교류도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성직자들의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 기독교가 협력하고 있는 서적 지원과 설교테이프, 비디오 설비 지원 등을 인터넷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교회에서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3.1절이나 부활절, 광복절 등의 절기행사에 남북이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한은 3.1절과 광복절을 우리 민족의 의미 있는 절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절기에 남북교회가 공동예배를 드리는 사업이 성사된다면 남북 그리스도인들의 교류를 도모하고 민족의 통일에도 기여함으로써 남북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기독교 고유 절기행사

에 남북교회가 공동으로 예배와 모임을 갖는 것도 적극 추진해 볼만하다. 이러한 공동행사를 평양이나 새로 들어선 신의주 행정특구에서 부흥집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의주 행정특별구역은 무비자, 무관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종교집회나 선교활동의 측면에서도 북한 내지에 비해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주 특구 지역에서 남북한과 해외동포 교회, 그리고 나아가 세계교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모임 프로그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도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인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인해 단기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과 의약품 공급이 시급할 것이다.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영농개발 지원도 필요하다. 북한이 투자시범지역으로 지정한 남포직할시를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해 비료와 농약을 대규모로 지원하여 북한사람들의 보건상황을 개선하는 사업도 기독교계가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에스라운동’이 추진하는 ‘민족통일 애향산업’(약칭 애향산업)을 각 지방별로 추진하여 북한의 각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고향을 떠난 탈북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 신앙훈련을 탄탄하게 쌓은 탈북자들에게 전문적인 영농기술을 가르치고 농토와 농기구, 농자금을 지원하여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을(협동농장)의 영농지도자 겸 복음전도자로 봉사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남북공동사업이 강력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계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기동성 있는 활동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기시에 이들의 자발적 참여, 특히 조직적인 참여는 언론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남북 기독교 공동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필요한 분야에서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범기독교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구상하고 있는 ‘10만 통일봉사단’ 계획과 같은 젊은 청년들의

인력을 확보하여 홍보요원, 운동요원,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시도도 있다. 여성위원회, 의료위원회, 한의사위원회, 실업인위원회, 미용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자발적 자원을 동원하기 용이한 분야별 조직을 구성한다. 긴급사태 시 가장 빨리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역시 청년 학생들이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회의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각 대학의 선교단체들을 두루 망라하는 범기독교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천주교 프로그램>

남북한 천주교의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한 천주교의 사제, 수녀, 수도자별로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한 천주교의 사제, 수녀, 수도자들이 각각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고 모임을 갖고 공동행사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사제, 수녀, 수도자들이 각각 자기들에게 적합한 모임의 성격과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신도의 유형별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부, 장년부, 여신도부 별로 남북한 신도들이 교류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각 신도별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부는 공동수련 계획을 수립하고 장년부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여신도회는 공동바자회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성당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각 성당별로 구체적으로 해당 성당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각 성당별로 성당의 보수, 성당복원, 성물지원, 신자들에 대한 물품지원, 사목활동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천주교회를 복원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독립적인 교구가 수립되지 않을 경우, 남한측 천주교의 주도하에 북한지역 천주교회의복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독립적인 교구가 성립될 경우, 남한측 천주교는 북한측의 천주교회 복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분단전 평양교구와 황해도 지역에 존재했던 성당의 복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전의 성당을 복원함으로써 천주교 역

사를 복원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달성하고 이 지역을 향후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에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사제, 수녀,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배출된 사제, 수녀, 수도자의 해외 연수 및 유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북한지역의 사제, 수녀, 수도자를 남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천주교가 지원하는 일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에 천주교가 후원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 해방전 북한지역에 있었던 남한의 천주교 계통 교육기관들은 이전의 교육기관을 복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천주교 관련 방송, 뉴스레터, 책자 등 언론매체 및 출판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북한에서 천주교의 뉴스레터, 간행물 등을 발간하도록 하고 천주교방송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매체 및 출판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초기단계에는 남한측이 자금, 장비, 경영기술 등을 북한측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직접적으로 천주교를 선교하기 위한 종교 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사회봉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포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북한지역의 사회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종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각종 교육, 문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이 관심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교육, 영어교육, 건강상식 강좌 등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사회적 관심영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천주교에 대해 일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남한측 천주교의 각 교구별 대북선교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대북선교활동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산하의 각종 협의체의 활동을 활성화·정례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종교간 대북선교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지나친 경쟁이나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서 범종교간 대북선교활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범종교 대북선교활동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활동을 연계하고 남북종교 교류를 체계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북선교활동을 위해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선교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 단동의 천주교회와 연해주지역의 천주교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홍콩 교구, 베이징 교구, 대만 교구 등과 해외의 천주교 교구와 연계하여 북한지역 포교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해외 교구들의 지원과 협력하에 천주교의 대북선교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종교활동의 접점을 다양화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개방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을 확보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내륙지역에 대한 선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의주 특별 행정구, 라선지구, 개성 경제특구 등 개방지역에 거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초기에는 남한측 천주교구의 주도하에 대북 선교활동을 추진하되 점차적으로 북한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초기에는 남한측에서 사제, 수녀, 수도사 등을 파견하되 중장기적으로 북한 지역에서 사제, 수녀, 수도사를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방전에 북한의 평안도지역을 관장하던 평양교구, 함경도 지역을 관장하던 함흥교구 등을 복원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종교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한 체제의 이질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통일과정에서 남한에는 여러 종파와 교파가 있어 북한의 민족주의적 혹은 주체사상적 교리가 첨가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상과 종교가 부재한 북한에는 다원적 종교상황은 큰 충격과 혼란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바로 종교교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종교계의 통일운동은 정의와 평화의 성취, 분단의 극복과 민족의 화해, 그리고 평화통일과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 그 자체가 철저히 평화와 정의에 입각하여야 하며, 통일 그 자체가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둘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제는 반드시 남북 양자의 호혜적 쌍무적인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지나 실질적 통합의 단계로 들어서면 남북한의 종교상황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특히 북한사회 내의 종교지형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북한사회에 체제전환기에 수반되는 사회적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사회주의 복지제도에 익숙한 북한사람들 가운데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경제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류가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을 보더라도 체제변혁기에 겪게되는 고통스런 상황으로 인해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변화된 체제에 대한 불만이 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주민들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종교활동의 공간도 넓어질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통일국

가의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각 정파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남북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정치갈등은 고조된다. 문화적인 이해를 제고하지 못하면 남북한은 심각한 심리적 분열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의 종교적 지형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혼란이 조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특히 남북의 문화적, 심리적 통합을 위해 종교간 교류와 협력은 더욱 긴요해질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북 양 체제가 실질적인 부문에서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자체적인 체제변혁을 통해서 체제적인 동질성을 미리 확보하고 이질적 체제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두 개체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통합은 한국전쟁의 상처와 적대감, 군사적 갈등과 긴장, 체제와 제도의 차이, 적대의식과 이질적 가치관으로 인해 한반도에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몰고 올 것이다. 남북한의 종교인들은 한반도에 도래할 신질서와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사회갈등을 내다보면서 민족화해와 종교협력의 대전략을 가지고 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은 평화통일 종교교육을 확대하고 종교협력을 통한 민족화해를 도모하며, 북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교리와 신앙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통일지향적 종교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지속함으로써 통일지향적 종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류를 제도화하여 안정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교류를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정립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며 남북한의 종교현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특히 종교공동체 의식을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남한내 종교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인간적 이해에 교류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비정치적 종교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급적 조불련, 조그련 등 북한의 종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종교교류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남한쪽이 물질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한편, 민족전통과 문화적 자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남북간의 종교

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에는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정례화하는데 비중을 두며, 점차적으로 이를 법제화하고 궁극적으로 종교문화협정을 체결하여 교리와 신앙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종교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종교상황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지역 종교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북한쪽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북한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종교계의 대북 교류협력은 순수한 종교적 교류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지원을 종교적 포교와 결부시켜서 인도적 지원이 포교의 대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남북한의 종교교류를 종교행사나 대북 지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체육, 학술, 문화교류, 역사교육 등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도 있으며, 북한이 종교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남북종교의 실질적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실질적 통합의 단계를 앞당기기 위해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외형적인 기구나 조직을 만들기에 앞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공존의 폭을 넓혀 나가는 일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종교교류는 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하는 이러한 화해협력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있어서 남북종교간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족적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안고 있다.

종교교류는 또한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 이후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아노미 상태에 처하게 될 북한주민들에게 삶의 의미와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종교별로 주체사상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배경 또는 흡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종교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되 다원적 종교사회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전달하는데 초점이 모아

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회단체에 불과하고, 남북한 종교교류도 북한의 의도대로 통일운동의 도구적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종교는 인도주의적 교류·협력과 남북한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원동력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종교인들, 특히 지도층인 성직자와 교역자들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이 강력히 요청된다. 남북한의 종교인들은 인도주의적 협력의 길을 마련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화합과 화해의 공간을 넓히는데 아낌없는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논문

- 강승삼. 「21세기 선교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강인철. “월남 개신교, 천주교의 뿌리: 해방 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역사비평』 제 17호), 1992년 여름.
- 국제정보연구원 편. 『북한정보총람 2000』. 서울: 국제정보연구원, 1994.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편. 『남북대화시대의 종교계 통일운동 방향』. 서울: 국토 통일원, 1989.
-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8.
- _____. 『북녘의 남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서울: 은석논장, 1989.
- _____. 『북한의 종교』. 서울: 통일연수원, 1992.
- 기독교학문연구회 엮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1994.
- 김명혁 편역.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97.
-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김영한.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90.
- 김영훈. 『통일부작용』. 서울: (주)할렐루야서원, 1992.
- 김중석. 『북한교회 재건론』. 서울: 도서출판 진리와 자유, 1998.

- _____. 『교회는 통일을 대비하라』. 서울: 반석문화사, 1993.
-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연구·증언·자료』. 서울: 다산글방, 1992.
- 김홍수 외,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서울: 다산글방, 2002
-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 편.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 편. 『21세기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0.
-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 서울: 한울, 1995.
- _____.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 _____.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교회의 위기와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서울: 공보처, 1994.
- _____.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종교교류를 중심으로』.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4.
- _____. “북한 주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종교현황,”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제34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자료집, 『북한의 종교와 통일을 위한 종교계 협력과제』, 1998년 10월.
- _____. “특집: 남북한 문화교류 이것이 문제다-종교편”, 『월간 북한』, 1993년 10월호, 북한연구소, 1993.
- 문화분과위원회(제44차 세계성체대회).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 서울:

일선기획, 1990.

문화체육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부, 1997.

_____. 「北韓地域 宗教資料集」. 서울: 문화체육부, 1994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Pasadena, CA: 아시아선교연구소 (IAM), 1999.

박순경. 「민족통일과 기독교」. 서울: 한길사, 1987.

박영호. 「교회와 공산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박용곤·김화효. 「주체사상입문」. 동경: 구월서방, 1989.

박 완. 「한국기독교 100년」 제1-6권. 서울: 선문출판사, 1971.

박완신. 「통일의 그날: 북한의 종교와 대북한 선교전략」.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9.

_____. 「평양에서 본 북한사회」. 서울: 도서출판답게, 2001.

백종국.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3.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서울: 국민일보, 1998.

북미주기독교학자회.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서울: 자료원, 1995.

-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서울: 민족사, 2000.
- 안부섭 엮음. 『남북의 하나됨을 위하여』. 서울: 진리와자유, 2000.
- 양한모.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 서울: 일선기획, 1990.
- 오대원.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울: 예수전도단, 1999.
- 윤동현. 『북한의 종교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1986.
- 윤이흠. 『종교가 북한 사회에 끼치는 영향』. 통일원, 1990.
- _____. “북한 종교와 종교 생활,”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4.
- _____. 『한국종교연구 1-3』. 서울: 집문당, 1986
- 윤이흠 외 공저. 『한국인의 종교』. 서울: 정음사, 1987.
- 윤재근·이상호·박상천 공저. 『북한의 문화정보, I,II』. 서울: 고려원, 1991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 _____. 편저.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나단출판사, 1989.
- 이효삼. 『통일신학과 그 성서이해 “Not Only, But Also”』.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0.
- 임성빈 엮음.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9.

鄭逢恩 著, 國土統一院 編. 『南北韓宗敎人接觸對話方案』. 서울: 국토통일원, 1973:5

정태혁. 『북한의 종교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1981.

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9.

조갑제·정호승. 『김현희의 하느님: ‘주체의 신’에서 해방되어 인간을 되찾기까지』. 서울: 고시계, 1990.

조동진. “역사 전환기에 있어서의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평화통일과 북한선교(I)』 (서울: 서부연회출판부, 1998), pp. 143-166.

최영호, “김일성 생애 초기의 기독교적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호, pp. 69-78.

최준식. 『한국종교이야기: 한국인의 마음을 빛은 巫·儒·佛·道』. 서울: 한울, 1995.

통일신학동지회 엮음. 『통일과 민족교회의 신학』. 서울: 한울, 1990.

통일원. 『남북종교교류 관련 자료집』. 서울: 통일원, 1995. 9.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간 민간부문 접촉·대화문제』. 서울: 통일원, 1995

평화외통일신학연구소 편. 『평화와 통일신학 1』. 서울: 한들출판사, 2002.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원. 『북한의 실상과 교회의 통일운동』. 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91.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1945년 이후 한국종교의 성찰과 전망』. 서울:

民族文化社, 1980

_____ 편. 『한국종교연감』. 서울: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3.

한국천주교주교회의북한선교위원회. 『한국천주교 통일사목 자료집 1945-1991』. 서울: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1992.

한국천주교통일사목연구소 편. 『가톨릭교회와 민족복음화』. 서울: 일선기획, 1990.

한화룡. 『4대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서울: IVP, 2000.

현대사회연구소 편. 『북한종교연구 1, 2』. 경기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1, 1992..

홍동근. 『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서울: 형성사, 1994.

황현조. 『성육신적 북한선교』. 서울: 도서출판영문, 1998.

2. 외국문헌

윌리엄 뉴튼 블레이. 김승태 옮김.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노이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줄리아 칭. 임찬순·최효선 옮김. 『유교와 기독교』. 서울: 서광사, 1993.

J. M. 로크만 지음. 제3세계신학연구소번역실 엮음. 『사회주의와 기독교: 체코교회의 경험』. 서울: 나눔사, 1999.

Kirk, J. Andrew. *What is Mission?: Theological Exploratio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

Lingenfelter, Sherwood. *Transforming Culture: A Challenge for Christian Mission*. Second Edi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